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방위원회 소관)

2025. 10.

대한민국정부

'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 황

(단위 : 건)

국 방 위 원 회					
계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공군
290	100	28	29	13	14
해병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병무청	방사청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12	8	20	51	8	7

□ 국방위원회 소관 : 총 290건

가. 국방부 (100건)

1. 단기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훈련 기간을 20~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2. 비상근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최소 응소기준 등을 포함한 지급 기준을 강화할 것 6
3. 급여 인상에 맞춰 병 진급 기준을 높이고 더욱 엄격한 진급심사를 진행하며, 적절한 감봉·강등 징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4. 재외무관 파견 시 현지 문화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교육 지침을 마련할 것 8
5. 해외무관 중 실적이 우수한 자원을 임기제가 아니라 정규 진급시킴으로써 보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9
6. 2023년 군내 하극상이 3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획기

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
7. 북한에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적극 제안하고, 이를 군사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8. 압구호 유출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9.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한 우리 국군의 건군 연도를 시정하여 정신 전력교재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3
10. 헬리콥터 후송 원칙을 거리 기준에서 병원의 의료수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11. 해외무관의 30%에 달하는 인원이 TOEIC 700점대 이하인 상황에서 최저 어학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12. 민군융합형 군대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13. 상병건강검진을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여 복무 중 건강 변화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14. 훈련병 대상 군기훈련 금지와 휴대전화 사용 허용 방침을 재검토할 것	16
15.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시 중국산 기자재 사용으로 인해 군의 함정과 잠수함의 작전 범위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17
16. 부사관 선발 필기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17. 국군정보사령부의 인력, 부대구조, 조직문화 등을 해체 후 편성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기밀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와 견제 체계를 확립할 것	18
18. 국방정보본부장의 과도한 지휘권과 정보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18
19. 미순직 처리자 3만 8천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9

20. 성희롱 피해 상담률은 늘어난 데 비해 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바,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할 것 20
21. 초급간부 지원율, 사관학교 지원율, 부사관 지원율 모두 하락하고 있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임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22. 관사 퇴거 관리 강화를 위하여 퇴거지연 관리비를 시세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할 것 21
23. 전국 관사를 전수조사하여 규정을 어긴 퇴거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규정을 개선하여 군인 등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2
24. 연속해서 2년 이상 체력검정 미실시 인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 23
25. 국방 R&D의 국방부 이관 추진은 방산비리로 인해 방위사업청을 신설한 취지와 그동안의 방위사업청 운영성과 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재검토할 것 24
26.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이 10%에 달하여 기획재정부의 연봉 인상률 2.5%를 초과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의 명시적인 승인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향후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4
27. 일선 부대의 중간간부 충원율이 낮은 문제에 대하여 충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5
28. 순직 1.2.3형을 통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
29. 향후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의 직업만족도 하락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해 간부의 직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6
30. 군인의 수당체계를 임무의 위험성·근무지·계급과 복무연수를 반영해 다양화하고, 자동으로 연동화해서 군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26

31. 가족수당의 경우,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수당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27
32. 군의 마음건강서비스에 대한 군기밀 유출 및 비리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자와 관련 문서 전체를 포함한 보고서를 국방부 차원에서 제출할 것 28
33. 이명과 난청 피해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절차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하며, 엄격한 보상기준을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마련할 것 28
34.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가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이나, 북한 외 국가와의 전쟁 상황에서는 한미 간 이해관계가 일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경우 전시작전권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도록 추진할 것 29
35.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인원을 사이버 업무 외의 일반행정이나 기타 업무에 배치할 하는 것은 학교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능력 활용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고려해 해당 인원들을 사이버 분야에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29
36.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이므로 타 기관과 비교하여 인력 보충 방안을 마련할 것 30
37. 성비위 사건으로 분리 조치 된 인원 중 최초에 행위자로 지목되었으나 비위행위가 없다고 무혐의로 인정된 군인들은 조사기간 만큼의 필수 보직을 이수하고 인사관리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0
38. 3사관학교의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과목 중 필요한 과목은 다시 전생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1
39.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제대군인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가 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31
40. 군에서 지원되는 이사화물비의 경우 지원비용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최초 임용(관) 및 5년 미만 전역자에 대한 단독 이사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32
41.	ROTC를 제대하고 나오는 초급 장교는 28개월을 복무하는데 일반 병이 18개월을 근무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초급장교들의 수혈이 어려우므로 복무기간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32
42.	장병들이 채무로 인해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3
43.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국방부, 각 군 차원에서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경제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34
44.	한국국방연구원(KIDA) 장기근속 연구인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헌신과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35
45.	민간군사기업 제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정, 제도 도입까지 국방부 주도 범정부 TF 구성방안을 협의할 것	36
46.	군의 ‘콜드체인 감시라벨’ 확대 시범사업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7
47.	장병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원적외선 난방 기술의 확대 도입을 추진할 것	37
48.	시설공사 사업 과정에서 감독관과 특정 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근무자의 청렴 교육을 강화할 것	38
49.	군인의 정년도 사회적 추세에 맞춰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 에서 관련하여 직업군인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9
50.	특수병과의 경우 최저복무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안을 제시할 것	39
51.	의무후송대대와 같이 가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에게도 초과근무시간 확대적용을 추진할 것	40
52.	군 급식 공급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량안보를 위해 향후 수의	

계약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40
5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과 별개로 이미 군에서 장기 자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장병들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41
54.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41
55.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 차원의 홍보활동 및 학칙개정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것	42
56. 경찰대학 출신 간부가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처럼 사관학교 장교에 대한 환수제도를 마련할 것 ...	42
57.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들의 이탈방지 및 우수교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방대 교수에 준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3
58. 군 마트에 입점하는 담배 종류에 대한 심의과정 및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외국계 담배 및 궤련형 전자담배를 입찰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3
59. 국군춘천병원 개편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하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잘못하여 원청업체에 지급한 하도급 업체 공사비 등은 국방부가 원청업체에 반환 청구하고,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는 조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44
60. 전쟁기념관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5
61. 사이버사령부의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무원이 맡고 있는 부사령관 직위를 민간 직위로 전환하거나 감찰실장을 민간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5
62. 국군정보사령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감사 및 감찰을 담당하는 직위를 민간 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6
63. 월남전 참전자 중 전투군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46

64. 기초체력 위주의 단순 체력검정을 넘어서 실제 전투 임무 수행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검정기준을 마련할 것 47
65. 진중문고 선정과정의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8
66. CCTV 등 장비도입 시 국산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개선할 것 ... 49
67. 유해발굴사업 등 야외 작업 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등 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50
68. 군대 자살예방 전담 조직의 신설과 자살예방 전담 인력 보강 및
총체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51
69. 사이버범죄, 마약, 딥페이크 등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종 범죄에 대
응을 위한 TF를 만들어 국방부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 할 것 52
70. 진급 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의 장기적 활용을 위해 '소수획득, 장기
활용' 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54
71. 국군병력의 감소 추세로 인한 현실적인 차선택으로서 여성들의 자원입
대를 허용해 여군 비율을 높이는 여성지원병제 방안을 검토할 것 ... 54
72. 장기복무 희망자에 한해 보수교육을 통해 타 병과로의 전환도 가능하
게 제도를 설계해 이 인원들을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5
73.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담당하기에 각 군
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할 것 55
74. 군 내부 교육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의무 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 낮은 이수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6
75. 이번 북한의 불법 파병을 계기로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
(NATO BICES)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 56
76. 사이버작전 역량강화비 신설, 최초 임관계급 상향, 진급 최저복무
기간 특례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존 사이버작전 인원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6
77. 해군과 공군, 해병대 출신 예비역의 경우 군 경력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직접 국방부와 각군 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국방부의

'국방 증명서 통합 발급체계'는 아직 정부24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58
78. 장병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8
79. 군인과 군무원의 대민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59
80. 개인화기 사격과 체력단련에 대하여는 전역 시까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59
81. 군 내부에서 발생한 대형 보안사고를 고려할 때 외부보다는 군 내부 의 보안체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	60
82. 급식비 인상에도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어 국방부는 앞으로 급식비 인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할 것	61
83. 반복적인 성폭력에 노출된 공군 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것	62
84. 국방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응태세 '즉강끝'을 새긴 골프공을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부적절한 만큼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63
85. 군 간부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 대책을 마련 할 것	64
86. 국방혁신 4.0 관련 개념과 교리 등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전에 대비하도록 할 것	65
87. 정신전력교재에는 북한의 행태가 2022년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최신화하여 교육할 것	66
88. 특전사 훈련시설 통폐합을 통해 폐쇄되는 시설의 유희지 매각을 검토하기 바람	67
89.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계룡대 주전력과 예비전력 공급 주체 분리를 조속히 추진할 것	67
90.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의 높은 라돈 수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8

91.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생물 테러에 대비하여 국내산 탄저백신 도입을 검토할 것 68
92. 북한의 소음방송에 따른 강화도 일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을 검토할 것 69
93. 합동참모의장은 해안경계 임무전환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임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뤄왔던 경계 임무전환을 추진할 것 70
94. 북한의 탄도미사일 4.5t 신형 고위력 미사일 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 70
95. 외국의 민간 위성을 통한 지도서비스에 우리 중요한 안보시설의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 71
96. 국방정보본부의 핵심 현용 사령부는 합참의장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갈등없이 우리 정보역량이 재구축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72
97. 미군의 비통제형 합참의장제와 유사하게 현 합동참모본부가 군 통수권자의 군령권을 보좌하고, 새롭게 합동사령부를 설치해 지휘를 전담하게 하는 개편안을 적극 검토할 것 73
98. GP검증 문건('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비밀 해제 전 구체적인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군사기밀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 73
99. '자유' 등 대대급 보급 정기간행물 전반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여부, 가짜뉴스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정할 것 74
100. 중견간부 이탈방지를 위한 전세 대부와 공공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75

나. 합동참모본부 (28건)

1. 북한 국방상으로 임명된 노광철과 총참모부 부장으로 임명된 이영길은 전략가로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전략, 작전계획 및 상황이 변할 것이므로 잘 주시할 것 78

2. 북측의 대남통지문 통보시 유엔사 통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통보와
합참의장의 보고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79
3. 북한의 의도된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고 적의 도발에는 반드시 3축
체계를 가용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제를 통해 대북억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 80
4. 미국 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전쟁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제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 81
5.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한 무력화 방안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1
6.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승인절차가 준수되도록
할 것 82
7. 대북전단과 관련하여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에서 국토부, 지자체하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여 대북전단 문제를 통제하고 협의할 것 ... 83
8. 북한이 러시아제 수송기를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 중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운영능력 및 우리에의 위협 등을 파악할 것 ... 84
9. '23년 10월경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하여 귀순 경로가 근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85
10. 해도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북한이 침투 작전 시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취약점을 대비하고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86
11. 북한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도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 합참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할 것 86
12. 프리덤 예지 훈련에 대한 사후검토 회의를 합참의장이 직접 주관
할 것 87
13. GOP경계작전부대의 고정식 운영과 관련하여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 88
14. 경계작전 개념 변경시 유엔사령부(UNC)와 협조할 것이 많으므로
상설군사위원회(PMC) 등을 통해서 잘 정리할 것 89

15. AI를 전군 모든 시스템과 지휘체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 문제, 할루시네이션 문제 등을 고려할 것 90
16. 대테러 기관단총 전력화 부대와 관련하여 육군특전사 707특임단과 해군 UDT의 제출자료가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문서위조 등 조사가 필요하고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사업담당자의 전역 후 납품 업체 취업, 특전사 실무자 전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검토할 것 91
17. 군부대 민간 드론의 침입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2
18. 합참의 육사 비율 조정 및 주요 보직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93
19. 전략사령부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 국군조직법 개정, 예산 배정 등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할 것 93
20. 댓글 요원의 진급에 대한 실상 파악,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4
21. 직할부대 방문 및 점검 등 부대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 95
22. 인태 지역 수송로에 대한 기지화 또는 임차에 대한 연구를 추진 할 것 95
23. 합동참모의장을 미국과 같이 비통제형으로 군령을 보좌·자문하는 기구로 만들고, 합동군사령부가 전반적으로 전·평시를 지휘하며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96
24. 국내외 반입반출 물자에 대한 통관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침서에 반영할 것 97
25. 향만단(통관과)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할 것 97
26. 피아식별 방안으로 피아식별띠 대신 접착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98
27.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각군의 보안성과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9

28.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대한 위협 평가와 사이버작전사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00

다. 육군본부 (29건)

1. 초급간부 지원율이 저하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 104
2.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초급간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4
3. 경계작전을 민간 군사기업(PMC)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104
4. 아미타이거 4.0 통합기획단 출시는 2019년 1월 1일인데 육군 정책 자료에는 2022년도에 출범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105
5. 군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할 것 105
6. 학군 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사관생도에 대한 지원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106
7. 군인을 위한 밀리터리 타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형 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07
8. 화생방 보호의의 불량률이 56%에 달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하자 물자를 조치할 것 107
9. 제2논산훈련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미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08
10. 과학화 경계작전 고성능카메라 217대 중 75대에 문제가 발생한 바,무상 보수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할 것 108
11. 박격포 포탄을 활용한 드론 부대 구성을 고려할 것 109
12. 헬리콥터 도입 예산 대신 드론에 대한 첨단장비에 활용하는 방안 에대하여 검토할 것 109

13.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단일 사관학교로 만드는 방안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 110
14. 학군사관과 학사장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 110
15. 탄약창을 조속히 지하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1
16. 보병 위주의 인재 양성이 아닌 미래전에 부합하는 포병, 항공, 공병 등의 인재 양성을 할 것 111
17.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CCTV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CCTV의 보안 점검을 매년 철저히 진행할 것 112
18. 육군 간부모집 앱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모바일로는 지원서 작성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13
19. 포병대대 자체적인 K9포신 교체훈련 및 관리 훈련 정기화에 예비포신 여유분 확보 등 철저한 전시준비태세 방안을 마련할 것 114
20. 32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입대 후 심리상태 평가와관리방법을 개선할 것 114
21. 파주에 위치한 제1보병사단에 대해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인북부수협에서 납품하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5
22.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작전 세트를 조기에 보급할 것 115
23. 경찰청이 계약을 취소한 테이저건 제품을 군에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바,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 116
24. 탄피회수 완화 시범사업에 대해 전 부대로 확대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6
25. 특전사에 미국산 칼을 복제한 중국산 모조품 칼을 보급한 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17
26. 광주평동 군 훈련장은 국가적 낭비 초래·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지역

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폐쇄를 검토할 것	117
27. 마일즈 사업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한 수익을 취한 업체에 대해 그 이익을 회수할 것	118
28. 2023년 8월 코브라 헬리콥터의 회전날개가 분리된 사건의 조속한 사고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할 것	118
29. 수통 초도보급품 지급을 위한 27년~31년 중기 계획 및 국방부 피복 정책실무회의의 결과를 보고할 것	119

라. 해군본부 (13건)

1. 해군은 고가의 군수품, 총기·탄약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분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군수품 관리 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22
2. 대함미사일의 미발사 문제 및 명중률 저조 문제에 대해 실제 훈련 시 확인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123
3. SM-3 도입에 있어 우리군에 실질적 전력증강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한 문제들, 가격, 수량과 성능, 전력화 시기, SM-2의 실패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해야 할 것	124
4. 해군진해호텔을 비롯한 위탁 관리 중인 모든 해군호텔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것	125
5.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해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해양영역 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통제할 것	126
6. 수입 함정과 항공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인력 확충 및 MRO(Maintenance·Repair·Overhaul)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127
7. 입항 후에도 육상 휴식 공간이 없어 함정에 머물러야 하는 함정 근무자를 위해 육상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8

8. 진해는 협소한 수로에 많은 함정이 있어 적의 주요 타격 목표가 될 수 있고, 운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를 둔 취지를 살려 부산 해군기지의 활용성을 높일 것 .. 129
9.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가 도입 한 달만에 고장이 나고, 초기 계획과 다르게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서 사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해군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130
10. 해양 방사능 측정에 있어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등 타 기관과 교차검증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 131
11. 해군 병사에게도 육상 근무 시 병 기본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132
12. 군무원 인력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군무원 주거 지원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133
13. 함정근무와 같은 고위험 직무에 대해 수당 인상을 포함한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134

마. 공군본부 (14건)

1. 고고도·중고도 정찰무인기의 중요성과 무인기 조종사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항공 수당의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조종사 충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 138
2. KF-21 전투기 Block-III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39
3. 2030년까지 확보될 위성 전력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 및 레이더우주감시 전력의 신속한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39
4. 우주항공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주영역에 대한 인식 능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140

5. 공군은 군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되지 않은 배상금이 있다면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것 141
6.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을 통해 민간항공사 조종사와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할 것 142
7. 국가가 양성한 전투기 조종사가 민간항공사에 취업할 경우, 양성비용의 일정부분을 민간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것 143
8. 공군 예비역 정책간담회에 초급간부가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골프 친목 행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3
9. 블랙이글스 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 영향에 대해 공군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책이 필요하며, 발암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스모크 개발을 검토할 것 144
10.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공군이 최선을 다할 것 145
11. 공군의 각종 전력 증강 사업에 있어 예산의 한계가 있는바, 공군은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146
12. 공군의 무인항공기 전력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인상을 신속히 추진할 것 146
13. CCT선발횟수를 늘려서 인원 충원속도를 높이고, 합당한 수당 금액을 지급하여 이탈 인원이 감소하도록 노력할 것 147
14. 사용 빈도가 지극히 낮은 전시 비상활주로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 148

바. 해병대사령부 (12건)

1. 군 가산복무지원금 환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52
2. 육군에서 진행 중인 AI기반 경계작전태세 구축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 하여 서북도서 경계작전태세 구축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것 .. 152
3. 김포반도에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153
4. 민간인의 재산권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교동도 지역의 민간인 이북 통제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154
5. 서북도서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일반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에 비해 부족하므로 수당 인상을 추진할 것 155
6. 해병대 1사단 장병 순직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병대는 작전, 교육, 부대 관리에 힘쓸 것 156
7. 舊 해병대사령부 본관을 해병대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8
8. 해병대 장병 복지를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보할 것 159
9. 적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도입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 160
10. 전·평시 구분없이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중형 표준차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나 국방부에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것 161
11. 장병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해병대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병대 안전단의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162
- 12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2)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할 것 163

사. 육군 제2작전사령부(8건)

1. 공공기관의 대(對)드론체계 구축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우선 순위에 밀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166

2. CCTV 통합관제센터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간 영상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6개소의 구축 지연을 조치할 것 167
3.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제2작전사령부 차원에서 행정 소요 감소, 감시장비 적시교체 등 해안경계부대의 피로를 경감시키고 전투력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할 것 168
4. 용사 진급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사고율을 줄이고 군에 근무하는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69
5. 수명 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를 최대한 빠르게 교체할 것 170
6. 외출·외박의 제한 규정을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 해군, 공군 등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 171
7. 현재 제2작전사령부 해안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육군 경비정 16척 모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했으므로, 육군 경비정 노후화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72
8. 제2작전사령부는 제2작전사령부로 지휘체계가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항명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를 요청할 것 173

아. 병무청 (20건)

1. 정신질환 관련 군복무 부적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76
2. 장기대기 사유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처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7
3.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시설, 혜택 사항 등을 재확인 후 지원 제도를 정비할 것 178
4.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자의 병역 면탈 의혹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9

5.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이탈, 결직 등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80
6. 저출생 등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 수급 문제 해결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181
7. 사회복지요원의 마약범죄, 성범죄 등 일반범죄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181
8.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국민 공감대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한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82
9. 사이버상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및 관련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83
10.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군내 마약류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84
11. 탈북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우리 사회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5
12.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외국인 입대 관련 법·제도를 운용·도입하는 만큼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할 것 186
13. 다문화가정 병사에 대한 입대 전 맞춤형 상담·사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 복무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6
14. 지방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결원 존재 시, 수시로 본인 의사를 파악하여 근무시간 확대를 시행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2인 1조 방식의 인사 배치가 아닌 1인 1부서 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187
15. 군입대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군입대 가산점을 줄여 입대 준비를 위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188
16.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90

17. 국군 상비병력과 부사관의 전력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MAVNI'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할 것 ... 191
18. 사회복지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중 특히 저소득층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1
19. 병역판정검사 오류근절을 위해 재확인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92
20. 대구경북청의 병역판정검사 과실과 사건 은폐 관련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93

자. 방위사업청 (51건)

1. 방산업체가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협약사업의 규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할 것 196
2.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사업 감리계약 체결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196
3. 방위사업청 조직이 유인체계와 무인체계 사업조직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무인복합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사업조직 간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7
4.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장과 기조실장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방위사업청 자체감사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98
5.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기대효과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199
6. KF-21 부품별 및 완제품 국산화율에 관해 현재 달성된 국산화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199
7. 방산업체는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박사급 등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용 지불 방안을 검토할 것 200

8. 선행연구 요청항목 대부분이 비밀로 분류된 소요결정 문서로서 요청자와 작성자 간 보안 위배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01
9. 방산업체 제출자료에 대한 환류체계가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할 수 밖에 없음. 선행연구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방산업체와 공유하면 방산업체의 R&D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음. 선행연구 시 기업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환류 체계를 검토할 것 202
10.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을 우주 항공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203
11. 국가우주개발 사업절차 적용을 위해 다부처 사업일 경우는 방위사업법, 군 단독사업일 경우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204
12. AI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국가 차원의 윤리기준을 정립했는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윤리 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국방부 윤리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5
13. 리오셀계 탄소섬유 국산화 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06
14. 무기통계를 국회 등에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6
15. 피아식별장치(IFF-Mode5)의 방산물자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207
16. 심의 보류된 방산물자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07
17. 헬기 비행 정보 저장장치 개선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것 208
18. 무기체계를 기대 수명주기만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품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 ... 208

19. 현대전에서 대형 공격헬기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재검토할 것 209
20. 무기체계 업체선정 시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함.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 향상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09
21. 2011년~2015년 사이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약 80억달러였으나 2016년~2020년에는 약 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10
22.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따라 시제기를 포함한 모든 가치 이전은 분담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분담비율 조정결과를 관련 문서 및 합의서에 반영할 것 210
23. KF-21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당초 분담금 1조 6천억원 중 6천억원만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감액된 1조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210
24.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의 기종결정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할 것 211
25.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소형 정찰 자폭무인기를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과 협력하여 전방부대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11
26. 국산 엔진은 국방규격 충족으로 2차 양산부터 K2전차에 적용되고 있지만, 국산 변속기는 국방규격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12
27. 군수용은 WTO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핵심부품인 FC(flight controller)는 국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213
28. K13 기관단총 멜빵 고리, 소음기, 방열 덮개 등 부속품 문제 외

- 총기와 소음기 결합 제한과 총기 내 탄약 폭발사고는 심각한 문제
이므로 신속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214
29. 신형 화생방보호의 사업지연 또는 중단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215
30.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사업 시험평가 단계에서 포복/위장
상태로 접근하거나 철책 전방에서 이상 행위를 감지하는 사전감지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16
31.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방탄복에 대응하고 개인화기까지 K- 방산 수
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6.8mm 소총 개발을 노력할 것 ... 217
32. 운용부대 실사격에서 탄약이 약실 내부에서 폭발했던 K13기관단총
의 결합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 217
33. 국방R&D 평가 구조를 도전적 과제 중심으로 하여 실패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지 않는 등 R&D를 민간에 널리 확산시키는 방안을
할 것 218
34. 피복 관련 원단 바뀌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13곳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
할 것 218
35. FMS로 도입되는 사업에서 가격대가 상승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협상
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219
36.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시험평가 도중 침수되어 연구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사업을 빠르게 재개하여 해병대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 219
37. 잠수함구조함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관도급 분류시 장비의 특성 및
체계통합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 220
38. 해안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A방산업체가 개발했는데 관세청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음. 이는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를 철저히

-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220
39.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운영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후 납품까지 해당 품목 보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21
40.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를 통해 업체가 받는 혜택이 경쟁 입찰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 추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도 시행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2
41. 방산수출 시 중소기업 역할축소, 시험평가 등 비용부담, GVC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K-방산 성장 지속을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22
42. 미국의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로 인해 K-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23
43. 최근 5년간 절충교역 미이행으로 현금 몰수 후 해소된 금액(소멸된 가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223
44.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마련하여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이 다양한 절충교역 상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24
45.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의 절충교역 적극 추진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224
46. 방산 수출허가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기술 난이도도 높아졌으므로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보강방안을 검토할 것 225
47. 방산 관련 해킹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방산기술보호에 취약하므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26
48. 방산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해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27
49. 안티템퍼링(anti-tamperin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수출된 국내 무기체계를 외국이 역설계하여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	227
50. 수출형 FA-50 국산 레이다 체계 적합성 검증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28
51.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을 심사할 경우, 우리 군의 포탄 비축물량, 외교관계 등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것	228

차. 국방과학연구소(8건)

1.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안성 등으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의 연구개발에 치중할 것	232
2. 국방과학연구소「국방AI센터」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AI 데이터 보안정책과 체계를 구축할 것	232
3.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이 학회장을 겸직하는 학회에 많은 직원이 참석하고 1,6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보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	233
4. 2022년부터 직원상여금 지급 사례가 없는데, 우수업무 성과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33
5.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에게도 보국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233
6.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34
7. 수출형 FA-50 국산레이다 체계 적합성 검증 과제와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용 무인전투기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다 기술개발 과제간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235
8.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5

카. 국방기술품질원(5건)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2건)

1) 국방기술품질원 (5건)

1. 방산기술보호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38
2.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용역에 낙찰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38
3.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를 제대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39
4. 국방기술품질원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40
5.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의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야전부대에 대한 정기적 사후운영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 241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건)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선행연구, 핵심기술 기획 및 관리, 부품국산화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44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그 기능의 특성상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이 요구되므로 계약직의 비중을 줄이고 정규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것 245

국방위원회 소관

가. 국방부(100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훈련 기간을 20~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단기 상비예비군 소집 훈련 기준일은 15일이나, '25년부터 가용 훈련비 예산과 본인 동의하에 최대한 30일까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에 동원사단 내 2개 대대를 상비예비군만으로 편성하는 완전상비 예비군부대를 시범 운용할 예정이며, 완전상비 예비군부대의 단기 상비예비군은 30일 훈련을 기본으로 하여 30일 훈련모델을 정립할 계획임 ○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전력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 '28년 이후에는 단기 상비예비군의 훈련 기간을 30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비상근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최소 응소기준 등을 포함한 지급기준을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상비예비군 훈련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 미반영됨 • '16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었고, 평일과 휴일 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단기 상비예비군의 평일 훈련비를 인상 요구 중임 - 단기 평일 훈련비 10만원 → 15만원 ※ 단기 휴일(15만원), 장기 평·휴일(15만원)은 동결 나. 향후 추진계획 ○ 훈련비 현실화 및 훈련 응소율 향상을 위한 훈련비 인상 예산 획득 노력을 지속하겠음 • 보통인부 노임단가 등 사회적 임금 수준을 고려한 훈련비 인상 • 훈련비 총액 범위 내에서 최소 응소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급여 인상에 맞춰 병 진급 기준을 높이고 더욱 엄격한 진급 심사를 진행하며, 적절한 감봉·강등 징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병 인사 관련 △ 진급심사 시행, △진급심사 기준을 법령에 반영하였으며, 군별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 병 진급심사 시행(국방부령제1140호, '24. 2. 29.) • 병 진급평가 기준 구체화(훈령제2934호, '24. 6. 7.) • 병 진급심사 절차 개선(훈령제3042호, '25. 4. 30.) ※ 단, 시행 간 육군 진급지연기간 한정 관련 규정 삭제에 관한 국민청원('25.5.28.) 등 민원제기로 해당 제도 시행 잠정 보류, 전면 재검토 ○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1개월) 확대 추진 중임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1개월 → 2 ~ 3개월 •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1개월 → 1 ~ 3개월 ※ 법무심사 후 공포/ 시행 예정('25. 10.) 나. 향후 추진계획 ○ 병 진급심사 관련 개선 추진(~'26년) • KIDA 국민대상 여론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 '25. 7월 현안이슈 여론조사 결과 포함 • 군별 진급심사 기준 및 개선 검토 (~'26. 3월) • 국방인사정보체계 내 「병 진급심사 시스템」 성능 개선 ○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 적용 ('25.10월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재외무관 파견 시 현지 문화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교육 지침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현지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25년 파견예정 무관 교육계획에 다음과 같이 반영됨 • 국립외교원의 주재관·무관과정 교육 확대(1→2주), 국립외교협회 교육(3주)을 반영하여 시행하였고, 무관 경험자(1:1 멘토링)와 현지 무관을 활용하여 현지 문화에 대해 이해를 강화 • 군사외교와 음식문화 관련 성신여대 협조 하 부부동반 소양 교육을 시행 • 또한, 성인지 교육은 해외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 나. 향후 추진계획 ○ 임무 종료 예정인 무관을 통해 귀국 보고 시 현지 문화 관련 교육 소요를 도출하여 '26년 교육계획에 반영 예정 ○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수정 시 현지 문화에 대한 교육 지침 반영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해외 무관 중 실적이 우수한 자원을 임기제가 아니라 정규 진급시킴으로써 보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외무관요원은 엄정한 선발결과를 거쳐 우수한 인력들을 파견하고 있음 ○ 법령상 해외무관의 임기는 3년이며, 필요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있음 ○ 임기제 진급자의 임기는 2년이나, 임기제 재보직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므로 現 제도 하에서도 우수자원은 보직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이 가능함 나. 향후 추진계획 ○ 진급 선발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무관요원 중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인원들은 진급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1. 2023년 군내 하극상이 3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병영문화혁신 분야 가. 시정·처리결과 ○ 현장의 사건·사고 예방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25. 1월) • 국방부 '군기강 확립 협의체*' 운영 강화** * 군인권개선추진단+조사본부·검찰(법무)·감사 등 ** 정기 협의체 개최 주기를 단축(반기 1회→분기 1회)하고 실무자급 수시 협의체를 월 1회 개최 • '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 시 군기사고·병영문화혁신 분야에 대한 통합솔루션* 제공 * 사전진단을 통해 문제점 확인 후 교육 지원, 제도적 개선 등 해결 지원 • 기능별/제대별 지휘관 조연 활성화 * 군사경찰 사고속보 전과 범위 개선 (장성급 부대 → 대대급 이상 부대) * 지휘관 전입 또는 요청 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계획 설명 의무화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중대장급 지휘관이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대상관 범죄 예방 표준강의안' 제작·배포('25. 4월) ○ 대상관 범죄 등 사고예방·군기강 확립 활동 추진 • '25년 사고예방·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 시달을 통해 대상관 범죄 등 주요 군기사고 분석 및 대응 방향 강조('25.1.24.) • '25년 1분기 군기강 확립 정기협의체 시 대상관 범죄 등 '24년 사건·사고 분석 및 예방대책 제시('25.2.21.) • '25년 3분기 군기강 확립 정기협의체 시 대상관 범죄 등 전반기 사건·사고 분석('25.9.25.) * 대상관 범죄, '24년 전반기 148건 대비 '25년 전반기 116건으로 △32건, 22% 감소 ○ '25년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 간 대상관 범죄 예방활동 점검('25.2월~7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군기강 확립 협의체,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 등 제도 개선사항 지속 시행

6-2. 2023년 군내 하극상이 3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군사법 정책 분야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부 및 각군 수사기관별 ‘대상관 범죄’에 대한 처벌 지침 운영 중 ○ 국방부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 • 병 징계양정기준에 복종의무위반(음해 또는 유언비어 유포로 군기 문란) 항목 신설 ○ 병·초급간부 대상으로 대상관 범죄에 대한 군법교육 강화 ○ 상관모욕죄 등 대상관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나. 향후 추진계획 ○ 대상관 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및 징계 조치 (지속 추진) ○ 장병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군법교육 실시 (지속 추진)
7. 북한에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적극 제안하고, 이를 군사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말라리아 공동방역 제안은 질병관리청과 통일부가 주관이 되는 업무로서, 필요 시 국방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 국내 말라리아 방역은 질병관리청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지자체 간 중앙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암호호 유출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보안 관련 법규 개정 완료 •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개정 : '25. 5. 27.부 - 군사보호구역 內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근거 마련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 '25. 6. 16.부 - 보안사고(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통한 장병 보안의식 강화 • 「사이버 · 보안진단의 날 행사」 시행 - 매월 행사계획 하달 시 교육내용 포함 하달 • 각급부대의 지휘관 및 부서장, 보안 통제부서에 의한 보안교육 강화 ○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강화 • 철저한 보안감사 시행 - 보안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정밀 진단 - 「보안취약 요소 및 보안대책」 관련 지시 사항 (감사 중점 포함) • 보안점검 강화 : 취약시기 / 각급부대·방첩사 합동 - 각종 훈련 및 다수인원 보직 이동 시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사기밀의 전자적 비밀관리체계(보안나라) 확대 구축 • 비밀 생산·관리·유통 등 전자적으로 관리 • 기존 종이 형태의 기밀에서 전자적 형태로 기밀 생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비밀유출 원천적 차단 ○ 보안관계법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을 통한 군사기밀 보호 강화 • 군사기밀의 불법 유출 차단을 위한 훈령 개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한 우리 국군의 건군 연도를 시정하여 정신전력교재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구한말 일제의 군대해산에 항거했던 의병정신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진 항일 독립정신을 국군의 정신적 토대로 명확히 자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반영되어 있음 (239쪽) ○ 그러나, 우리 국군의 건군 연도를 시정하는 것은 유관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74조 제2항) 과 법률 (‘국군조직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창설 나.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장병들에게 국군의 뿌리에 대해 명확히 교육할 것이며, 국군의 건군 연도는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기본교재 개편 시 반영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헬리콥터 후송 원칙을 거리 기준에서 병원의 의료수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응급환자 항공후송 판단 시 현장에서 초기 의료시설까지의 거리 외에도 후송병원 처치 능력 (진료 범위 및 장비 등) 및 상급 의료기관 전원 가능성 등을 고려요소로 추가 반영하여 의료종합상황센터 ‘응급환자 대응 매뉴얼’ 수정 완료 (’25. 6. 18. 부)
11. 해외무관의 30%에 달하는 인원이 TOEIC 700점대 이하인 상황에서 최저 어학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어학점수는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구분하고 있고, ’25년 파견무관 선발시 어학 수준이 높은 인원을 선발함 • ’25년 영어권 파견 무관 선발자는 전체 900점 이상으로 선발 완료 ○ 비영어권은 주제국 언어의 중요성을 고려 제2외국어 기준, 어학 수준이 높은 인원을 선발 • ’25년 비영어권 제2외국어 파견무관 선발자 전체 제2외국어 시험(FLEX) 700점 이상으로 선발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무관 선발 시 어학수준이 높은 인원이 선발되어 파견, 무관으로 임무수행 할 수 있도록 심의 간 반영하여 선발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민군 융합형 군대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민간 아웃소싱 전담조직 구성 • 국방 분야 민간 아웃소싱의 제도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관실 국군조직담당관 內 민간자원담당 직위 신설 (+2명, '25. 5. 20.) • 추후 제도화 수준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별도 부서화 (과 단위)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주둔지 경계 임무 민간 아웃소싱 시범사업 • '26년 예산 반영 및 시범사업 착수 ('26년~)
13. 상병건강검진을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하여 복무 중 건강 변화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상병건강검진 중 소변검사항목을 병역판정검사 수준으로 확대 적용 (1종→10종) 완료 • 각 군별 시범운영 부대 선정 및 착수 완료('25.10.2.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훈련병 대상 군기훈련 금지와 휴대전화 사용 허용 방침을 재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훈련병 대상 군기훈련 금지 재검토] ○ '24년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 후속조치로 군기훈련 표준가이드안* 마련, 각군 적용('24.7.1.부) * 군 적응도 고려 훈련병과 기간병 구분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619 604 1428 784"> <thead> <tr> <th>훈련병</th><th>기간병</th></tr> </thead> <tbody> <tr> <td> • 청소 등 봉사활동, 정신수양 방법 활용 • 체력단련 종목 제외 </td><td> • 청소 등 봉사활동, 정신수양, 체력단련 방법 활용 • 개인의 신체 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시행 </td></tr> </tbody> </table> ○ 신병교육부대 현장확인* 결과 훈련병들은 정규 훈련 종목을 통해 체력단련을 정상 실시 중이며, 가·감점 제도 등 통제대책 마련을 통해 군기 유지 중 * '25. 2월 ~ 7월 국방부 주관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 간 신병교육부대 확인 [훈련병 대상 휴대전화 사용 허용 방침 재검토] ○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24.9.1.부) •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기간병은 현 시스템(일과 후 사용)을 유지한 가운데 훈련병은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내일준비적금 신청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허용 ○ 신병교육부대 현장확인* 결과 훈련병들은 엄격한 통제下에 휴대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복무적응, 행정업무 지원 등 긍정적 효과 확인 * '25. 2월 ~ 7월 국방부 주관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통합솔루션 지도방문 간 신병교육부대 확인 나. 향후 추진계획 ○ 훈련병 대상 現 군기훈련 및 휴대전화 사용 제도 유지下, 시행 간 개선사항 지속 확인 (~'25.12월)	훈련병	기간병	• 청소 등 봉사활동, 정신수양 방법 활용 • 체력단련 종목 제외	• 청소 등 봉사활동, 정신수양, 체력단련 방법 활용 • 개인의 신체 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시행
훈련병	기간병				
• 청소 등 봉사활동, 정신수양 방법 활용 • 체력단련 종목 제외	• 청소 등 봉사활동, 정신수양, 체력단련 방법 활용 • 개인의 신체 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시 중국산 기자재 사용으로 인해 군의 함정과 잠수함의 작전 범위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간 보안 관련 조문 반영 • 제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 -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 나. 향후 추진계획 ○ 산업부와 실시계획 승인 관련 협의 시 보안성 확보 여부 확인(지속)
16. 부사관 선발 필기시험을 폐지하지 말고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부사관 선발시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부사관 임용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 ○ 부사관 모집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를 판단하고자 고등학교 성적·출결 현황을 제출하여 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 부사관 선발시 우수한 지원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여건 및 지원을 제고를 위한 개선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정보사령부의 인력, 부대구조, 조직문화 등을 해체 후 편성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기밀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강화와 견제 체계를 확립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부대(서) 명칭 노출에 따른 명칭 변경 ('24. 7. 15.) ○ 제○○○여단 해편(解編) ('24. 11. 1일부) • ○개 정보부대를 ○개 사업단 체제로 재편 •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령(5급)급 팀 해체 후 중령(4급)급 기획대 체제 통합 • 조직 차원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사업단 신편 • 보안 고려, 사업단 주둔지 조정 • 방첩보안과(2과) 신편 * '24. 11. 1일부 활동 정상 시행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정보조직 개편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
18. 국방정보본부장의 과다한 지휘권과 정보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	가. 시정 · 처리결과 ○ 지휘구조의 최적화와 중복 및 유사 조직 통합으로 효율화를 달성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부합된 부서(대) 재설계 · 전문화로 정보 능력 강화를 추진 중임 ○ 본부장 겸직 해제로 지휘구조 분리, 수집부대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기술 기반 전력화 추진 및 AI 기반 정보융합으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생산하여 지원 예정임 ○ 필요시 국방부 내국에 (가칭) 정보기획관 신편을 통해 장관 정보보고 및 정보정책업무를 보좌를 검토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 (단기) 정원 증가 없이 現 정원 활용하여 부대개편 ○ (중·장기) AI 기반 정보분석과 군사 정보체계 통합 등으로 단계적으로 효율화된 조직개편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미순직 처리자 3만 8천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미순직 처리자 3만 8천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연구주제 : △ 3만 8천명의 재조사 당위성과 재조사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예상 및 해결방안 제시, △ 3만 8천명의 재조사 방법과 이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제시, △ 재조사 기간 단축방안과 공신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연구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연구기간 : '25.9월 ~ '26.1월 (4개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성희롱 피해 상담률은 늘어난 데 비해 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바,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4년 성희롱 · 성폭력 상담접수 분석 결과 • 민간 수사기관 입건율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며, • 상담 접수 증가는 '22년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예방교육 활동, 야전부대 성고충 전문상담관 정원 확대('21년 50명 → '23년 150명) 및 채용/배치 등 장병 상담의 접촉점을 늘려나간 결과임 • 또한,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 및 사건처리절차 교육으로 장병 성인지 민감도가 높아져 개인의 불편함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 이는 군 조직문화 개선으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장병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나. 향후 추진계획 ○ 성희롱 · 성폭력 상담 접수 분석을 통한 예방대응 개선 과제 발굴 (지속 / 월 단위) ○ 성폭력 예방 야전부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의견수렴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초급간부 지원율, 사관학교 지원율, 부사관 지원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임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초급간부 지원율 및 임관율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 인상 등을 통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등을 통한 자아실현 여건 보장 등 장병들이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지원율 제고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음
22. 관사 퇴거 관리 강화를 위하여 퇴거 지연 관리비를 시세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개정하여 퇴거지연관리비 인상 완료('25. 9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인상된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기준 적용하여 퇴거 관리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 전국 관사를 전수조사하여 규정을 어긴 퇴거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규정을 개선하여 군인 등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게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군 관사 퇴거지연자 현황 조사('25. 8월)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퇴거지연자 관련 규정 개선 완료('25. 9월) • 장기 퇴거지연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가능함을 사전 통지하고, 필요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 강화 ○ 훈령 개정 사전 예고 및 퇴거지연자에 대한 관리 강조 지침 하달('25. 9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관사 퇴거지연 관리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연속해서 2년 이상 체력검정 미 실시 인원 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 • (제383조) 검정의 일시보류 : 체력검정 미 실시 대상자 명시 • (제385조) 검정 불합격자 : 검정 일시보류자 이외의 체력검정 미 실시자는 불합격 처리 명시 ○ ‘25년 군 체력검정 시행 지침 시달 (국방부 병영정책과-1549호, ‘25. 3.10.부) • 무단 미 실시자 행정처분 강화 ※ 무단 미 실시자 각종 특전 제한 및 누적 시, 징계위원회 회부 • 체력검정 결과 인사관리 반영 강화 -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각종 심의 등에 체력검정결과 반영 - 병·간부 진급, 임기제부사관·복무연장·장기 선발 등에 적극 반영 ○ 각 군별, 체력검정 무단 불참자 및 불합격자 대상 행정처분 강화 및 인사관리 시스템 적용 중 ※ 장병 인사관리 권한 :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 군 체력검정 종료 후 각 군별 체력검정 미 실시자 현황 종합 / 분석 : ‘26. 1월 ※ 각 군별 행정처분 및 인사관리 조치결과 확인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국방 R&D의 국방부 이관 추진은 방산 비리로 인해 방사청을 신설한 취지와 그동안의 방사청 운영성과 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재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사청 국방기술 R&D 국방부 이관 추진 중단 • 별도의 기능 이관 없이 현행 체계에서 국방부 R&D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재검토
26.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이 10%에 달하여 기획재정부의 연봉인상률 2.5%를 초과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명시적인 승인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쟁기념사업회장 연봉 인상분 재산정('24. 10월) • 연봉인상률 2.5%기준으로 조정, 초과분 반납 완료 * '24년 임·직원 인상률 2.5% 동일하게 적용 나.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인건비 인상률 준수 ○ 전쟁기념사업회 이사회 운영 준수 *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 일선 부대의 중간간부 충원율이 낮은 문제에 대하여 충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부 부서관 복무여건 개선 TF 구성 / 운영 : '24. 10월 ~ • 역량강화 교육기회 확대, 부서관 발전협의체 발족, 장려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과제 추진 ○ 중견간부 희망전역 증가 원인분석 KIDA 정책연구 : '24. 10월 ~ ○ 차관 주관 간부 획득 및 복무여건 개선 TF 운영방안 토의 : '25. 8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장·차관 현장 소통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정책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추진 지속
28. 순직 1·2·3형을 통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고려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군인사법」 순직제도 개선안 마련 • 순직을 '특수직무순직'과 '순직'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마련 ○ 순직제도 개정방안 허영 의원 대면설명('24.10월, 12월) •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전공사상 심사를 받고 있는 군인을 포함 (순직자 결정 후 재심사 받는 군인 제외) 하도록 「군인사법」 개정안을 수정 나. 향후 추진계획 ○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하여 「군인사법」 개정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 향후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의 직업만족도 하락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해 간부의 직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소수획득-장기활용’의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장기복무 선발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초급간부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 봉급 및 수당 등 인상을 통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며, ○ 일하는 문화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음
30. 군인의 수당체계를 임무의 위험성·근무지·계급과 복무연수를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자동으로 연동화 해서 군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현재도 군인의 수당은 계급과 복무연수, 근무지, 직무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반영하여 지급되고 있음. 수당 중 장려수당은 계급 및 복무연수에 연동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근무지의 특수성은 특수지근무수당에, 직무의 난이도와 위험성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수당에 반영되고 있음 ○ 단, 현재 수당간 병급이 제한되어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연동하기 위해서는 병급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수행임무, 무기체계의 전력화 및 도태 등 작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 수당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1. 가족수당의 경우,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수당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취학 · 요양 또는 주거 · 근무 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 · 비속의 경우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주소(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소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 ·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결과, 주소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 · 비속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른 형제들과의 중복지급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군인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족수당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입장으로 조치가 제한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2. 군의 마음건강 서비스에 대한 군 기밀 유출 및 비리 의혹이 있으므로, 관련자와 관련 문서 전체를 포함한 보고서를 국방부 차원에서 제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의원실 대면설명 시 제출 완료 : '24. 11. 11. • '마음건강 앱' 관련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정보 동의 현황, 사용예산 등 ○ '마음건강 앱' 서비스 종료 : '24. 12. 31. 나. 향후 추진계획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예정 *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33. 이명과 난청 피해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절차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엄격한 보상 기준을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가유공자예우법」상 국가보훈부가 국방부에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심사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있음 ○ 기존 수기(CD)로 전공상 심사 ·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송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육군-국가보훈부 간 전산시스템을 연동하여 자료를 송부하도록 협의 ('25. 7월) • 시스템 연동을 위한 합의서 체결 준비 중 ('25년 중) ○ 국가보훈부의 '이명·난청 실태 파악 및 보상 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협조 나. 향후 추진계획 ○ 해·공군과도 근무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확대 ('26년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4.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가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이나, 북한外 국가와의 전쟁 상황에서는 한미간 이해관계가 일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경우 전시작전권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도록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연합군사령관이 SCM 및 MC를 통해 韓美양국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지휘기구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작전통제하는 제한된 권한임 ○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영토, 영공, 영해)’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제3국’을 대상으로 해석
35.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인원을 사이버 업무외의 일반행정이나 기타 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학교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능력 활용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고려해 해당 인원들을 사이버 분야에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사이버 작전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해 사이버 기술전문직위 선정 • 1차 / 2차 선정 : '24. 6월 / '25. 4월 ○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을 사이버기술전문직위로 우선 배치 • 1차 / 2차 배치 : '24. 7월 / '25. 1월 ※ ADD 근무 사이버전문사관 재배치 (→ 사이버사) : 1차, '24. 11월 / 2차, '25. 3월 • '25년 신규임관자 사이버기술전문직위 보직('25.7.31.) ○ 「국방 인사관리 훈령」 개정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사이버전문사관을 사이버 분야(기술전문직위 등)에 배치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훈령 개정 : '25. 9. 8. 나. 향후 추진계획 ○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 대상 보직 관리 • 개정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의거,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 대상 보직 : '25. 10. 31.(금)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6.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이므로, 타 기관과 비교하여 인력 보충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도 공공기관 정기증원 결과, 일부 증원 • KIDA 정원 504→507명 (총 3명) - 사업타당성조사 인력 2명, 지원 인력 1명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도 정기 공공기관인력증원 증원 (55명) 을 기재부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25. 8.29. 통보) ○ 수시 채용 확대를 통해 결원을 최소화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적정 인력 충원을 노력하겠음
37. 성비위 사건으로 분리 조치된 인원 중 최초에 행위자로 지목되었으나 비위 행위가 없다고 무혐의로 인정된 군인들은 조사 기간 만큼의 필수보직을 이수하고 인사관리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일시적 분리를 위해 파견된 군인의 비위행위가 보직해임 사유가 아닌 경우,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인사 상 불이익 없이 재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5. 9월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 完 • 제171조 (전속 및 재보직) 제3항 제12호 : 제40조의2 (일시적 분리를 위한 파견) 에 따라 파견중 원활한 전투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향후 추진계획 ○ 각 군 경력 및 진급평가 상 불이익한 처분이 받지 않도록 지속 관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8. 3사관학교의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과목 중 필요한 과목은 다시 소생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14년 유사과목 통폐합 및 조정을 위해 「북한학」을 군사학 필수 → 선택과목으로 전환 ○ '23년 사관생도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학」 군사학 선택 → 필수과목으로 조정 완료 ※ 「전쟁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속 운영 ○ '24년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군사학 필수과목 추가 확대 및 강화 완료 • 「사이버전」 군사학 선택 → 필수과목으로 조정 • 「전자기전」, 「인공지능 입문」 신설(군사학 필수) 나. 향후 추진계획 ○ 「전쟁사, 「북한학」 등 주요 군사학 과목 필수과목으로 지속 교육
39. 국가보훈부가 담당하는 제대 군인의 관리 업무를 국방부가 맡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회 대면설명 (임종득 의원) : '25. 2. 24. ※ 내용 : 국방부-보훈부 전직·취업 지원 현황 등 ○ 국방부가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및 각군 등 의견 수렴 • 현재 국방부와 보훈부가 각각의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제한적임 * 제대군인지원 법적근거 : 국방부(군인사법, 국방전직교육원법),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우선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각 부처가 전략적 협업 등을 통해 전직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양 부처를 넘어 독립된 기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향후 추진계획 ○ 전역 (예정) 장병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플랫폼, 예산 등) ○ 장기적으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넘어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등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0. 군에서 지원되는 이사 화물비의 경우 지원 비용이 부족할 뿐아니라, 최초 임용(관) 및 5년미만 전역자에 대한 단독이사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이를 개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이사화물 현실화 및 초급간부 임용(관) 및 5년미만 전역자 단독이사비 지급을 위한 예산을 '26년 수송활동 예산(정부안)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사다리차 일부 예산만 반영(29억) • '26년 예산편성 시 요구액 : 초급간부 84억, 사다리차 75억, 물가상승분 42억 나. 향후 추진계획 ○ '초혁신경제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국회 및 기재부와 지속적 협조 ○ '26년 예산편성에 맞추어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개정 진행
41. ROTC를 제대하고 나오는 초급 장교는 28개월을 복무하는데 일반 병이 18개월을 근무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초급 장교들의 수혈이 어려우므로, 복무기간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복무기간은 양성과정 목적, 인력수급,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인구급감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초급간부의 추가선발 소요를 발생시킴 나. 향후 추진계획 ○ 우수한 인력을 소수 획득하여 숙련된 간부로 장기 활용하는 인력 구조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 장병들이 채무로 인해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예방 교육) 전 간부 대상 경제교육 의무 시행 • '25년부터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지정하여 양성/보수교육 시 전 간부 대상 의무교육 시행 중 • 부대별 신청하는 경우 별도 방문교육(군 가족 포함)도 시행 중 ○ (경제적 지원) 채무자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 군인공제회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①생활보조 대출 지원, ②채무설계컨설팅, ③개인회생 비용지원) 적극 홍보/운영 ※ 대출금리 추가 인하('24.12월) : 5.9% → 4.9%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경감 지원 프로그램 (①채무감면, ②상환유예, ③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지원) 적극 홍보/운영 ※ 군 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 나. 향후 추진계획 ○ 제도개선 소요 지속 발굴 / 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3. 병사 월급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국방부, 각군 차원에서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 대상 내실 있는 경제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경제금융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지원(기재부소관) ※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에 국.기조실장 포함 • 국방부 자체 법령·규정 마련 - 국방부 직제시행 규칙 개정 추진 - 국방경제금융교육 훈령 제정 추진 • 금감원과 업무 협약 체결 추진(실장급) ○ 국방경제금융교육 추진 역량 확보 • 국방경제금융교육 협의체 운영 - 경제교육 : KDI, 경교협, 지역경제교육센터 - 금융교육 :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예보 등 • 교육을 위한 플랫폼 확대 - 원스톱장병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 방문신청 활성화 • 경제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통제과목 지정 - 교육훈련정책과와 협업하여 25년부터 양성, 보수교육간 1시간 이상 교육토록 통제과목 지정 나. 향후 추진계획 ○ 제도적 기반 마련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지원 : 정부조직 개편 이후 • 국방부 직제시행규칙 개정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이후 • 국방부 자체 훈령 제정 : ~ '26년 초 ○ 총 7개 교육기관*에서 예하부대 장병 및 각 군 훈련기관 교육생 대상으로 30만명 교육 목표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 금융감독원, 예금 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군인공제회 ** 경교협 총 50명, 회원사 포함 200명 강사진 구축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4. 한국국방연구원 (KIDA) 장기근속 연구 인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헌신과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라 재직기간 33년 이상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 인력에게 보국훈장 수여가 제한됨 ○ 이에 KIDA 연구인력에게 2025년 ‘국군의 날’ 포상 추가 반영 검토 중 ※ '24년도 KIDA 포상현황 - 훈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1(국군의 날) - 국방부장관표창 5 (기관창설) 나. 향후 추진계획 ○ 포상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5. 민간 군사기업 제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정, 제도 도입까지 국방부 주도 범정부 TF구성 방안을 협의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민간 아웃소싱 전담조직 • 국방분야 민간 아웃소싱의 제도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관실 국군조직담당관 內 민간자원담당 직위 신설 (+2명, '25. 5. 20.) • 현재 국방분야 민간 아웃소싱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위하여 법령(안)을 마련 중으로, 작성한 법령(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 - 법률(안)은 작성 완료 ('24년), 현재 하위법령(안) 작성 中 (~'25년) •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이견 발생 시 범정부 TF 구성 등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분야 민간 아웃소싱 관련 법령(안) 작성 • '25년까지 하위법령(안) 마련 후 '26년부터 입법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6. 군의 ‘콜드체인 감시라벨’ 확대 시범사업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5년 예산안 국회(예결위) 심의* 시 관련 예산 반영을 통해 군단급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 제한됨 * 예결위 증액(6.5억) 안건 상정 나.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예산 반영(6.5억) 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음
47. 장병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원적외선 난방 기술의 확대 도입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군 난방시설(원적외선 난방 등) 설치 소요 조사(~ ’25. 7월) ○ 난방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20.8억원) 각 군 배정(’25.7.24.) 나. 향후 추진계획 ○ 각 군, 난방시설 설치 진행 중으로 동절기 전 설치 완료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8. 시설공사 사업 과정에서 감독관과 특정 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근무자의 청렴 교육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청렴교육 추진 중 (지속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중 • 시설본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연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평가지침에 ‘청렴교육 수료 여부(전 간부)’를 반영하여 점검 및 평가 중에 있음 • 연간 시설본부 및 시설단(6개) 대상 ‘청렴교육 전문강사 초빙강사료’ 배정 및 집행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 초빙강연 진행 중에 있음 • 대면교육 참석 제한자를 위해 인터넷 강의 수강 안내(월 단위, 수시) 병행 - 모바일(휴대폰) 이용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수료 후 기록변경 강조함 •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담당, 초급간부 전입시(군무원 포함) 등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함 나. 향후 추진계획 ○ 소속 간부全体人员 교육 수료 및 청렴교육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9. 군인의 정년도 사회적 추세에 맞춰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관련하여 직업군인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정년 연장은 국가재정, 인력운영,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24년부터 소령 정년 연장을 시행 중이며, ○ 하위계급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년을 검토해 나가겠음
50. 특수병과의 경우 최저복무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안을 제시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복무기간은 양성과정 목적, 인력수급,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병과에 대한 복무기간 차등 적용은 간부 획득 소요 증가, 다른 임관경로와의 형평성 문제 등 발생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우수한 인력을 소수 획득하여 숙련된 간부로 장기 활용하는 인력구조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1. 의무후송대대와 같이 가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들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에게도 초과근무시간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확대(57시간→100시간) 직위는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통상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하는 직위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 의무후송대대는 현재 4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월 평균 근무시간이 180시간 정도로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확대 직위로 검토하기에는 요건이 부족함 ○ 다만, 응급후송헬기에 탑승하여 응급의료행위를 책임지는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항공수당 지급등급 상향조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52. 군 급식 공급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량 안보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율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조실 주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상황점검 회의’를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 70% 유예 (’22. 12.) ※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의 농·수·축산가 지원·보호대책 마련 등 자구책 강구 조건 유예 ○ 유예 결정 이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25년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70% 유지 나. 향후 추진계획 ○ 식자재 시장 여건과 농·수·축산가 상황, 관계부처의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수의계약 비율 70% 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3.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과 별개로 이미 군에서 장기지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장병을 위해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가칭) 국방과학기술원 설치 추진 필요성 검토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신설과 연계하여 (가칭) 국방과학기술원 설치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 ○ 대학원 설치 필요성 검토 (~'26년) ○ (추진시)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 (~'27년)
54.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기존에 여군은 전역을 앞두고 희망하는 경우에만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었으나, 이미 퇴역한 여군도 희망하면 다시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 ('25. 1. 2. 공포, '25. 7. 8. 시행) - 이에 따라, 기존처럼 전역을 앞두고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여군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미 퇴역한 여군 중에서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여군까지 예비역 편입 가능한 대상이 확대됨 ○ 개정 「군인사법」 시행 ('25. 7. 8.) 에 맞춰 퇴역한 여군 등 대상으로 예비역 편입 신청서 접수 중 (육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5.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 차원의 홍보 활동 및 학칙개정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각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부(국방민원콜센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아울러 학생예비군이 신고시스템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 있음 ① 국방부 신고시스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각 대학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여 게시 및 홍보 - 예비군 홈페이지(앱)에 탑재 및 홍보 ②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가 관련 내용을 예비군들에게 전파 및 홍보토록 강조(공문) ③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 국방부 신고시스템을 안내 / 강조하도록 협조 ○ 분기 단위로 국방부에서 각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를 통해 신고시스템 홍보 추진
56. 경찰대학 출신 간부가 의무복무를 만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처럼, 사관학교 장교들에 대한 환수제도를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양성비용 환수제도 의원발의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 양성비용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 의원발의 • 재학 및 의무복무 중 정신적, 신체적 장애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학비의 전부 혹은 일부 상환 • 환수를 위한 학비 산정, 강제징수절차 등 규정 ○ 법안, 국방위 상정 ('25. 9. 2.) 나. 향후 추진계획 ○ 법안, 국방위 법안소위 심사 ('25년 11월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7.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들의 이탈 방지 및 우수 교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수에 준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교수연구보조비 지급 현실화 완료 • 지급기준에 비해 적은 금액이 지속 편성되었던 교수연구보조비를 지급기준에 맞게 예산반영 완료 ('24. 12월) ○ 주요직위 보직자 직책수행경비 지급 확대 • 대령 → 3급 전환직위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직책수행경비 예산반영 및 기준액 인상완료 ('24.12월) * 3급(갑) : 월 15만원→ 월 50만원 3급(을) : 월 12만원→ 월 45만원 • 4급 상당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직책수행경비 지급 추진 중 ('26년~) * 4급(갑) : 월 35만원 / 4급(을) : 30만 나. 향후 추진계획 ○ 직책수행경비 지급 대상에 4급 상당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예산 반영 ('26년~)
58. 군 마트에 입점하는 담배 종류에 대한 심의과정 및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외국계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군 마트 담배운영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24.11월)하여 '25년 군 마트 담배 신규 물품 선정 시 시행('25.1월)하였음 ○ '25년 군 마트 담배 신규 물품 선정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2종*(외국 브랜드 전자담배 1종 포함) 신규 계약 완료('25.2월) * 믹스 아이스 더블(KT&G), 테리아 퍼플 웨이브(한국필립모리스)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9. 국군 춘천병원 개편사업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가 작성된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잘못하여 원청 업체에 지급한 하도급업체 공사비 등은 국방부가 원청업체에 반환 청구하고,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는 조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체결된(다만, 무권한자의 날인이 되어있는 직불합의서로 판단하고 있음) 기업(한국○○○○○)에 대해 원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음. 다만, 하도급사인 “한국○○○○○”의 경우 공사대금 직불 청구를 '24년 4월에 신청한 바 있으나, 그 이전 '23년 12월과 '24년 1월, 2회 춘천병원 공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통지가 도달되어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가 제3채무자가 되었음 ○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잔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 예정이었으나 동 하도급사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 소가 제기됨에 따라 공탁을 잠시 보류하고 본 소송을 진행하였음 ○ 1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부 승소하였음 ('25년 7월 승소) ○ 원청(○○건설) 잔존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탁을 '25년 8월 12일 완료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0. 전쟁기념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추가 획득(340백만원) • 기본급 인상률 3% + 추가 1.75% = 4.75% • 직급수당 : 월 4만원 인상 ※ 예산 지침 허용범위 내 공무직 처우개선 노력 나. 향후 추진계획 ○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률 개선 노력 (지속) - 처우개선을 통한 공무직 퇴직률 감소 추진 - 공석 발생시 신속한 채용으로 정·현원 차이 최소화
61. 사이버사령부의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해 군무원인 부사령관 또는 감찰실장 직위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해 사령부 중기('26 ~ '30) 부대계획 건의 ('25. 2. 10) • 現. 찰실장을 현역(중령)에서 군무원(3급)으로 편제 조정 ※ 예방감찰 및 작전통제부대 검열업무 수행 예정 √ 국방부 (조직과) 검토 및 승인 ('25. 4. 24) • 군무원 신규 증원은 제한됨에 따라, 내부인력 조정으로 별도 추진할 것 (現 중령 → 4급) 나. 향후 추진계획 ○ '27년 ~ '31년 중기부대계획 편제 반영 • 감찰실장 3급 추가 건의 예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개정 추진 (~'26. 6월) ※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감찰실장 3급 추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2. 정보사령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감사 및 감찰을 담당하는 직위를 민간직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同 시정 · 처리 요구사항 관련 국방부 담당부서 실무 토의 ('25. 6월) 나. 향후 추진계획 ○ '27. ~ '31. 국방중기부대계획을 통해 국방부에 편제 조정을 건의할 예정임 • 국방중기부대계획 소요요구서 국방부 제출 ('25. 11월) ※ 감찰 직위를 현역(육.중령)에서 군무원(4급)으로 조정 • 향후 국방정보조직개편 연계하여 민간직위로 전환 추진 병행
63. 월남전 참전자 중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4. 9. 2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국방위 법안 소위 • 박선원 입법 발의('24. 6. 17.) -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상금' 지급 - 명예보상금 지급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위원회를 설치 - 산정 및 지급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 적용되던 규정을 준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 법안 소위 결과 : 보류 - 보훈부 소관인 참전명예수당 인상(월 42만원)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차원의 노력 필요 ※ 제19대~제21대 국회까지 총 13건이 입법 발의 / 임기 만료 폐기 나. 향후 추진계획 ○ ㅎ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4. 기초체력 위주의 단순 체력검정을 넘어서 실제 전투임무수행에 대비할 수 있는 체력검정기준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 (제382조) 체력검정 시기 및 장소 : ‘②세부적인 체력검정시기, 병과·특기별 체력검정 기준 및 등급, 추가검정 ~~~(이하 생략) 기상 및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라고 명시 ※ 각군별 임무 상이로 병과 및 특기도 상이함 → 국방부 차원의 실제 전투임무수행 대비 상이한 병과(특기)별 체력검정 기준 정립 제한 ※ 現.각군별 특수임무수행 부대는 국방부 체력검정 外 자체 체력검정 종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 → ex) 육군 특전사, 해군 UDT, 공군 항공구조사, 해병대 특수수색대 등 ○ 다만, 국방부 주도 ‘국군 맞춤형 체력단련 프로그램’ 개발(’23. 8. 1.부) / 시행 중 • 군 체력검정과 체력단련 : 육·해·공군,해병대(공통) ※ 양성기관, 실무부대 구분下 적용 • 전투체력검정과 체력단련 : 육군·해병대(공통) • 해병대 전투체력단련 • 해군 함상형 체력단련 등으로 구분 • 공군 조종사 체력단련 ※ 각 군별 유사성과 특수성 고려 프로그램 차별화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5. 진중문고 선정과정의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진중문고 선정을 위한 ‘정훈 · 문화자료 심의위원회’는 군무회의, 정책회의와 달리 일반적인 업무 추진 관련 회의체이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나, ○ 선정 사유 및 주요 의견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국회 등에서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 중에 있음 (~12월 限) ○ 또한, 심의를 통해 선정된 도서목록, 심사위원 명단 등은 현재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정보공개 청구 또는 민원으로 요청시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장병의 교양증진·정서함양, 사기진작 등 정신전력 강화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배포할 수 있도록 「정훈·문화활동 훈령」의 진중문고 선정 절차를 준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6. CCTV 등 장비 도입 시 국산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시정 · 처리결과 ○ 보안이 우려되는 CCTV 도입 차단을 위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여 CCTV 도입시 국정원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하였으며,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을 확대하였음 • 국가인증(국정원 보안기능확인서) CCTV 제품 도입 의무 조항 반영(146조의2, CCTV 보안관리) • 보안적합성검증 대상을 작전수행 목적 CCTV에서 전체 장비로 확대·적용(별표19) ○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 지시」 조달원칙상 군수품은 국내 조달을 우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양질의 품목을 조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CCTV 도입 전·중·후 보안대책 준수 지속 강조 ○ 기 도입 · 운용중인 CCTV에 대한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보안 위해요소 확인 · 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7. 유해발굴사업 등 야외 작업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현재 장병 전입시 부대별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굴부대 선정시 다수 인원은 예방접종 완료후 투입되고 있으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유해발굴 이전에 접종 후 투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관련근거 가. 국방부훈령 제2968호(24.9.7.)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 훈령 나. 군 예방접종관리지침서(개정 25.2.14.) ※ [참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시스템(총 3회 접종) - 1차 : 신교대 입소후 - 2차 : 1차 접종후 1개월 이내(신교대) - 3차 : 2차 접종후 1년이상 경과(소속부대) ○ 기타 유해발굴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굴부대와 협조하여 부대 지휘관 참석하 일일단위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신증후군출혈열 접종 후 유해발굴이 실시되도록 야전부대와 지속 협조하여 업무추진 ○ 각종 계절성 감염 예방접종 및 피부노출 활동 최소화를 위한 복장 확인 등 예방활동 강화 ○ 응급의료지원체계 유지 : 응급요원 현장대기 ○ 불발·유기탄 발견시 폭발물처리 전문반(EOD) 연계 조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8. 군대 자살예방 전담조직의 신설과 자살예방 전담 인력 보강 및 총체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군내 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 ○ 군내 자살사고 예방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內 자살예방계* 운영('25.9.1.~) * 자살예방담당 증원(2명→8명) 및 병영상담정책담당(2명) 포함 ○ 각 군 자살예방 전담부서 인력 보강 추진 중(18명→22명) * 육군 13명, 해군 3명, 공군 3명, 해병대 3명 [군내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 자살 우려자를 '차단-식별-관리-분리'하는 군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시행 중 <table border="1" data-bbox="657 898 1503 1176"> <tr> <td>차단</td><td>입영판정검사(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현역 입영 차단)</td></tr> <tr> <td>식별</td><td>지휘관 등 관찰·면담, 심리검사,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운용</td></tr> <tr> <td>관리</td><td>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자살예방전문인력 활동,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간부 민간심리상담, 그린캠프 운영, 군병원·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td></tr> <tr> <td>분리</td><td>병역심사관리대 운영,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심사</td></tr> </table> ○ '25년 자살예방 시스템 제도개선 추진 • 도박, 마약 등 중독성 관련 문항 추가 등 병 관계유형검사 문항 개선('25.4월) • 초급간부 및 전입간부(지휘관 포함) 대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심리상담 의무 실시('25.1월) • 심리적 위기자 조기 식별을 위해 소 간부 심리검사 실시 및 지휘관의 심리검사 결과 확인 의무화('25.9월) •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살사고 이후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이행 개선(육군/'25.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자살예방 전담조직 기능 및 위상 강화 추진(지속) ○ 간부 심리검사 모바일체계 구축 추진(~'25.11월) ○ 안정적인 상담여건 보장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증원* 추진 * '25년 700명 → '26년 780명 ○ 간부 심리검사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5.3월~11월)	차단	입영판정검사(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현역 입영 차단)	식별	지휘관 등 관찰·면담, 심리검사,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운용	관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자살예방전문인력 활동,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간부 민간심리상담, 그린캠프 운영, 군병원·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분리	병역심사관리대 운영,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심사
차단	입영판정검사(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현역 입영 차단)								
식별	지휘관 등 관찰·면담, 심리검사,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운용								
관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자살예방전문인력 활동,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간부 민간심리상담, 그린캠프 운영, 군병원·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분리	병역심사관리대 운영,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심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9. 사이버범죄, 마약, 딥페이크 등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만들어 국방부 차원에서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이버범죄, 마약 등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군기강 확립 협의체(TF)’ 강화 운영 * 군인권개선추진단 + 조사본부·검찰(법무)·감사 등 ** 정기 협의체 개최 주기를 단축(반기 1회 → 분기 1회)하고, 실무자급 수시 협의체를 월 1회 개최 ○ ‘24. 8. 29.부터 차관을 TF장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TF’를 구성, 범정부 연계 예방·대응대책 추진 중 • 구성 : (단장) 차관, (부단장)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상 황총괄 및 사건대응팀 등 4개 팀 운용 ○ 분야별 예방대책 보완 [사이버범죄(불법도박 등)] • 군 내 불법도박 예방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영상 콘텐츠 개발(‘25.3월~10월) • 부대관리훈령에 불법도박 예방 규정 신설(‘25.8월) * 부대의 불법도박 예방교육, 불법도박 식별활동, 도박 문제인원의 치유 조치 의무 등의 내용 반영 • 군 내 불법도박 문제의 실태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시행(‘25.6월~11월) [마약] • 병무청 연계 下 국방인사정보체계 內 마약류검사 결과 확인 체계 구축 (‘25.2월) • 마약류 과거 이력병사가 부대 전입 시 사고 유발 가능성 고려 도움·배려장병으로 선정,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연계하여 주기적 면담 및 관리체계 구축 (‘25.3월) • 영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반입물품 검사지침’ 개정(‘24.4.1.)) *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검사여건 마련 등 융통성 보장, 최근 이슈화된 마약류의 유통형태(전자담배, 화장품) 검사 강화, 반입물품 검사 간 개인 부동의 시 반송·반출조치 등 추가 반영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어서)	[딥페이크] • (피해자 보호지원) 상담 · 의료 · 법률 지원 및 휴가 등 피해자 통합지원 시행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신청 및 지원 연계 •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군 내부망 개인정보 중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진정보 조회 기능 비활성화 조치 • (예방교육)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 추진 - ‘25년 성인지교육 추진지침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추진 (‘25. 1월) ※ 범정부 TF 과제 ⑳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추진 • (예방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제보 강조기간’ 운영, 각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집중 상담 활동 및 야전부대 간담회 등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예방활동 추진 • (기관협업)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작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 안내」 내 군대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및 군대 내 접수 및 처리절차를 반영, 각군 배포 / 활용 지시 (‘25. 5월) • (민간자문활동) 군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 -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24.11.15.),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24.12.12.)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군기강 확립 협의체를 통한 사건 · 사고 예방 지속 추진 ○ 범정부 TF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에 맞춰 국방부 예방대응 활동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0. 진급 적체를 해소하고 인력의 장기적 활용을 위해 '소수획득, 장기활용' 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하사·소위·중위 정원은 감축하고 중사·상사·소령 정원은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우수한 인력을 소수 획득하여 숙련된 간부로 장기 활용하는 인력구조 전환이 조기 정착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71. 국군병력 감소 추세로 인한 현실적인 차선택으로서 여성들의 자원입대를 허용해 여군 비율을 높이는 여성지원병제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여성지원병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상근예비역 및 보충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우수한 인원을 소수 획득하여 숙련된 간부를 장기 활용하는 인력구조로 개편하는 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2. 장기복무 희망자에 한해 보수교육을 통해 타 병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제도를 설계해 이 인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장교 병과전환 제도 적용 中 • 육군(전·후반기) - '24년 하반기 : 34명 - '25년 전반기 : 19명 • 해군(년 2회 : 해사·간호장교, 단기복무장교로 구분) - '24년 : 42명, '25년 : 34명 • 공군(장기복무 선발 시) - '24년 : 5명, '25년 : 4명 • 해병대(전·후반기) - '24년 : 5명, '25년 : 4명 나. 향후 추진계획 ○ 각 군의 계급별·병과별 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투력 발휘 여건 보장을 위해 지속 시행
73.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기에, 각 군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군 인권 관련 의무교육체계 발전방안 연구」 추진 중이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정의무교육의 통합관리방안을 모색 예정 • 연구기간 : '25.4.1.~12.31.(9개월) • 주요내용 - 군 인권 관련 의무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무교육체계 문제점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도출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인권 관련 의무교육체계 개선 : '26년 ○ 법정의무교육 통합관리방안 검토 : '26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4. 군 내부 교육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 낮은 이수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현재 각 법정의무교육별 국방부 담당부서는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및 실적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음 ○ 향후 법정의무교육 통합관리방안 검토 시 의무교육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방인사정보체계 등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실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 ○ 법정의무교육 통합관리방안 검토 : '26년
75. 이번 북한의 불법 파병을 계기로 나토전장정보수집 활용체계(NATO BICES)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NATO 국방장관회의 참석 : '24. 10. 17. ~ 18. • 국방차관, NATO 사무차장과의 양자회담에서 BICES의 가입을 위한 NATO측 협력 당부 ○ BICES 가입 실무협의 (1차) : '25. 1. 15. ~ 16. ○ BICES 가입 실무협의 (2차) : '25. 5. 12. ~ 15. 나. 향후 추진계획 ○ BICES 장비 구축 소요 제기 : '25. 11월 ○ BICES 가입 관련 약정 체결 추진 : '25. 12월 ○ BICES 운용 관련 예산 반영 추진 : '26. 7월 • 분담금, 유지보수비, 회선 사용료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6. 사이버작전 역량강화비 신설, 최초 임관계급 상향, 진급 최저복무기간 특례조항 신설 등을 통해 기존 사이버작전 인원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사이버 작전역량 강화비’ 신설 추진 • ‘26년도 국방예산안(9.61억원) 요구 ※ 對기획재정부 사업설명 : 5~7월 (기술역량강화비 6.65억원 / 작전역량강화비 2.96억원) • ‘사이버 작전역량 강화비’ 지급근거 마련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뢰 : ‘25.6.24. ※ 시행령 제16조제4항및제5항 신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역량강화비 지급기준, 지급액 등 역량강화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6년도 국방예산안 對국회 (국방위) 대상 설명 실시 : ‘25. 9. 23. ~26.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 작전역량 강화비’ 신설 • ‘26년도 국방예산안 對국회 (예결위) 대상 설명 : ‘25. 10 ~ 11월 •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개정 경과 확인 : 지속 • (시행령 개정 및 예산반영시) 「사이버작전역량 강화사업 집행·관리 훈령」 제정 : ‘26. 1분기 ○ 최초 임관계급 상향, 최저 복무기간 특례조항 신설 관련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군인사법」 제12조 등 관련 조항 검토 :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7. 해군과 공군, 해병대 출신 예비역의 경우 군 경력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직접 국방부와 각 군 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국방부의 '국방 증명서 통합 발급체계'는 아직 정부24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정부24와 서비스 연계 완료('24. 10. 23. 부)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해군·공군·해병대의 군 경력증명서 발급 추진 중 • 국방인사정보체계(군 경력정보 보유)와 연동 협의 및 개발을 위한 분석 완료('25. 8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해군·공군·해병대의 군 경력증명서 발급('26. 3월 예정)
78. 장병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일부 반영 • '25년 국방예산 편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반영하지 못한 장병 처우개선 예산을 포함해 정부안에 일부 반영 ※ 당직근무비 인상, 이사화물비 일부 현실화, 단기 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초급간부 자산형성지원금(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국방예산 국회 심사 시 증액 노력 • 정부안 단계에서 일부 감액 및 미반영된 장병 처우개선 예산이 국회 예산 심사 간 국방부 요구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9. 군인과 군무원의 대민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대민피해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 ○ 출타장병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별 · 사례별 군법교육 내용 세분화 ○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 대민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나. 향후 추진계획 ○ 대민 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및 징계조치(지속) ○ 장병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군법교육 실시(지속)
80. 개인화기 사격과 체력단련에 대하여는 전역 시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병 개인화기 사격과 체력단련에 관한 자력관리는 군별 특성에 맞게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국방인사정보체계 내 「병 진급심사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해 마련 중임 ※ 각군 소요제기 ('25년 4월) ○ 각 군별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병 진급심사 시행간 개인화기 사격과 체력단련 등 결과를 활용 하도록 추진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한 병 개인화기 사격과 체력측정 결과 입력 및 유지('26년~) • 각 군 시험운용 결과 확인(~'26.6월) • 개선사항 도출/ 보완(~'26.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1. 군 내부에서 발생한 대형 보안사고를 고려할 때, 외부보다는 군 내부의 보안체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보안 관련 법규 개정 완료 •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개정 : '25. 5. 27.부 - 군사보호구역 內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근거 마련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 '25. 6. 16.부 - 보안사고(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장병대상 보안 정신교육 강화 • 보안MZ세대 장병에 맞춘 보안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활용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간 정신교육 시행 • 각급부대의 지휘관 및 부서장, 보안 통제부서에 의한 보안교육 강화 ○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강화 • 철저한 보안감사 시행 - 보안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정밀 진단 - 「보안취약 요소 및 보안대책」관련 감사 중점 하달 • 보안점검 강화 : 취약시기 / 각급부대·방첩사 합동 - 각종 훈련 전·중·후, 다수인원 보직 이동 시 ○ 보안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 보안위반 신고창구 적극적 홍보('방첩사' 1337) 나. 향후 추진계획 ○ 부서장에 의한 보안 관리·감독 기능 보완 • 부서원에 대한 특이 징후·행동에 대한 확인(수시) - 생활 속 보안 이상징후 점검을 위한 구체화된 Check-list 작성 활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어서)	○ 보안관계법령(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을 통한 군사기밀 보호 강화 • 군사기밀의 불법 유출 차단을 위한 훈령 개정 ○ 「국방보안포털」개선 추진 : ~ 12월 한 • 국방 생성형 AI 보안 분야 개설 • 창의적인 보안 콘텐츠 공모전 활성화 • 능동적인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행사 추진 및 결과 보고 가능한 체계 구축 ○ 음성비밀 일제정리 / 비밀 경량화 추진(반기 1회) • PC 및 저장매체 內 저장내용 파일 단위 일제 확인 • 부대별 음성비밀 자진 신고기간 설정 / 시행
82. 급식비 인상에도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어 국방부는 앞으로 급식비 인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 급식 질 향상을 통한 장병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급식 혁신 시범사업, 민간위탁 급식 확대, 군 급식비 증액 노력 등 추진 ○ '24년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장병 만족도 상승('25년 만족도 조사는 12월 완료) ※ 급식만족도(5점 만점): ('21) 3.18 → ('22) 3.22점 → ('23) 3.37 → ('24) 3.59점 나. 향후 추진계획 ○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급식정책 및 급식예산 증액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3. 반복적인 성폭력에 노출된 공군하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피해자 보호·지원조치 • [상담지원] 성고충전문상담관 피해내용 상담, 조사신청 및 형사신고절차, 통합지원 안내 • [인사지원] 피해자 청원휴가 조치 • [의료지원] 피해자 의료지원 요청에 따른 군병원 입원치료 시행 ※ 피해자 심신장애전역 의사에 따라 의무심사 실시, 심사결과 '전역'의결, 피해자 전역 ('24. 11. 30.) ○ 가해자 조치 • [2차 피해방지] 조사신청서 접수 즉시 행위자 타 부대 분리 - 행위자 2차피해 방지 고지, 서약서 작성 - 사건처리 과정 중 2차 피해방지 모니터링 • 행위자 징계/형사 절차 진행 - '25. 7. 징계처분 - '25. 7. 형사처벌, 제적처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4. 국방부의 대응 태세 ‘즉강끝’을 골프공 박스에 즉·강·끝 (‘티샷은 즉각, 임팩트는 강력하게, 팔로스루(follow through)는 끝까지’)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적으로 안보 임무를 수행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향후 해당 물품을 생산 및 배포할 계획 없음 나. 향후 추진계획 ○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집중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5. 군 간부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부 훈령(군 인력관리 훈령)에 따라 군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진급, 장기복무, 복무연장, 초임획득, 예비역재임용 등을 추진 • 소요반영시 육아휴직 인원 반영 ○ 육아휴직 시 보직조정을 통한 결원직위 보충 시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수시 보직조정된 자의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훈령 개정 추진 중임. ○ 예비역 재임용 대상인원 확대를 위해 재임용가능 시기 기존 전역 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 추진 • 부사관 :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5.9월) • 장 교 : 군인사법 개정 추진 중(~'25.1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인력정책과에서는 매년 인사운영집행계획 작성 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소요 산정 반영(~'26.1월) • '26년 계획작성 시부터 진급, 장기복무, 초임획득, 재임용, 계급별 정원 등에 반영 ○ 육아휴직자 결원직위 보직조정된 자가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훈령 개정(~'25.12월) ○ 예비역 재임용 대상인원 확대 선발 추진('25.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6. 국방혁신 4.0 관련 개념과 교리 등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전에 대비하도록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첨단무기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미래전장환경과 무기체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개념 발전과 교리 개정을 추진 중임 ○ 개념 발전 • 합동군사전략서 발간 ('23년) • 합동군사전략서 하위 기획문서 및 부록 발간 ('23 ~'24년) ○ 교리 개정 - △합동작전 ('23년), △합동기획 ('24년)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각 군의 교리 문헌사업 절차를 고려하여 교리 개정과 연계된 관련 교범을 개정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7. 정신전력교재에는 북한의 행태가 2022년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최신화하여 교육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통상 5년 주기로 발간하며, '23년 기본교재 개편(집필) 당시 북한의 도발 및 군사적 위협 등의 데이터를 객관화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22년까지였으므로 해당기간까지만 기록 ○ 교재가 개편된 이후 변화된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정과교육 시 최신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음 • 기본교재가 보완 발간된 이후에도 북한의 최근 도발사례까지 지속 교육하였음 - '제1적대국' 위협,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 -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 - 오물쓰레기 살포, 대남 괴소문 방송 - GPS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침략전쟁 가담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북한의 도발위협 및 국내·외 안보환경 관련 내용을 최신화하여 지속 교육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8. 특전사 훈련시설 통폐합을 통해 폐쇄되는 시설의 유휴지 매각을 검토하기 바람	가. 시정 · 처리결과 ○ 지자체의 공익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용도 폐지가 불가피한 특전사 해상훈련장에 대해 이전 협의 진행('25.6월~) 중 • 현재 특전사에서 활용 중인 훈련장으로, 지자체와 대체시설 배치·규모 등 협의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시설본부와 지자체 간 합의각서가 마련되면 국방부 심의를 거쳐 승인 예정('26년 상반기) • 이후 절차 : 합의각서 체결 → 軍 대체시설 설계·공사 → 대체시설 기부채납(지자체→국방부) / 유휴지 양여(국방부→지자체)
89.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계룡대 주전력과 예비전력 공급 주체 분리를 조속히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7년 ~ '31년 중기 계획에 반영 • 계룡대 전력공급 안정화 사업 (신계룡변전소 회선 인출공사)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진행 • 한국전력공사(전력공급부·계통운영부)와 회선 인출 가능성, 공사비, 설계 방향 등에 대해 협의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세부 공사 범위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상세설계 및 세부 공사비 산출 - '26년 상반기 완료 ○ 국방부 '27년 예산 편성 및 반영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0.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의 높은 라돈 수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암반 차폐확대, 호실별 차폐방안의 라돈 실내유입 차단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 나. 향후 추진계획 ○ 문서고 라돈 실내유입 차단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26년 상반기) ○ 문서고 라돈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타당성 연구(~'26년)
91.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생물 테러에 대비하여 국내산 탄저백신 도입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우리 군은 비축 중인 해외 탄저백신을 국내 탄저백신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국내 탄저백신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도입이 불가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내 탄저백신 개발 완료 시 '군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군에 도입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2. 북한의 소음방송에 따른 강화도 일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① 강화도 일대 주민피해 대책 ○ 관계기관 대남소음 피해 관련 대책회의 (3회) * △ ‘24. 10. 10. 국방부·인천시, △ ‘24. 10. 29. 국방부·행안부·과기부·경기도·인천시 등 △ ‘25. 2. 11. 국방부·경기도·강원도·인천시 ○ 주민간담회 (‘24. 11. 1. / 강화군청, 당산리 마을회관) * 국방부·행안부·인천시·강화군이 합동으로 설명 ○ 대남소음 피해 대책 관련 국회와 소통 • 국회 대면설명 (성일종 의원실, 안규백 의원실) • 배준영 의원실 주관 관계기관 간담회 참석(‘25.4.8.) ○ 행정안전부에 대남소음 데이터를 제공하여 피해보상금 결정을 위한 소음지도 작성 기여 * ‘24. 9. 13. ~ ‘25. 6. 11. 간 강화·김포·파주 일대에서 측정한 소음데이터 제공 (‘25. 4. 29. / 7. 29.) ② 피해주민 보상검토 ○ 행안부 주관 민방위 피해지원심의위에 참여하여 ‘피해 기준 및 지원금액 관련 지침 제정안’ 마련 (‘25.7.23. / 정책기획관) * 피해 규모 및 소음 영향도에 따라 지원금 산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3. 합동참모의장은 해안경계임무 전환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임무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뤄왔던 경계임무 전환을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상비병력 규모 조정과 연계, 육군 2작전사 지역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전환하는 것의 검토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25년부터 검토 추진으로 既 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 해안경계작전 전환 조건 (△북한의 위협, △해경의 임무수행 능력, △국가재정 여건) 고려 관련부처 협의 및 정책추진을 검토 예정임
94. 북한의 탄도미사일 4.5t 신형 고위력 미사일 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북한 주장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성공 여부 관련 정보 분석 · 평가 실시 (24. 11. 25) ○ 세부 내용은 한 · 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5. 외국의 민간 위성을 통한 지도서비스에 우리 중요한 안보시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구글어스와 같은 외국 민간위성을 활용한 지도서비스는 국내법 적용이 제한되어 안보시설의 보안처리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한사항이 내재됨 ○ 또한 민간 서비스 영역에 보안처리 강제를 위해서는 공간정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다부처 의견 조율과 협력이 필요함 ○ 현재 구글어스를 운용 중인 美 구글社は 국가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우리 안보시설을 보안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나, 우리 정부는 국가의 종합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다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임 ※ 다부처 협의체는 '25. 11. 11일 한 결정, 통보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국가공간정보 국외반출이 허가될 경우 구글社の 지도서비스에 국내 중요 안보시설 보안처리 및 국내업체와 동일한 보안규정 준수를 강제할 예정 ○ 최종 결정은 안보, 통상,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부 주관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6. 정보본부의 핵심 현용 사령부는 합참의장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와 갈등 없이 우리 정보역량이 재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하여 정보본부 및 예하 기능부대 지휘 관계를 합동부대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및 토의결과 법령·임무·훈령 등 조정 소요를 식별 중임 ○ (법령) 국방정보본부령 상에 정보기능 부대 임무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로 명시되어 법 개정이 수반 ○ (임무) 現 법령상의 관장사무 中 군정(軍政)과 관련된 국방정보정책 분야는 군령(軍令)을 관장하는 합참의장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 ○ (훈령) 現 국방장관 명의 훈령(특수정보보안업무 훈령 등 14종)을 발령하여 국직·합동부대, 각 군과 합참, 일부 국방부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합동부대로 지휘관계 변경 시 훈령에 대한 권한 행사 가능여부 법적 검토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의견 및 KIDA 정책연구 요청으로 정보기능부대 지휘 관계의 적절성을 지속 판단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7. 미군의 비통제형 합참 의장제와 유사하게 현 합동참모본부가 군통수권자의 군령권을 보좌하고, 새롭게 합동사령부를 설치해 지휘를 전담하게 하는 개편안을 적극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미래 연합방위체제에서 합참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하고, 합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지휘구조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 전작권 전환 등 미래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 · 평시 지휘구조 최적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 예정임.
98. GP검증 문건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비밀 해제 전 구체적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군사기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부는 군사비밀 관련 현안보고 및 국회 자료요구 시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대국회 설명을 시행하고 있음 * 제4장 군사기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평문) 제공 및 설명 ○ ‘북한의 철수 GP 검증’ 관련 비밀자료는 제출 및 설명한 바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9. '자유' 등 대대급 보급 정기간행물 전반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여부, 가짜뉴스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정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기존에 중대급 ~ 여단급까지 배부되던 정기간행물을 「정훈·문화활동훈령」 개정을 통해 간행물의 내용과 성격, 배부대상 등을 고려하여 '25년에는 아래와 같이 배부처를 단일화하고 간행물별 배부 수량을 균등 배분하였음 • 안보간행물(6종) : 대대급 및 학교부대/월1,784부 • 교양간행물(8종) : 대대급 / 월1,684부 ※ '자유' : ('24년) 중대급/월 10,186부/336,138천원 → ('25년) 대대급, 학교기관/월 1,784부/53,966천원 ○ 또한 '25년 정기간행물은 장병 선호도, 각 군 본부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추천된 후보 간행물을 대상으로 '정훈·문화자료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및 활용성,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 가짜뉴스 유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치적 중립성 준수 및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한 내용 검토 강화 ※ 필요시 발행기관과 수정 협의 후 배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0.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전세 대부와 공공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 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와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25.5.26. ~ '25.10.24.(5개월) • 연구내용 - 군 주거시설(관사, 간부숙소)의 확보 소요량 산출을 위한 기준 재정립 - 군 간부를 주요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주택 건립 임대사업 추진 관련 사항 검토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군 간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임대사업' 추진 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

나. 합동참모본부(28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북한 국방상으로 임명된 노광철과 총참모부 부장으로 임명된 이영길은 전략가로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전략, 작전계획 및 상황이 변할 것이므로 잘 주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북한 국방상으로 임명된 노광철('24.10월)과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이영길('23. 8월)은 각각 전략 무기, 군사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군사적 대응을 주도할 것이므로 예의주시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북한 공개정보 등 다출처 첩보를 수집·분석하여 상기 인물들과 북한의 대남 군사적 행보를 지속 추적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북측의 대남통지문 통보시 유엔사 통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통보와 합참의장의 보고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유엔사군정위 ↔ 합참 군정위연락단 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유 : '25.6.16. ○ 협조 / 보고시스템 개선 • 기존 <pre> graph LR A[유엔사
(군정위)] -- 대남통지문 --> B[국방부
(대북전략과)] B --> C[합참
(해당부서)] </pre> ※ 대남통지문 접수시 유엔사는 중요사항만 국방부를 경유해서 전파되며, 국방부는 합참 해당부서로 전파 (보고 간 시간소요 불가피) • 개선 <pre> graph LR A[유엔사
(군정위)] -- 대남통지문 --> B[국방부
(대북전략과)] B --> C[합참
(해당부서)] A -- 대남통지문
(군정위연락단) --> C Note[※ 안보포폰 활용 실시간 전송] </pre> ※ 대남통지문 접수시 기존 보고체계를 유지한 채 군정위연락단을 통해 직접 해당부서에 전파하여 보고시간 단축 (해당부서는 의장 보고) ○ 군정위연락단 주관 실무협조회의 및 신속 전파 재강조 : '25.6.18. ※ 현 유엔사 규정상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측의 대남통지문을 합참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중요사항은 지체없이 전달하고 있으며 차후 합참 군정위연락단을 통해 전파해주도록 재강조 (단, 유엔사령관 공개 승인자료에 한함) 나. 향후 추진계획 ○ 개선된 협조/보고시스템 운영 및 발전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북한의 의도된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고 적의 도발에는 반드시 3축 체계를 가용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제를 통해 대북 억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략사령부 창설('24.10.1.부)을 통한 북핵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 한미 NCG 공동지침에 연계하여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통합하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을 수행 ○ 첨단과학기술 기반 하, 물리·비물리 능력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 개념, 기획~시행체계, 조직·능력 발전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연합 연습·훈련 강화 추진 ○ 첨단과학기술 기반 미래 게임체인저 구상 •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 가속화 및 미래 전략적 능력 확충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전략무기소요 지속 발굴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미국 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전쟁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미국 정책연구원(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분석하며 두 가지 전쟁 시나리오를 제시('24.10월) •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상륙전 감행 •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대응으로 인한 틈을 노려 북한이 한국을 공격 ○ 우리 군은 위 사항 이외에도 최근 전쟁 양상과 전략환경, 북한의 위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변화하는 다양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지속 발전 예정
5. 북한의 오물 · 쓰레기 풍선에 대한 무력화 방안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북한의 오물 ·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갖고 있음. ○ 작전보안 상 세부내용은 공개가 제한됨. 나. 향후 추진계획 ○ 작전보안 상 세부내용은 공개가 제한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승인절차가 준수되도록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기구류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5. 6. 20.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 주관/대상 :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국방부, 합참 등 15명 • 회의결과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는 군 승인과정을 포함한 안내 게재문을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 - 무인자유기구 신청체계인 '항공기 운항 민원처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합참 권한 부여 ○ P518 비행금지구역 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 '23년 9월(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이후, 민간단체가 합참에 비행승인을 신청한 사례는 없음. • 다만, 민간단체가 P518 내 대북전단 살포를 신청하여도 관련법, 합참 지침, 유엔사 규정에 따라 비행승인 제한 ○ 군 조치사항 • 국방부 홈페이지 내 비행승인 안내사항 게재 •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통제 조치 • 경찰·지자체, 유관부처 등 업무협조 •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하 미승인 무인자유기구 식별 시 현장부대에서 관할지역 경찰에 신고 나. 향후 추진계획 ○ 무인자유기구 비행승인 절차 안내 지속 ○ 국토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대북전단과 관련하여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에서 국토부, 지자체하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하여 대북전단 문제를 통제하고 협의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대북전단 풍선부양 시 지자체, 경찰, 군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 대응 중 ※ 지자체, 경찰 : 현장 순찰, 안전통제 등 ※ 군 : 적 도발 대비태세 유지 등 ○ 지방통합방위회의시 국민안전대책을 위한 관계기관별 협조체계 재강조('25.3월) ○ 한국전술지대 내 대북전단풍선 부양 시 군 활동 강화방안 하달('25.6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정보공유체계 유지 ※ 대북전단 풍선부양시 통합 대응·조치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등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조체계 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북한이 러시아제 수송기를 공중조기 경보기로 개조 중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운영능력 및 우리에의 위협 등을 파악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북한은 '23년부터 러시아제 수송기인 IL-76 항공기를 공중조기 경보기로 개조 중이며, '25. 3월 김정은 주관 성능시험을 공개보도한 바 있음. ○ 공중조기 경보기의 레이다 성능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향후 전력화 시에는 북한 공군의 공중전장 인식 확장 및 지휘 통제 능력 향상으로 전·평시 공중작전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우리 군은 한미 정보공조 하에 IL-76의 최초 개조 시부터 관련 활동을 포착하여 지속 추적하고 있으며, 실제 능력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북한 공중조기경보기 개조 동향을 지속 추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23년 10월 경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하여 귀순경로가 근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북한 목선 귀순작전은 NLL 인근에서 목선을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해상감시레이더로 책임감시구역 내 진입 시 최초 포착하여 작전절차에 의거 정상적으로 귀순을 유도한 작전으로 평가 ○ 삼척항 북 소형목선 상황('19.6월) 이후 해안경계작전체계 지속 보완 중 [주요 보완사항] ① 기지별 레이더 전시체계 보강 ② 레이더 / TOD 감시병 전문화 교육, 레이더 부기지장 계급 상향, 감시병 4교대 가능토록 편성 등 감시운용자 보강 ③ TOD 운용시간 증대 나. 향후 추진계획 ○ 해군(1·2함대)과 육군(해안경계부대) 간 협조된 작전으로 동·서해 NLL 일대 확고한 경계태세 유지 ※ 북 소형선박(인원) 표류·남하·귀순 대비 감시·경계 강화 ○ AI 기반 유무인 복합 개념하 해상·해안 경계작전 개념 및 작전수행체계 발전 추진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해도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북한이 침투작전시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취약점을 대비하고 분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한강하구 이용 적 침투 가능성 분석 실시 ○ 적 침투 대비 한강하구 강안 감시태세 유지 나. 향후 추진계획 ○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침투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평가(지속) ※ 취약요소 식별 시 적시적으로 감시·경계전력 보장
11. 북한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도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 합참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재래식잠수함 대비 수중 속력 및 수중 체류시간이 우수하나, ○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협약, 안보환경, 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사적 필요성, 안보환경, 국제협약, 비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사후검토 회의를 합참의장이 직접 주관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프리덤 에지 훈련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훈련이나, 훈련의 규모 및 내용은 일부 해상 및 공중 전력이 참가하여 수행하는 훈련임. ○ 3국은 훈련의 규모, 내용을 고려 대령급에 의한 사후검토를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 사후검토는 대령급에 의해 시행하되, 사후검토 결과를 각 국 지휘관에게 별도 보고하고 후속조치 과제화하여 차기 훈련에 반영 ○ '25년 훈련 사후검토 결과 합참의장 보고(10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후속조치 과제는 '26년 프리덤 에지 훈련 계획에 반영 ○ 프리덤 에지 훈련 사후검토 결과 합참의장에게 보고(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GOP 경계작전 부대의 고정식 운영과 관련하여 경계작전의 효율성과 장병들의 복무여건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GOP 경계부대 고정식 운용 이후 경계작전 전문성 향상, 안정적 부대운용 여건 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을 확인 ○ 다만, 고정식 운용에 따른 장병들의 경계(감시) 피로도 가중 관련 일부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력을 활용한 미래 경계작전수행 개념 정립하여 경계 효율성 제고 및 GOP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AI 기반 감시체계와 향후 전력화 예정인 유무인 복합전력 현행작전 적용('25.12월) ※ 미래 핵심 첨단전력의 작전운용 실효성 검증 / 보완 ○ AI 활용 GOP 감시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 (~ '27년) ※ GP 무인화, AI 기능 활용 대대 통합감시체계 구축 등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경계작전 개념 변경시 유엔사령부와 협조할 것이 많으므로 상설군사위원회 (PMC) 등을 통해서 잘 정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적 위협 변화 관련 한미 연합토의("24.12.) ○ 합참-유엔사, DMZ 내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협의("25.1.) ○ DMZ 현안 관련 한미 지휘관회의("25.6.) 나. 향후 추진계획 ○ 합참-유엔사-지작사 계층별 공조회의 정례화 추진 예정 ○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 시 선제적으로 유엔사와 협의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AI를 전군 모든 시스템과 지휘체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 할루시네이션 문제 등을 고려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에 AI 기능 도입 간 상호운용성 및 체계 통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 정립 • 무기체계에 AI 적용 검토를 위해 담당부서 신설 ※ 첨단기술전력과(“24. 1월) : 무기체계 AI 적용 검토 ※ JADC2 추진단(“25. 6월) : AI 기반 지휘결심체계 구축 • AI 기술발전 수준과 발생 가능한 취약점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 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설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AI 도입 추진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무기체계에 AI 기술 도입 간 소요제안 시부터 상호운용성 및 AI 취약성 검토 예정(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대테러 기관단총 전력화 부대와 관련하여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과 해군 UDT 제출자료가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문서 위조 등 조사가 필요하고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사업담당자의 전역 후 납품업체 취업, 특전사 실무자 전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합참 주관 의원실 대면설명("24.11.28.) • 설명자 : 합참·육군·해군 관련 과장 및 담당 • 설명내용 : 대테러기관단총 운용 관련 각 군 의견수렴 결과 - 현재 707특임단 대테러팀에서 운용하지 않고, EOD/화생방/정보반에서 조정 운용 중 - 방독면 착용 下 좌측 견착 사격결과 설명 ○ 시정·처리요구사항 수정 협의("25.1.31.) • 수정내용 : 대테러기관단총 전력화부대에 대한 전환 검토 요청("25.10월한) ○ 해군, 대체총기 운용 관련 대면설명("25.9.30.) ○ 육·해군, 진행사항 관련 의원실 자료 제출("25.10월) • 내용 : 대테러기관단총 관리전환 추진계획 나. 향후 추진계획 ○ 대테러기관단총 관리전환 추진 : ~ '25.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군 부대 민간 드론의 침입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협조체계) 불법드론 법적조치 체계 구축 • 불법드론 확인 시 운용자 신변확보 및 경찰 인계 - 지역 경찰서-지역책임부대 신고연락망 구축 - 경찰, 불법 드론 운용자 법적조치(과태료) • 불법드론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수방사·1군단) - 드론비행 승인 신청시(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의 시리얼 넘버를 입력토록 절차 보완 ※ 국토부(서울지방항공청) 협조 - 군부대는 RF 스캐너 운용 시 시리얼 넘버 확인을 통해 승인·미승인 드론 여부 확인 가능 ○ (대응능력) 대드론체계 전력 증강 • 실시간 불법드론 대응 가능한 대드론체계 (탐지-식별-전파차단) 전력화 • 레이저 대공무기 등 드론에 특화된 물리적 타격장비 전력화 • 다양한 드론대응체계를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조기 전력화(소요군, 방사청 연계) 나.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대드론체계 전력 증강 추진 (~ '32년) ○ 군 시설 내 드론 테러 대비 훈련 정례화(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 합참의 육사비율 조정 및 주요 보직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합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 중 ○ 합참의 육군 대령 직위는 총 53개이며 이중 육사비율은 '24년 40명 (76%)에서 '25년 36명 (68%)으로 -8% 하향 나. 향후 추진계획 ○ 특정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육군본부와 공조 및 지속 노력
19. 전략사령부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 국군조직법 개정, 예산배정 등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지휘관 순환보직 관련 사항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3568호) 제19조'에 의거하여 검토되었으며, 각 군 순환보직으로 적용토록 '전략사령부령(대통령령 제34789호, 2024.8.6.)'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 전략사령부 예산은 「'25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전력운영비 약 27억 편성 나. 향후 추진계획 ○ 운영 간 개선사항 지속 보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댓글 요원의 진급에 대한 실상 파악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군무원 승진제도 개선 <table><tr><td>구분</td><td>기존</td><td>개선(시정)</td></tr><tr><td>평가요소</td><td>정량+정성적 요소</td><td>기존 + 질적 평가</td></tr><tr><td>추천심의 위원회</td><td>2개 (갑·을반)</td><td>3개 (갑·을·병반)</td></tr><tr><td>심의 구성</td><td>전 계급 동시 실시</td><td>5급 이상 6급 이하 분리 실시</td></tr><tr><td>의결방법</td><td>다수결</td><td>만장일치</td></tr></table> ※ 사령부 인사예규 개정 및 시행 중('25. 5. 6.부) ○ 기존에 평가가 제한되었던 임용 이전 사건 및 평가요소 이외의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평가를 도입하여,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과거 사건 관련자 승진 원천 차단 나. 향후 추진계획 ○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선결과 지속 적용 및 보완	구분	기존	개선(시정)	평가요소	정량+정성적 요소	기존 + 질적 평가	추천심의 위원회	2개 (갑·을반)	3개 (갑·을·병반)	심의 구성	전 계급 동시 실시	5급 이상 6급 이하 분리 실시	의결방법	다수결	만장일치
구분	기존	개선(시정)														
평가요소	정량+정성적 요소	기존 + 질적 평가														
추천심의 위원회	2개 (갑·을반)	3개 (갑·을·병반)														
심의 구성	전 계급 동시 실시	5급 이상 6급 이하 분리 실시														
의결방법	다수결	만장일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직할부대 방문 및 점검 등 부대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합동부대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위해 합참 주도, 국방부·각 군 본부 협업 하 현장 컨설팅/간담회(전반기), 통합지도방문/애로·건의사항 수렴(후반기) 실시, 후속 조치과제 67건 식별·조치 중(67건 중 40건 완료, 27건 진행) ○ 합동부대장의 합참의장 지휘보고 시 기능부서 배석, 의견 적시 청취 및 공유(매주) 나. 향후 추진계획 ○ 합동부대 통합지도방문 : '25.11월 중 (잠정, 군사지원본부장 등 10여명) ○ 합동부대 임무수행 여건보장 후속조치 과제 추진평가회의 : '25.11.11.(화)
22. 인태지역 수송로에 대한 기지화 또는 임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군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주관 「해외협력항만 구축 추진방안」 연구 용역 완료 ('24. 11월) ○ 연구 결과 해외협력항만 대상국 (안) 으로 11개국 제시 나. 향후 추진계획 ○ 해외협력항만 확보 관련 국가별 시행약정 지속 체결 추진 예정 ○ 타부처·민간기업 협력 등 방안 검토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 합참의장을 미국과 같이 비통제형으로 군령을 보좌· 자문하는 기구로 만들고, 합동군사령부가 전반적으로 전·평시를 지휘하며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미래 연합방위체제에서 합참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하고,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휘구조 발전방안을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전작권 전환 등 미래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평시 지휘구조 최적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국내외 반입반출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침서에 반영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제수송·통관업무 실무지침서에 반영('25.1.3.) • 관련 법령 작성(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내외 반입반출 물자 통관 절차 구체화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 부대 내부 보고절차 정립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지침서 상 절차 준수여부 확인(반기 1회) ○ 격년 단위 국제수송·통관업무 실무지침서 개정
25. 항만단(통관과)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통관업무 감독자 및 실무자 교육기회 확대 • 참모부서(해상수송과) 온라인 교육(2회) 시행 : '24.12.30. ~ '25.1.29. / '25.1.29. ~ '25.2.28. • 통관 실무 관세사 초빙 교육 시행 : '25.4.2. ~ 3. • 유관기관(세관) 방문 및 업무 협의 : '25.4.9. ○ 유관기관(부산세관) 방문 및 업무 협의 • 부산세관 주관 연 6회 통관 주요사항 교육참석 • 부산세관과 통관절차, 수입신고서 합동 점검 시행 • 부산세관 - 항만단(통관과) 상호 교류방문 시행 나. 향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한국무역협회) 연 1회 무역 실무교육 정례화 • 예산 반영 / 확보, 통관과 전원 교육 추진 예정 ○ 관세청(부산세관)과 협력을 통한 감독체계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 피아식별 방안으로 피아식별띠 대신 접착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부대별 작전환경과 임무 등 고려 군(사)단별 야전예규에 반영하여 피아식별 방법 적용 중 ※ 피아식별띠, 야광밴드, 피아식별장비(IR)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중 ○ 피아식별띠는 △ 상황발생 초기 전군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측면과 △ 도시지역 등 작전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다수의 부대에서 사용 중 ○ 작전환경과 부대 임무를 고려 접착테이프를 활용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피아식별 방안 검토/발견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피아식별을 위한 다양한 장비(IR 장비 등) 도입·추진(~ '27년) ※ 향후 '27년까지 13만 8천개 보급 예정 ※ 부대별 임무와 작전환경 고려 전력화 예정 ○ 효과적인 피아식별 대책 방안 강구(지속) ※ 접착테이프 활용방안 등 신규 아이디어를 각종 훈련 간 전투실험 시행·검증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각군의 보안성과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협조체계) 불법드론 법적조치 체계 구축 • 불법드론 확인 시 운용자 신변확보 및 경찰 인계 - 지역 경찰서-지역책임부대 신고연락망 구축 - 경찰, 불법 드론 운용자 법적조치(과태료) • 불법드론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수방사·1군단) - 드론비행 승인 신청시(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의 시리얼 넘버를 입력토록 절차 보완 ※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협조 - 군부대는 RF 스캐너 운용 시 시리얼 넘버 확인을 통해 승인·미승인 드론 여부 확인 가능 ○ (대응능력) 대드론체계 전력 증강 추진 • 실시간 불법드론 대응 가능한 대드론체계 (탐지-식별-전파차단) 전력화 • 레이저 대공무기 등 드론에 특화된 물리적 타격장비 전력화 • 다양한 드론대응체계를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조기 전력화(소요군, 방사청 연계) 나.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대드론체계 전력 증강 추진 ○ 군 시설 내 드론 테러 대비 훈련 정례화(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1.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대한 위협 평가와 사이버작전사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전군 사이버작전 지휘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방부 훈령 및 사령부 작전예규 개정('24.12.) ✓ 제61조 수행체계 ⑤-2항 · 작전통제 대상 부대(각군 사이버작전센터 등)의 <u>작전대비태세를 점검 및 작전임무 수행능력 평가</u> 후 결과를 합참 보고 및 각군 본부 제공 • 사이버작전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작전통제부대 점검('25. 9. ~ 12.) ※ 각군 사이버작전센터, DIDC, CNOC 6개 부대 ○ 사령부 수시 부대계획 건의 • 사이버 방어작전 임무수행 기능 강화를 위한 방어 임무 조직 확대 ※ 정보체계단 사업관리대 개편 → 방어임무팀 확대 ○ 변화된 전쟁 양상 및 안보환경 고려 군구조·전력체계 발전 • 첨단 AI 전력구축을 위한 조직 신설 ※ '26년 사령부 연도부대 계획 반영, 작성 중 (~'25.9.) • 미래 사이버전장 대응역량 확충 ※ 사이버전장관리체계 탐색개발(1단계) 추진 (~'25년) ○ 전·평시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발전 • 방어(신속)지원팀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집체훈련 실시('25.9. ~ 1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2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대한 위협 평가와 사이버작전사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원 보강 검토 ※ 사이버 특기 전문인력 보강 등 ○ AI 첨단과학기술 기반 사이버 대응역량 확충 ※ 사이버전장관리체계 체계개발(2단계), 전력화(3단계) 지속 추진 ('26년~'30년) ○ 국제 사이버훈련 참가(~ '25.11.) ※ 사이버넷(10월/네덜란드) : 국제사이버 공방훈련 ※ 연합사이버훈련(11월/NATO) : 사이버 방어작전 절차 훈련 ※ 한미 사이버 동맹훈련(11월/미국) : 한미 공조 기반 사이버 방어작전 수행능력 확보 ○ 전방위 사이버 위협에 대비 24시간 관제 체계를 운영하여 전투대비태세 유지 ○ 범국가적 민·관·군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

다. 육군본부(29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초급간부 지원율이 저하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전수 조사를 진행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간부 지원에 미치는 내·외부 영향요인 분석 연구용역 의뢰 : '25. 3월 * 불특정 미지원 인원 대상 설문 및 심층 인터뷰 포함 ○ 용역 수행기관 선정 : '25. 9월 * 연구용역예산 : 약 0.5억원 나. 향후 추진계획 ○ 계약 및 연구용역 착수토의 : '25. 10. 17.(금) ○ 전수조사 등 용역 수행 (6개월) : '25. 10. ~ '26. 3월
2.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초급간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을 위해 선발소요 확대 : 기존 1,350명 → 1,570명, '24년부터 적용 중 ○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방향 검토 : ~ '25년 ○ '3사관학교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시 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KIDA) : ~ '26. 3월 나. 향후 추진계획 ○ 3사·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선발제도 개선 방안 마련 : '26년 전반기
3. 경계작전을 민간 군사기업 (PMC)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 구성의 필요성을 검토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 민간자원 활용 전담직위 추가: '25. 5. 20. •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실內 민간자원활용 업무 전담군무원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추가 편성 • '경계작전'을 포함, 「軍 민간자원 활용(아웃소싱)」 관련 정책추진을 전담 ○ 「군사시설 경계분야 민간위탁」 시범사업 예산 확보 노력 및 육군 소그룹 토의 (정작부, 진행) • '25년, 연도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미반영, '26년, 사업예산 반영 노력 (국방부 → 기재부 / 지속) • '27 ~ '31 국방중기계획 편성 건의: '25. 5월 완료 ○ 경비업법 개정 건의안 진행경과 확인 (지속) * 한기호 의원실 ('25년 하반기, 공동발의자 모집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전담조직 연계 육본 기능별 사업추진 ○ 「민간자원 활용 확대 추진」 관련 시범사업 예산확보 시 대상부대/지침 검토 (하달)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육군 정책자료 상 아미타이거 4.0 통합기획단 출범 시기를 잘못 표기한바 이를 시정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육군 정책설명자료 수정 및 보완 • 기존 Army TIGER 진화적 발전 개념도 시작점에 표기된 ‘시범부대 운영(’22년~)’ 부분을 삭제하고, ‘통합기획단 운영(’19년)’으로 수정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5. 군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군 자녀 진로상담프로그램 신설 : ’24. 10월 ~ ’25. 2월 / 27회 시행 * 2차 사업 : ’26. 1월 ~ ’26. 2월(예정) ○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설 추진 * 영천고등학교 / ’26년 3월 개교 예정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거지원제도 개선 추진 * 중3 ~ 고3 자녀 졸업시까지 정주여건을 보장토록 국방부 훈령개정(’25. 10. 1.) ○ 군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시행 * 10개 프로그램 5,500명 지원 ○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3,897명 대상 45.6억원 지원 나. 향후 추진계획 ○ 중 · 장기 추진사항(검토중) • 군 자녀 전학 시 학교 적응프로그램 개발 • 군 관사단지 內 스터디카페, 독서실 설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학군 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사관생도에 대한 지원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 가. 시정·처리결과 ○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은 지휘공백, 타 출신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초임 획득소요 증가 등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장기과제로 관리 ○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 관련 분석평가단 연구의뢰 : '25년 후반기 ~ '26년 후반기, 1년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내용 검토 : '26년 후반기 ○ 장려금 등 학군 후보생의 지원책 확대 가. 시정·처리결과 ○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추진 • '25년 (1,200만원) → '26년 (1,600만원) - '26-'30 중기예산 반영 건의 - '26년 연도예산 획득 활동 ※ 기재부 예산 심의 결과 (1,200만원 동결) ○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추진 (사관생도 봉급 고려) • '25년 (18만원, 10개월) → '26년 (36만원, 10개월) - '26-'30 중기예산 반영 건의 - '26 연도예산 획득 활동 ※ 기재부 예산 심의 결과 (18만원 동결) 나. 향후 추진계획 ○ 단기복무장려금 지속 인상 추진 • 간부 획득률 향상을 위해 단계별 인상 추진 (목표 : 2,600만원) - '27년 (1,600만원) → '28년 (2,100만원) → '29년 (2,600만원) ○ 학군생활지원금 지속 인상 추진 • 사관생도와 의 형평성 고려 교내교육 시간에 합당하도록 지급액 지속 인상 - 목표 : 월 36만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군인을 위한 밀리터리 타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미래형 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연구용역을 위한 국방부 시설정책 연구용역 소요제기 : '24. 12월 ○ 국방부, 정책연구비 재배정 : '25. 3월 ○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부대배치 방안』 연구를 통해 미래 주둔지 면적기준 정립 : '25. 3월 ○ 『육군 시설기획 및 기준발전 방안』 연구를 통한 부대통합 개념을 적용한 군사시설 발전방안 제안 : '25. 7월 ○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통합 방안』 연구 계약 : '25. 9월 * 연구기간 : '25. 9. 9. ~ '26. 2. 9. (5개월)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개혁 4.0에 따른 부대배치 시 군사시설타운화(부대통합) 개념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예정
8. 화생방보호의 불량률이 56%에 달하므로, 빠른 시간內에 하자 물자를 조치	가. 시정·처리결과 ○ 화생방보호의는 유효기간이 있는 품목으로 신뢰성검사 결과 불량품은 '27년까지 전량 교체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중 • '25년 약 15만벌 획득, 연말 65% 보유 • '26년 약 19만벌(453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나, 증액이 필요함. ○ 화생방보호의 확보를 위해 예산 반영 노력 지속 • '27 ~ '3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연도별 소요량 반영 : '25. 1. 17 • '25 ~ '29 국방중기계획 소요 예산 반영 : '25. 2. 24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요구 대비 부족 예산 증액 추진 ○ '27년까지 부족 화생방보호의 확보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제2논산훈련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미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 하반기 육군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25. 6. 12. • 연구과제 : 제 2육군훈련소 창설 필요성 검토 및 미래 신병교육체계에 대한 연구 • 연구기관 : 부사관제도/역량강화연구센터 • 연구기간 : '25. 8. ~ '26. 3월 ○ 연구과제 착수토의 및 착수계획 보고: '25. 7. 25. • 스캐닝 분석 (PEST-SPRO)을 적용하 군 내·외부 상황평가(적 위협, 병역자원 현황 등) 후 창설 필요성 우선 검토 • 미래 전장환경 변화 및 무기체계 고도화 등 고려 육군 신병교육체계의 개선소요 도출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추진 중간토의 및 보고 : '25. 11월 · 12월 ○ 정책세미나 개최 : '26. 1월 ○ 최종 보고 : '26. 3월 ○ 연구결과 활용계획 보고 : '26. 4월
10. 과학화 경계작전 고성능 카메라 217대 중 75대에 문제가 발생한바, 무상 보수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	가. 시정 · 처리결과 ○ 장애 현상 확인 / 개선을 위한 합동토의 * '24. 10. 24./ 정작부, 전력 · 시평단, 업체 (코맥스, 쿠도) ○ 보수소요 현장확인 / 후속조치 : ~ '25. 4. 22. [장애 (보수 소요) 확인] * 현장방문 ('24. 12. 12. ~ 13.) ① 함체 내 '전원공급장치' 전원차단 현상 ② AI 인식률 95% 달성 ③ 열상카메라 고장 * '25. 2월, 무상 A/S기간 연장합의 (~ '25. 9. 30.까지) • ① 함체 정비 완료 (~ '25. 3. 11. ~ 4. 22, 202개소) • ② AI 인식률 향상 위한 S/W 업데이트 완료 ('25. 4. 4. ~ 15, 67개소) • ③ 열상카메라 정비 (S/W 개선 및 패치) • 국내 정비사업소 설치 : ~ '25. 8. 13. 부 * 코맥스, 쿠도 (이스라엘 OPHIRO 社의 기술 이전) • 열상카메라 소 장비 전면정비(107대): ~ '25. 9. 18.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외주정비용역 계약을 통해 정상 정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박격포 포탄을 활용한 드론 부대 구성을 고려	가. 시정 · 처리결과 ○ 박격포와 드론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부대를 2040 부대구조에 반영 기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혁신 4.0 수정 1호 반영
12. 헬리콥터 도입 예산 대신 드론에 대한 첨단장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부 · 합참의 소요최적화 추진과 연계하여 대형공격헬기 2차 대체전력 검토를 위한 정책용역연구 및 분석실험 실시 •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전력소요 최적화 연구 ('24. 9. ~ 11월 / KIDA) • 대형공격헬기 2차 작전효과 분석 ('24. 11. ~ '25. 2월 / 합참 분석실험실) • 유무인항공전력 작전효과 분석 ('24. 12. ~ '25. 3월 / 육군 분석평가단) ○ 전훈분석, 병역자원 감소, 국방재원 및 미래전 양상 등을 고려 대형공격헬기를 대체하는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의 소요최적화 추진방향 결정 • 제 363차 합동참모회의 : '25. 5. 26 ○ 대형공격헬기 대체전력 (공격무인기, 자폭드론 등) 소요검토요청서 제출 완료: '25. 7월, 합참 나. 향후 추진계획 ○ 대형공격헬기 대체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추진 : ~ '26. 6월 / 합참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단일 사관학교로 만드는 방안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 하반기 국방부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 연구범위 / 방향 : 협의 중 (국방부 - KIDA) • 연구기관 : KIDA • 연구기간 : '25. 9. ~ '26. 4월 ○ 연구과제 착수토의 : '25. 7월 나. 향후 추진계획 ○ KIDA 연구결과 토의 : '26. 12월 ○ 국방부와 연계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신중 검토 후 지속 추진 예정임
14. 학군사관과 학사장교를 통합하여 단일 사관학교로 만드는 방안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학군, 학사는 복무기간, 획득규모, 교육체계가 상이하여 통폐합 시 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학사 → 학군 통합시 ① 복무기간 단축으로 획득 소요 증가, ② 군의·법무장교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 ③ 출신 폐지로 인한 갈등 등 리스크 예상 * 학군 → 학사 통합시 복무기간 증가로 획득에 부정적 영향 ○ 학군·학사사관 통합시의 장·단점, 예상 리스크 등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한 발전방안 검토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의뢰 : '26년 전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탄약창을 조속히 지하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탄약저장시설 지하화 추진 정책결정 및 계획 수립 : 국방부('18. 8월) • 9개 탄약창 중 4개 탄약창 지하화 계획 반영 ※ 탄약저장 효율화 방안 연구('14년, KIDA) 결과 고려 ○ 7탄약창·8탄약창 지하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 : '25. 4 ~ 10월 나. 향후 추진계획 ○ 7탄약창·8탄약창 지하화 사업 •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 : '26년 • 예산확보 및 설계 : '28년 이후 ○ 5탄약창·11탄약창 지하화 사업 •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선행연구용역 : '26년 •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 : '27년 • 예산확보 및 설계 : '29년 이후
16. 보병 위주의 인재 양성이 아닌 미래전에 부합하는 포병, 항공, 공병 등의 인재를 양성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미래 군구조 연계, 병과·특기 균형발전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구조 개선 추진 * 첨단과학기술특기 및 포병·방공 중·소령 정원 확대, 항공·군수 병과 중령 진출률 개선 등 ○ 국방부 연계, 과학기술인재(드론운영인력, 사이버특기, 과학기술전문인력) 인사제도/훈령 개정 추진 • 과학기술 전문자격 신설 : '24. 7월 • 과학기술인력 보직기간, 필수직위 인정, 활용 직위 검토 등 ○ '26년 장교 진급선발 목표 및 중점 반영 • 미래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과학기술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인재 선발 • 병과·특기별 능력 위주의 자유경쟁을 통한 우수자 선발 나.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추진사항(검토 중) • 직무를 기초로 통합·활용 가능한 과학기술인재 인사제도 마련 ○ 국방부 주도, 병과·특기 통합과 연계 인사관리 제도 개선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CCTV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CCTV의 보안 점검을 매년 철저히 진행	○ CCTV 종합관리대책 관련 가. 시정·처리결과 ○ '24. 7월 철거된 CCTV 대체 설치 완료 (32개부대 1,536대) ○ 군내 도입 및 운용중인 CCTV 전수조사 완료 (9개 사업분야, 36,626대) 나. 향후 추진계획 ○ CCTV 도입 시 보안성 확인 강화 * 국정원 보안검증을 통과한 장비만 도입 ○ 국산 CCTV 우선도입 및 부품 원산지 정보제출 의무화 관련 제도 개선 ○ CCTV 조달 및 장비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단일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 구축 ○ CCTV 보안점검 관련 가. 시정·처리결과 ○ 육군은 '24. 8. 26부로 00산 부품이 포함된 CCTV 철거를 완료하였음. ○ 또한 육군에서 도입·운용중인 CCTV에 대해서는 매년 수시 보안점검을 시행하여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CCTV 도입 간 보안적합성 검증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운용간 매년 보안점검을 시행하여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8. 육군 간부모집 앱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모바일로는 지원서 작성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가. 시정 · 처리결과 ○ 인프라가 우수한 업체와의 신규계약을 통해 앱 고도화 추진 중 • 서버 이전조치를 통한 앱 서버 안정화 • 앱 구성 및 구동 최적화 •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업데이트, 이미지 개선 • 고도화 추진 1차 시연회 (8. 6.)를 통한 고도화 추진경과 중간 확인 및 점검 ○ 간부모집 오프라인 홍보 간 앱 소개 및 가입을 통한 모집홍보 서비스 제공 • '24년 12월 기준 가입자 1,200여 명에서 '25년 10월 기준 2만 1천여 명으로 가입자 17배 이상 증가 • 업체와 연계 고아미캠프 홍보어플 부스 운영 : 6회 * 삼육대·강원대 홍보부스, 안동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용산 미래교육한마당 꿈을 Dream, 고양 고졸인재채용박람회, 서울 롯데월드 팝업부스, 구미 항공방위물류박람회, 지상군 페스티벌 운영 ○ 앱 활용을 통한 간부모집 관련 정보 습득 후, 지원서 작성메뉴 클릭 시 모바일에서 작성이 가능한 육군 모집 지원서 페이지로 링크 연결 지원 中 • 모집과정에 맞는 지원서 작성요령 콘텐츠 제공 • 모집과정별 이미지 게시를 통한 홍보효과 나.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모집 홍보관들이 지원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잠재적 지원자 관리 메뉴」 신규 개발 활용 • 모집홍보관용 지원자 DB관리 기능 추가 개선 ○ 간부 신분별 모집 과정에 맞춤형 영상 콘텐츠 구분 탑재로 지원자 맞춤 정보 서비스 제공 • 병과별 소개자료, 병과 간접체험 콘텐츠 개선 ○ 고도화 추진 2차 시연회 추진 : '25.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K9포신교체 훈련 정기화에 따라 예비 포신 여유분 확보 등 전시준비태세 방안 마련	가. 시정 · 처리결과 ○ 포신 교체훈련은 대부대 훈련 (대화력전 FTX, 포병여단 전술훈련, 전투지휘검열 등)과 연계 정비부대와 통합하여 시행 중임. * 예하부대 부대훈련지침, 부대훈련지시에 기반영 나. 향후 추진계획 ○ 포신 교체훈련 지속 시행 (반기 1회)
20. 육군 32사단 신병 교육대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 입대 후 심리상태 평가와 관리 방법을 개선	가. 시정 · 처리결과 ○ 복무적합도검사 시행지침 개선 (국방부, '25. 2. 28.) • 입영 후 신병교육부대에서 복무적합도 검사 추가 시행 기 존 ①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간 복무적합도 검사 시행 * 시기: 입영 14일~3일 전 → 개 선 ① 현행유지 ② (추가) 입영 후 신병 교육 부대에서도 복무적합도에 대한 검사 시행 * 시기: 입영 후 3일 이내 ※ 부대 입영 등 환경변화로 인한 입영 장정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식별 / 관리 ○ 신상관리위원회 시행 방안 개선 / 규정반영 (육군, '25. 3. 14.) • 대대급 이상부대 신상관리위원회를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부대운영과 연계된 병력관리 방안이 이행되도록 개선 - 1부 : 도움·배려 등급 선정 및 관리방안 토의 - 2부 (추가) : 교육훈련, 경계작전 등 병력중심의 부대운영에 대한 사항 토의 (도움·배려 장병의 교육훈련 참가여부, 참가방법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파주에 위치한 제1보병사단에 대해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경인북부수협에서 납품하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제 1보병사단의 부대조달부식 중 수산물은 1군지여단에서 계약 중이며, '25년 계약은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와 계약 중임. * '25년 계약기간 : '25년 4. ~ '26년 3월 ○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제8조에 의거 수협중앙회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업무 추진하겠음
22.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작전세트를 조기에 보급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북핵 위협 대비 방사선을 측정하고 피폭량을 관리할 수 있는 「핵·방사능작전세트」를 무기체계로 획득 추진 중 ※ '25.7월 소요검토 요청서 제출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핵·방사능작전세트」에 대한 소요결정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3. 경찰청이 계약을 취소한 테이저 제품을 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다시 평가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4년 구입한 전자총은 총 697정(제조사 : ㈜인포스테크놀로지)으로 1·2차 입찰공고 결과 유찰되어 수의계약 체결 : '23. 9월 ○ 요구성능 충족 검증(성적서, 운용시험) : '24. 1월 ※ 전자총격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검사필 획득을 통해 납품) ※ 전자총 사용 전 업체 및 사용자 교육 실시 ○ 장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용 중인 전자총 안전검사 조항 육규 반영 : '25. 8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전자총 획득 사업은 '24년 완료되어 예정된 사업은 없음. ※ 향후 사업추진 필요시 제품의 적합성 및 안전성 검증 강화
24. 탄피회수 완화 시범사업에 대해 전 부대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탄피회수 완화' 시범적용 ('24. 3. ~ 9월) 이후 야전부대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 ('24. 8. ~ '25. 6월) 결과 실탄분실 예방을 위한 보완소요 도출 * CCTV 등 채증장비 및 물자 준비, 사격 종료후 탄피 회수를 위한 사격장 환경 조성 등 ○ 육군규정 개정 소요 검토 : '25. 6월 * 탄약 규정, 교육훈련지원 규정 나. 향후 추진계획 ○ 실탄분실 예방을 위한 사격장 환경 보강 등 보완소요 조치 이후 시행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5. 특전사에 미국산 칼을 복제한 중국산 모조품 칼을 보급한 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0년부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도검류 제조·판매업 허가업체로 한정 ○ 적격업체 선정 및 우수제품 조달을 위한 2단계 경쟁계약 적용
26. 광주 평동 군 훈련장은 국가적 낭비 초래 ·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 지역균형 발전 저해 야기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폐쇄를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광주 평동 군훈련장 폐쇄 검토 결과 : 유지 • 평동훈련장은 보병학교, 부사관학교, 2신속대응사단 및 2작전사 예하 사단들이 사용하는 박격포 사격훈련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임 • 과거 광주시에서 국방부로 평동훈련장 이전을 요구하여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격장 이전 대상 지역인 장성군의 반대로 무산됨 • 평동훈련장 수준의 동일한 사격훈련 부지 및 이전부지의 지자체 · 주민 갈등 해소 등 이전 조건이 충족되기전까지는 평동훈련장의 이전 및 폐쇄는 제한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 마일즈 사업 부정수익 업체 이익 환수	가. 시정 · 처리결과 ○ 관련자(김OO 원사) 1심 선고 : '25. 5. 13. •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725,649원 • 파면 : '25. 5. 20. ○ 뇌물수수 업체 (독도, 네스랩, 한글과컴퓨터)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9월 중 소환조사 예정임 나. 향후 추진계획 ○ 뇌물수수 3개 업체에 대한 방사청 (조달계약 기관)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12월 한 조치 예정임
28. 2023년 8월 코브라 헬리콥터의 회전날개가 분리된 사건의 조속한 사고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	가. 시정 · 처리결과 ○ 사고원인 분석 : '23. 12월 • 분석기관: 제작사(美 카만사), 국내 창정비업체(UI헬리콥터) • 사고원인: 회전날개 상부 들뜸 → 진동발생 → 날개이탈 ○ 검사방법 검토 / 검사 추진 : '23. 8월 ~ '24. 11월 • 기관별 검사방법 (상부들뜸) 검토 결과 ① 제작사: 육안, 두드림 검사 권고 ② 국내 창정비업체: 두드림 검사 등 16개 항목 검사방법 제시 ③ 공군 항공기술연구소: 회전날개는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비파괴 검사는 적용 불가 ※ 국내 창정비 업체에서 쏘 코브라헬기 검사결과 이상없는 헬기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재개 ('24. 12월) ○ 재발방지 대책: 헬기 운용시간 매 150시간마다 창정비업체 정기검사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 수통 초도보급품 지급을 위한 '27~'31중기계획 및 국방부 피복정책실무회의결과를 보고	가. 시정·처리결과 ○ '27~'31 중기계획 관련 육군 실무심의 진행 : '25년 9월 ○ '25-1차 국방부 피복정책 실무회의 : '25. 4월 * 각 군별 수통 보급 및 관리에 대한 의견 종합 후 하반기 재의결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국방부 피복정책 실무회의(예정) : '25. 11월 ○ 국방부 피복정책 실무회의 최종 결과에 따라 중기계획은 국방부 검토 단계에서 조정(예정) : '25년 11월

라. 해군본부(13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해군은 고가의 군수품, 총기·탄약류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분실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군수품 관리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고가의 군수품, 총기·탄약류 분실사고 방지를 위한 장비 관리부대 예방대책 수립/시행중 • 관련 지침에 따른 장비운용 준수 강조 • 장비 분실사례 분석에 따른 운용절차 보완 및 장비관리 강화 • 훈련 전/후 제작사 주관 장비 예방정비 강화 • 각종 훈련 시 장비 운용요원 대상 교육 활성화 나. 향후 추진계획 ○ 장비관리부대 군수품 분실사고 재발 방지 예방대책 준수 철저 및 장비주관부서 주관 관리실태 지속 확인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대함미사일의 미발사 문제 및 명중률 저조 문제에 대해 실제 훈련시 확인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 전투탄 합동 실사분석팀을 구성하여 실사격 계획에 따라 운용 • 주관/대상 : 해본 / 해군, 국과연, 기품원, 제작사 • 수행업무 : 실사격 전 발사체계 및 탄약 점검, 실사격 간 데이터 수집, 사후분석 등 ※ '17년 최초 시행, 매년 계획 수립 후 운용 중 ○ 국과연과 '25년 전투탄 실사분석 용역계약 체결 후 과학적 결과분석 수행 • 계약기관/기간 : 국과연 / '25. 3.21. ~ 12.31. • 계약범위 : 유도무기 운용 간 데이터 측정 및 분석 등 ※ '23년 최초계약, 매년 용역계약 체결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 전투탄 실사('25. 5월 ~ 11월) • 탄종 및 수량 : 함대함 하푼 등 11종 22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SM-3 도입에 있어 우리 군에 실질적 전력 증강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한 문제들, 가격, 수량과 성능, 전력화 시기, SM-2의 실패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해야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KIDA 주관 사업타당성조사(~'25. 2월)를 통해 SM-3 도입사업에 대한 종합적 재분석 수행 • (조건부 타당)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간 SM-3로 대응 가능한 위협의 일부 변화, 소요량 수정 - 기존(육상발사 BM, SLBM) → 수정(SLBM) ○ 소요량 수정 소요제기(해군) : '25. 7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소요량 수정 소요결정(합참) : '25년 하반기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방사청) : '25년 하반기 • 소요량 수정, 비용 재검토 등 반영 ○ LOA 수락(계약 체결) : '26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해군진해호텔을 비롯한 위탁 관리 중인 모든 해군 호텔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자체 감찰 및 형사고발 조치 • 진해 해군호텔 감찰 : '24.10월 ~ 12월 • 서울 해군호텔 감찰 : '24.12월 ~ '25. 3월 • 진해·서울 관리위탁업체 형사고발 : '25. 5.22., 6.13. 나. 향후 추진계획 ○ 서울·진해 관리위탁 업체 및 군 관계자 대상 추가 감찰 : 계속 ※ 식별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경찰) 및 수사(군 관계자) 의뢰 예정 ○ 형사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 등 협업 : 계속 ○ 관리위탁업체 계약해지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 계속 ○ 세무조사 의뢰(검찰, 국세청) ※ 경찰 협조하 수사 상황 고려 조사의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해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해양 영역인식(MDA)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통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양안보 유관기관 간 MDA 발전 협업 : 계속 •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신규과제 반영 합의 ※ 제4회 정책협의회 시 3자 공동의제로 토의 예정('25.12월) • 외교부 주관 인태전략 해양안보 시그니처 사업 반영 ※ 외교·국방·해수부+해군·해경 간 협약서 체결 예정('25년 후반기) 나. 향후 추진계획 ○ 해양안보 정부기관 주도 下 해양위원회 설치 추진 협업 : 계속 ※ 관련 의제 선정·추진 시 해군 차원에서 지원·협조 예정 ○ 산·학·연·관·군 협력을 통한 해군 MDA 추동력 확보 : 계속 • 해양안보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강화 ※ MDA 관련 세미나 공동개최 등 •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를 통한 공동 발전 추진 ※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책지원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수입 함정과 항공기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인력 확충 및 MRO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정비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완료('24.12월) / 시행 중 • 적정 군직정비능력 유지에 필요한 기술직 군무원 인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및 발전 필요분야 식별 관리 중 ○ 함정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함정 MRO 추진계획 수립 완료('24. 9월)/시행 중 • 현 함정 군직정비체계와 가용재원 등 대내·외적 환경 고려 창정비, 유지보수 등 분야별 단계적 MRO 추진, 함정 MRO로 최종 통합 예정 ○ P-3/Lynx 등 해외도입 항공기는 국내업체 주관 외주 창정비 수행 중/신규도입전력 (P-8A/MH-60R) 대상 확대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입항 후에도 육상 휴식 공간이 없어 함정에 머물러야 하는 함정 근무지를 위해 육상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함정 근무자의 업무 부하 경감 및 휴식을 통한 피로도 감소를 위해 함정 승조원 순환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육상사무실 신축 소요제기 완료 ※ '26 ~ '30 국방중기계획 육상사무실 반영 현황 <table><tr><th>순번</th><th colspan="2">위치</th><th>기간</th><th>금액(억)</th></tr><tr><td>1</td><td>1함대</td><td>동해</td><td>'30 ~ '33</td><td>161</td></tr><tr><td>2</td><td>2함대</td><td>평택</td><td>'30 ~ '33</td><td>161</td></tr><tr><td>3</td><td>3함대</td><td>목포</td><td>'30 ~ '33</td><td>161</td></tr><tr><td>4</td><td>작전사</td><td>부산</td><td>'30 ~ '33</td><td>118</td></tr><tr><td>5</td><td>가동함대</td><td>제주</td><td>'30 ~ '33</td><td>180</td></tr><tr><td>6</td><td rowspan="3">진기사</td><td rowspan="3">진해</td><td>'26 ~ '29</td><td>148</td></tr><tr><td>7</td><td>'28 ~ '31</td><td>113</td></tr><tr><td>8</td><td>'27 ~ '31</td><td>470</td></tr></table> 나. 향후 추진계획 ○ 육상사무실 신축 예산확보 및 건립 추진 ※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육상사무실 소요 추가 검토 예정	순번	위치		기간	금액(억)	1	1함대	동해	'30 ~ '33	161	2	2함대	평택	'30 ~ '33	161	3	3함대	목포	'30 ~ '33	161	4	작전사	부산	'30 ~ '33	118	5	가동함대	제주	'30 ~ '33	180	6	진기사	진해	'26 ~ '29	148	7	'28 ~ '31	113	8	'27 ~ '31	470
순번	위치		기간	금액(억)																																						
1	1함대	동해	'30 ~ '33	161																																						
2	2함대	평택	'30 ~ '33	161																																						
3	3함대	목포	'30 ~ '33	161																																						
4	작전사	부산	'30 ~ '33	118																																						
5	가동함대	제주	'30 ~ '33	180																																						
6	진기사	진해	'26 ~ '29	148																																						
7			'28 ~ '31	113																																						
8			'27 ~ '31	47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진해는 협소한 수로에 많은 함정이 있어 적의 주요 타격 목표가 될 수 있고, 운용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산에 해군작전사령부를 둔 취지를 살려 부산 해군기지의 활용성을 높일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진해기지 과밀 해소 및 부산기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지 이전 • 32전투전대 이전('19.11월 / 목포기지 → 부산기지) • 53상륙전대 이전('21.12월 / 진해기지 → 부산기지) • 해양정보단 이전('23.10월 / 진해기지 → 부산기지) ○ 부산기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부산항만방어전대 이전(영도→부산기지) 검토 및 계획수립 : '25. 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항만방어전대 이전 추진 : ~ 완료시 ※ 중기부대계획 반영, 시설 사용계획 수립, 부대 이전 등 ○ 해군 함정의 진해기지 정비 의존도 경감을 위한 외주정비(MRO 등) 확대 추진 ※ 부산 해군기지는 함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 지원만 가능하여 선체 및 주요장비정비 시 진해기지 이용 불가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해양방사능 측정 장비가 도입 한 달만에 고장이 나고, 초기 계획과 다르게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서 사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해군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양방사능 측정장비 도입 관련 감사 의뢰 (해본 정보작전참모부 → 감찰실) ※ 해본 화생방/특수작전과-1667호('25. 4.29.) ○ 해본 감찰실 주관 감사 실시 : '25. 6월 ~ 8월 • 측정장비 도입 후 고장발생 여부 : 문제없음 ※ 오류/고장은 납품업체를 통해 조치 완료되었으며, 최초 도입된 장비로 시험운용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 해상용을 육상용으로 사용 여부 : 문제없음 ※ 시험운용기간 중 식별된 문제점/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보고·의견 수렴·전문기관 자문 등 절차를 통해 관리·운용 방안을 개선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 없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조치완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해양 방사능 측정에 있어 한국원자력 안전연구원 등 타 기관과 교차 검증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양방사능 측정장비 시범운용기간('23.12월 ~ '24. 6월) 이후 비정상 측정 사례 없음 ○ 해군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 교차 검증 절차 정립 완료('24.11.19.) ※ 해양방사능 측정결과 비정상 측정값 확인 시 대응절차 하달(해본 군수운영/재난관리과-8574호 / '24.11.19.) → 관련자료 제출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해양방사능 측정결과 비정상 측정값 확인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교차 검증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해군 병사에게도 육상 근무 시 병 기본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군 병사 육상 근무 시 사격 등 병 기본훈련 실시 지침 수립완료 / 시행 중(해본 훈련과-8670호 / '24.12.31.) • 체력단련·사격술, 화생방, 응급처치법 등 생존교육 실시 ※ 화생방 개인방호(방독면 착용 하 사격훈련 포함) 및 전투부상자 처치(심폐소생술 포함) 절차 숙달 강화 • 제식훈련 및 군대예절 수시·기회교육 강화를 통한 복종심 함양 • 편제화기에 따라 개인별 화기 휴대 하 육상소화기 사격훈련 실시 나. 향후 추진계획 ○ 연간 해군 부대훈련 지침 반영 및 개선사항 식별:계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군무원 인력 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군무원 주거 지원 등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기준에 따라 일부 군 관사 지원 • 부대 여건 고려 일부 군무원에게 관사 지원 - 1함대(105세대), 2함대(120세대), 3함대(24세대) 등 ※ 훈령에 의거 '장기공실 예상' 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추진 중인 '군무원 주거 지원 개선' 계획에 따라 협업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함정근무와 같은 고위험 직무에 대해 수당 인상을 포함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6년 해군 군인 및 군무원 처우개선 사업설명서 제출(→ 국방부) : '25. 4. 4. • '25년 전력운영비(인건비) 예산 편성 時 함정근무자 함정근무수당 인상 요구(→ 국방부) : '25. 2월말 • 국방부, 수당관련 정책실무회의 : '25. 5.29. • 인사혁신처 대면설명 : '25. 6.20. ○ '25년 함정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확대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제외 : 함정근무자 포함('24년부터 적용) • 지급시간(실적급 기준) - (기준/'24년) 최대 100시간 → (변경/'25년) 최대 150시간 ※ 관계법령 -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065호, '23.12.29. 제정) -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3011호, '25. 1.31. 개정) - '25년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지침 하달 (국방부 복지정책과-194호, '25. 1. 7.) 나. 향후 추진계획 ○ '27~'31년 국방중기계획(인건비 분야) 상 관련 예산 편성 상향 요구 : '25. 12월 • 함정근무수당 인상, 함정장려수당 신설

마. 공군본부(14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고고도·중고도 정찰무인기의 중요성과 무인기 조종사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항공수당의 대폭인상을 검토하고 조종사 충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6년 공군 수당 처우개선 요구(안) 반영('25. 3월) • 무인기 전문조종사 장려수당(5-2호) 인상 - 무인기 전력화에 따른 전문조종사 획득 및 안정적 운영, 열악한 근무환경, 유인기 비행 훈련 시행 등 고려 수당 인상 추진 - 장려수당 인상: 月 18만원 → 위관 30만원, 영관 40만원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25. 5. 29.) • '26년 처우개선 요구사업 심의 시 국방부 편성(안) 반영 ○ 인사혁신처 사업설명('25. 6. 20.)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예산 편성 반영 추진 : '25. 6월~ • 인사혁신처, 기재부, 국회 등 유관기관 설명/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KF-21 전투기 Block-III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공군은 현재 “KF-21 Block-III” 명칭으로 추진되는 소요는 없으나, ○ 차세대 전투기 필요성이 있어서, 합참에 통합소요전력(장기관리대상)으로 제출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차세대전투기 개발을 위해 기술기획 반영 추진
3. 2030년까지 확보될 위성 전력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 및 레이더우주감시 전력의 신속한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우주영역인식 능력 확대를 위해 적기 전력화를 추진 중임. •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는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25. 5월~'26. 1월 / KIDA 수행)이며, • 레이더우주감시체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예정임.('25. 9월 / 방사청 → 과기부)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반영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우주항공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주영역에 대한 인식능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024 열린우주포럼 개최('24. 11월) ※ 공군-항우연-천문연 공동개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교류회 참석('24. 12월) ○ 공군-우주항공청 우주위험대응 실무회의('25. 3월) • 우주정책과장, 우주항공청 우주위험대응과장 주관 민·군 협력분야 식별 ○ 우주항공청 공군장교 1명 파견('25. 4월) ※ 미사일우주정책과-1074('25. 3. 26.) 우주항공청 파견장교 선발 결과 하달 ○ 민·군 합동 우주상황조치 훈련 실시('25. 4월) • 공군 주관 항우연,천문연 참가 ○ 美우주사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참가('25. 4월) • 공군, 항우연, 천문연 참가로 긴밀한 협력수행 ○ 제4회 위성항법소위원회 참석('25. 6월) • KPS사업 추진간 우주청, 항우연 등 관련 부처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우주센터장 당연직 위원 위촉 ○ 레이더우주감시체계 공동기획연구 착수('25. 8월) • 다부처사업 추진을 위해 공군, 우주청, 항우연, 참가로 긴밀한 협력 수행 나. 향후 추진계획 ○ 공군-한국천문연구원 확대협의회: '25년 10월 ○ 공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무협의회: '25년 11월 ○ 열린우주포럼 : '25년 11월 ※ 공군-항우연-천문연 공동개최 ○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 '25년 12월 ※ 공군 참모총장-항우연 원장 공동위원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공군은 군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되지 않은 배상금이 있다면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지구배상심의회 피해자 의견 반영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한 방안 추진 ○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 포함을 명시하는 규정 개정 추진 ※ 공규 10-1 법무관리규정 상 지구배상심의회 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완료('25. 3. 25.부) 나. 향후 추진계획 ○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 위촉을 활성화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 명부 다수 확보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 제고 ○ 지구배상심의회 신속 집행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을 통해 민간항공사 조종사와의 보수격차를 줄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 전투기조종사 항공수당(갑1호) 10% 인상 완료('25.3월) • 영관장교 기준 월 109만원 → 120만원 ○ '26년 공군 수당 처우개선 요구안 제출('25.3월) • 전투기조종사 항공출동가산금 지급범위 확대 - 야간비행 1회시 1만원 추가 • 조종전문형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 복무기간 22년이상 중령이하 조종전문형 조종사(월100만원) ※ '26년 처우개선 국방부 요구안 반영('25.4월) ※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대면설명('25.6월) ○ [비행부대 운영 및 조종사 관리제도 혁신TF] 운영 및 실행 과제 도출을 통한 조종사 근무여건 개선('25.6월) • 비행대대 조직 개편, 비행계획 지침 및 제도 개선 등 근무여건 관련 과제(6건) 개선 추진 나. 향후 추진계획 ○ 숙련급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 재정립('25.9월) • 항공수당 인상 및 연장복무 계약제도 도입 등 검토('27년 국방부 처우개선 요구안 반영 목표) ○ 유관기관 수당인상 사업설명 및 반영 협조 ※ 인사혁신처, 기재부 협조 및 국회 승인 필요 ○ (수당인상 반영 시) 관련 법령/지침 개정 ※ 국방부령 및 공군 수당 지침 등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국가가 양성한 전투기 조종사가 민간항공사에 취업할 경우, 양성비용의 일정 부분을 민간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법무검토 실시('25.4월 / 공군본부 법무실) • 결과: 민간항공사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부담금 부과 불가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부담금 부과 불가 나. 향후 추진계획 ○ 조종사 양성비용을 민간항공사에서 부담하는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수준의 정책적 논의가 선행될 경우 공군 적극 수용 및 검토 예정
8. 공군 예비역 정책간담회에 초급간부가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골프 친목 행사로 오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예비역 정책간담회 장소변경, 골프운동(예비역 주관) 별도일자 시행 • 정책간담회 운영장소 변경: 군 직영시설(공군호텔) • 부대 견학 취소, 골프운동 예비역 주관 자체 시행 ※ 예비역 네트워크 강화 및 공군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나. 향후 추진계획 ○ 대내·외 상황 고려 '25년도 미시행 ○ '26년도 개선된 방식으로 지속 적용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블랙이글스 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영향에 대해 공군의 적극적인 입장과 대책이 필요하며, 발암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스모크 개발을 검토할 것	○ 블랙이글스 부대 소음영향 관련 가. 시정·처리결과 ○ 소음 최소화 비행 훈련방안 적용 • 소음피해 최소화 위한 비행운영시간 적용 • 주둔지역 비행횟수 감소 위한 타기지 훈련 ○ 장기 전력운용 검토 시 주둔기지 배치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 ○ 소음 최소화 방안 지속 적용 ○ 발암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는 스모크 개발 관련 가. 시정·처리결과 ○ 외부 개발업체에 저공해 스모크 개발 의뢰('21. 9월) ○ 저공해 스모크 개발 및 시범운영('22.~'25. 5월) • 공중 시현 및 보급절차 시험(이상없음) • 저공해 스모크 성분분석 결과 및 원료 공개('25. 2월) ○ 저공해 스모크 소요량 예산 확보 • 26년도 공군 예산안 국방부 제출('25. 3월) • 요구량: 전국 행사 소요물량 일체 나. 향후 추진계획 ○ 저공해 스모크 예산 반영현황 확인: 지속 ○ 저공해 스모크 도입 운용 (예정) : '26년 전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공중급유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공군이 최선을 다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공군은 기재부 및 국회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26년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 중임 • '26년 예산 방사청 요구(안) 반영 • 기재부 방위사업예산과 대상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및 예산반영 필요성 설명('25. 3~8월) • 기재부 2차관 대상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추진 필요성 설명('25. 8월 1주) ※ 결과: 미반영 • 국회 국방위/예결위 위원 보좌진 대상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추진 필요성 설명('25. 5~8월) ※ 국방위/예결위 15개 의원실 설명 완료(8. 28. 기준)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예산 국회심의 단계 반영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공군의 각종 전력 증강 사업에 있어 예산의 한계가 있는 바, 공군은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공군은 3축체계 능력 보강 등 국방부, 합참 기조에 맞춰 통합소요기획 단계에서 공군 대상전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합참에 제출하였음 • '25년 통합소요검토 대상전력 및 우선순위 합참 제출('24. 6월) • '25-2차 통합소요검토 대상전력 및 우선순위 합참 제출('25. 2월) • '26년 통합소요검토 대상전력 및 우선순위 합참 제출('25. 8월)
12. 공군 무인항공기 전력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인상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26년 공군 수당 처우개선 요구(안) 반영('25.3월) • 무인기 전문조종사 장려수당(5-2호) 인상 - 무인기 전력화에 따른 전문조종사 획득 및 안정적 운영, 열악한 근무환경, 유인기 비행 훈련 시행 등 고려 수당 인상 추진 - 장려수당 인상: 月 18만원 → 위관 30만원, 영관 40만원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25. 5. 29.) • '26년 처우개선 요구사업 심의 시 국방부 편성(안) 반영 ○ 인사혁신처 사업설명('25. 6. 20.)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 예산 편성 반영 추진 : '25. 6월~ • 인사혁신처, 기재부, 국회 등 유관기관 설명/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CCT 선발횟수 증가로 인원 충원 속도를 높이고 합당한 수당 지급으로 이탈 인원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 CCT 확대 선발 진행 중 • 신임하사 선발소요 확대 (총 3차수 / 차수별 10명 → 12명) • 기성부사관 전환 선발횟수 확대(1차수 → 2차수) ○ 공군 항공특수통제사(CCT) 수당 처우개선 관계관 회의('24. 11월) ○ '26년 공군 수당 처우개선 요구(안) 반영('25. 3월) • 항공특수통제사(CCT)의 대테러 및 특수전술임무 수행 등 고위험 임무와 유사임무를 수행하는 타군과의 형평성 고려 수당 인상 추진 - 군인위험근무수당 인상: 상사 기준 月 20만원 → 月 32만원 ※ 위험근무수당 4호(반기 2회 이상 고공 낙하산 강하) → 3호(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육군 707, 해군 UDT)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25. 5. 29.) • '26년 처우개선 요구사업 심의 시 국방부 편성(안) 반영 ○ 인사혁신처 사업설명('25. 6. 20.) 나. 향후 추진계획 ○ (CCT 충원) 신임하사·기성부사관 선발 : 지속 ※ '25년 잔여 선발계획: 신임하사(2차수), 기성부사관(2차수) ○ '26년 예산 편성 반영 추진 : '25. 6월 ~ • 인사혁신처, 기재부, 국회 등 유관기관 설명/협조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개정 추진 : '25. 7월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사용 빈도가 지극히 낮은 전시 비상 활주로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고도제한 완화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전술항공작전기지 대비 최소한의 길이(15.1%) 및 폭(12.4%)으로 설정되어 완화 제한 ※ 영주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은 예천기지 대비 약 5% 면적에 불과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사기지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지속 ※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구역 내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 허용 가능

바. 해병대사령부(12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군 가산 복무 지원금 환수 불가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조치	가. 시정 · 처리결과 ○ '18년 이후 대상자 7명에 대한 전수조사 완료 및 관련 유사사례 발생 방지 ※ 반납대상자 116명 중 29명 국고환수 및 68명 환수고지서 발부 진행 완료, 미반납자 19명 보험금 반납 청구 의뢰 진행 ○ 간부확보장려사업(가산복무지원금 및 장려금) 관련 「해병대 간부확보장려사업 운영 규정」 전면 개정 완료 : '25. 1. 10. 나. 향후 추진계획 ○ 연 2회 환수 대상자 확인 체계 구축 : 6월, 11월 환수고지서 발부 진행 ○ 보증보험사 연계 채권 소멸 전 환수 체계 유지
2. 육군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경계작전태세 구축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서북도서 경계작전 태세 구축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	가. 시정 · 처리결과 ○ 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검토 완료 : '24. 7월 • 육군 AI-X(AI 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사업 결과 고려 유사 성능으로 서북도서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추진 검토 • 서북도서과학화경계시스템 통합소요기획 추진 * 통합소요검토요청(→ 합참) : '24. 7월 ○ 서북도서과학화경계시스템 통합소요기획(각 군 위임 전력) 대상 전력 선정 : '24. 12월 ○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에 따라 서북도서과학화 경계시스템 소요결정 추진 : ~ '25년 나. 향후 추진계획 ○ 서북도서과학화경계시스템 소요결정 : ~ '25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김포반도에 민군 복합 타운을 조성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부 민군복합타운 추진실태 확인 및 해병대 추진방향 검토 : '24. 10월 ※ 사업 반영의 현실성 고려 TF 구성(안) 등 검토 ○ 국방부 주관 주거정책 개선방안 토의 : '25. 7월 ※ 김포 · 강화권역 포함 민군복합타운(통합 거점 주거단지) 조성 건의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병대 중 · 장기 군인 복지정책서 정립 연계 주둔 권역별 민군복합타운 추진 기본개념 발전 : ~ '25년 한 ※ 주둔 권역별 특성을 고려 1사단(미래형 교육훈련 타운 모델 / 육.상무대), 2사단(작전부대 위주의 소규모 전방형 모델 / 포천 5군단 주변 통합) 종합 고려 수립 ○ 추진 기본개념 활용 김포 · 강화권역 민군복합타운 선행 연구용역 : ~ '26년 전반기 ○ 선행연구용역 결과 활용 사업타당성 조사 및 중기계획('28~'32) 반영 건의 : ~ '26년 후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민간인의 재산권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교동도 지역의 민간인 이북통제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부 차관, 민통선 조정 실무토의: '24. 10. 4. (금) <토의 결과> ① 민통선 조정은 추후 검토(육군GOP 포함) ② 교동도 민통초소 조정에 대한 우선 검토 필요 ○ 합참 주관, 교동도 통행제한 개선토의: '24. 10. 28. (월) <토의 결과> ① 교동대교 민통초소 비상주 운용으로 전환 ② 출입통제 개선에 따른 작전 제한사항 해소대책 ③ '민통선 조정' 추후 시행 ④ 기타 (단계적 출입통제 완화대책 검토 등) ○ 합참, 작전성 검토결과 국방부 보고 : '24. 11. 7. (목) <주요내용> ① 교동대교 출입체계 개선으로 주민불편 先 해소 ② 교동지역 민통선 조정은 '국방부 민통선 현실화 계획과 연계 ③ 교동대교 민통초소 비상주 운용으로 전환 ④ 작전 제한사항 해소대책(철책보강, CCTV 등) ○ 교동대교 교통체증 개선 연구용역 : ~ '25. 8. 11. (월) <연구용역 결과> ① 교동대교 민통초소 비상주화 제한 ② 출입통제 개선 前 작전 제한사항 해소대책 제시 ① 후방철책 및 기동로 확보 ② 추가철책 설치 ③ 감시용 CCTV 및 경고방송망 추가설치 나. 향후 추진계획 [민통선 조정] ○ 「민통선 현실화 계획」 연계 下 조정 검토: 진행 中 < 민통선 조정절차/국방부 지침 ('15. 4. 17.) > 지자체 요청 ⇒ 작전성 검토 ⇒ ✓ 국방부 검토 (조정진행 승인) ⇒ 조정협의 및 대책시설 설치 ⇒ 군보 심의 ⇒ 국방부 심의/ 승인 ⇒ 관보 게시 [교동지역 출입체계 개선] ○ 교동전방 부지확보(철책 추가설치 목적): '26년 限 ○ 지자체(강화군)-관할부대(해병 2사단) 협의 : ~ '26년 * 철책 설치 포함 작전 제한사항 해소대책을 위한 협의 ○ 조정前 現 민통선 및 교동대교 출입체계 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서북도서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일반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비해 부족하므로 수당 인상을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6년 군인 및 군무원 수당분야 처우개선을 위한 소요 확인 / 검증 : '25. 1 ~ 4월 ○ 서북도서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 11건 건의 : '25. 4. 4.(금) ※ 서해 5도 (6만원 → 12만원), 한강하구 서측 4도 (3만원 → 6만원) 특수지 관련 수당 각 100% 인상 요구 ○ 보건복지관 주관 처우개선 제수당 분야 실무토의 : '25. 4. 22.(화) ○ '26년 국방부 처우개선(수당조정 요구) 정책실무회의 : '25. 5월 ※ 서해5도 근무 영관장교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12만원, 기타지역 근무 영관장교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10만원으로 조정수용 ○ '26년 인사혁신처 처우개선(수당조정 요구) 사업설명 : '25. 6월 ※ 국방부 주관으로 인사혁신처 대상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처우개선 사업설명 진행 나. 향후 추진계획 ○ '27 ~ '31 수당분야 국방중기계획 특수지근무수당 금액 인상 등 서북도서 근무 군인 처우개선 사업 지속 발굴 : '25. 7. ~ '26. 1. 限 ※ 당해년도 반영여부 고려, 논리보완 후 지속 추진 혹은 신규사업 발굴 검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1. 해병대 1사단 병 순직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병대는 작전 교육, 부대관리에 힘쓸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간 순직자 발생 관련 동일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완료 ※ 재발방지를 위해 작전, 교육, 부대관리 간 안전관리 시스템 보강 완료 및 지속 추진 中 • 안전관리 긴급조치(6개과제 / 완료) ① 사령관 주관 대대장 이상 지휘관 특별교육 ② 사령관 ‘안전 지휘서신’ 시달, 쏘 장병 안전관리 집중교육 ③ 호우피해 복구작전 참가 장병 정신건강 · 심리치료 지원 ④ 대민지원 유형(8개)별 안전대책 / 현장조치 매뉴얼 제정 ⑤ ‘해병대 안전의 날’ 제정 / 운영 ⑥ ‘안전 해병대’ 월간 회보 발간 / 전장병 교육 • 안전관련 제도정비(7개과제 / 완료) ① 해병대 안전규정 제정 ② 해병대 재난관리규정 개정 ③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④ 실무부대 안전진단 / 점검 핸드북 발간 / 활용 ⑤ 해병대 위험성평가 시행지침 개선 ⑥ 해병대 발전자문위원회 안전분과 신설 ⑦ 해병대 안전조직 발전 정책 연구용역 추진 • 안전관리 시스템 보강(9개과제 / 완료) ① 작전 · 교육훈련 · 부대활동 전 위험성 평가 시행 ② 임무 · 과업별 표준 위험성 평가표 작성 / 활용 ③ 사 · 여단별 대민지원 시 현장 안전조치 체크리스트 작성 ④ 사 · 여단 안전관리팀 운영 정상화 / 임무수행 역량 강화 ⑤ 재해재난지역 복구작전 시 개인 안전장비 기준 검토 ⑥ 제2신속기동부대 임무수행철 보완 / 시행 ⑦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지속지원 체계 정립 ⑧ 작전 · 교육훈련 · 부대활동 간 현장 안전통제관 운영 ⑨ 재난 안전 상황조치 훈련 확대 • 안전의식 제고 및 의사소통 활성화(6개과제 / 지속) ① 사령관 ‘안전지휘서신’ / 시달 / 교육 정례화 ② 여단 · 대대 지휘관 대상 안전리더십 교육 강화 ③ 장교 · 부서관 양성 · 보수교육 시 안전관리 과목 신규 편성 / 교육 ④ ‘안전 신고제도(안전신문고)’ 운영활성화 ⑤ 중 · 소대 단위 주간 안전 소통시간 운영 ⑥ 안전활동 우수부대 선발 / 포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2 해병대 1사단 장병 순직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해병대는 작전, 교육, 부대관리에 힘쓸 것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병대 위험성평가 체계(MRAS) 개발 후 운용 : '25. 5. 1. 부 ※ 작전·교육·부대활동 전 위험성평가 시행 中 ○ 안전세미나 개최 : '25. 11월 ※ 목적 : 세미나를 통한 주요 지휘관, 주무참모, 실무자의 역량 강화 및 해병대 안전의식 증진 ※ '25년 최초시행 ※ 예산반영 : '25년(300만원), '26년(500만원) ○ 국외 훈련 부대 대상 안전교육 시행 : '25년 3월 이후 ※ '25년 국외훈련 참가자 안전교육 시행 / 총 2회 ※ '26년 이후 대규모 국외 훈련시 안전요원 파견 검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舊 해병대사령부 본관을 해병대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가. 시정 · 처리결과 ○ 『舊 해병대사 본관의 박물관 활용 연구』 수행 : '24. 3. 22. ~ '24. 8. 22. • 해병대 역사관+문화교실·체험관·미술관·카페테리아 등으로 단순 전시시설을 넘어선 시민참여형 복합문화시설로의 활용(안) 수립 ○ 『舊 해병대사령부 본관의 해병대 역사관 활용』 추진계획(案) 수립 완료 : '24. 12. 11. • 계획(案) : 해병대의 승전 역사를 보존하고 해병대와 국민간의 유대감 강화 및 국민과 공유하는 「안보교육의 장」으로 조성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4차) 변경계획 관련 舊 해병대사 본관의 역사관 활용 의견 보고(→ 국방부, 국토부) : '24. 12. 11. • 4차 변경계획 고시('24. 12. 27.) 內 해병대 의견 일부 반영 완료(해병대 역사관으로 구체적 명사는 지속 추진 필요) ※ 반영사항 : (p.105) C. 부지의 자산활용, 주요 존치 건물들을 역사, 보존,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활용 나. 향후 추진계획 ○ 용산공원 조성준비단계(기본·실시설계) 간 舊 해병대사 본관의 역사관 활용 해병대(안) 요구(→ 국방부, 국토부) : N년 ※ N년(시기미정) : 미군기지 반환 완료 연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해병대 장병 복지를 위한 다목적 체육 시설을 확보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7군단 다목적 체육시설 추진사업 확인 및 해병대 추진방향 검토 : '24. 10월 ※ 육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사업설명 참관 등 ○ 해병대 전 주둔권역별 복지실태 현장점검 : '25년 1분기 ※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소요 및 설치 예정부지 등 사업추진 목적 현장 확인 병행 ○ 해병대 도서부대(6·9여단, 연평부대) 대상 복지 시설 신규사업 중기계획 발전 : ~ '25년 9월 ※ 복지기금 재원 부족 고려 일반회계로 건립이 가능한 가칭, '전투력복원센터(교육시설)' 사업 계획 수립 및 반영 건의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병대 중·장기 군인 복지정책서 정립 연계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계획 보장 : ~ '25년 한 ○ 해병대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설명서 작성 및 중기계획('28~'32) 반영 추진 : '26년 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적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도입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 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전력 확보 분야 • 휴대용소형드론대응체계 전력화(완료) : '00. 0월 - 유효거리 / 방식 : 0km 이상 / 잡음 + 재밍 - 도입 : 총 ○대[특수수색 ○, 1사단 군사경찰 ○, 9여단 군사경찰 ○, 군수단 ○(MF장비)] • 대드론통합체계 진지선정 검토 : '25. 4월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 ○Set * 서북도서 ○Set, 2사단 ○Set -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 ○Set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안) 의결 (제123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 '25. 4월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승인 : '25. 7월 ○ 대비태세유지 분야 • 합동방공훈련^① / 대공사격평가^② : 7회 / 8회 ① '24년 5회(합참3, 서방사2), '25년 2회(합참·서방사 각 1) ② 부대별(1·2사단, 6여단, 연평부대) 반기 1회 • 지휘통제팀 상황조치훈련 : 88회('24년 53회, '25년 35회) * 적 무인기 NLL 침범 등 • 도서방어종합훈련간 소형무인기 대응 행동화 숙달 : 3회 * '24년(2회), '25년(1회) 나. 향후 추진계획 ○ (합참, 서방사) 합동방공훈련 : 분기별 1회(총 2회)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전력화 : '00년 - (방사청) 대상장비 선정 : '00. 0 ~ 00월 - (육.시험평가단) 구매시험평가 : '00. 00 ~ '00. 0월 - (방사청) 기종결정 및 계약 : '00. 0월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 '00년) 소형무인기대응체계(○ / '00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해병대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중형 표준차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나 국방부에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중형표준차량 확보를 위한 예산요구 : 완료 • '26 ~ '30년 중기 : 총 225대(연간 45대) • '26년 예산 : 45대 ○ '25년 획득 현황 : 45대(2 1/2톤 26대, 5톤 19대)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 물량 계약 및 납품 : 11월(잠정) ○ '27 ~ '31년 국방중기계획 예산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장병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해병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병대 안전단의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병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적극 요구 • ‘25년 예산 편성 1.6억 반영 요구 : 미반영 • ‘25년 최종 예산 0.76억 반영으로 해병대 전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제한으로 ‘26년 해병대 안전관리 예산 편성(안) 0.86억 반영 완료 ○ ‘26년 안전관리 신규 발굴 예산 편성(안) • 안전정책 분야(0.08억) - 해병대 장성급 지휘관이 참여하는 안전정책 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내(타군) 및 대외(민간전문가)와의 정책 델파이를 통한 해병대 안전문화 조성 네트워크 형성 • 안전교육 분야(0.43억) - 해병대 전 장병 대상 작전, 교육 훈련, 기타과업 수행 간 생명 보호 및 안전 도모를 위한 교육 시행 및 전담 교관 양성 • 안전영상 콘텐츠 교육자료 제작 용역(0.2억) - 해병대 고유의 임무 수행 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자료 확보 나. 향후 추진계획 ○ 내/외부 안전기법 도입 신규사업 적극 발굴 • 내/외부 안전 거버넌스 구축 활동 및 서포터즈를 통해 각종 새로운 정책을 해병대에 적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 적극 발굴 ○ 해병대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 지속 • 국방부 사업국 및 예산국, 기획재정부, 국회 등 해병대 안전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KAAV-II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의 적기 전력화(사고 발생 위협에 대한 보완책 마련)를 위해 노력 필요	가. 시정 · 처리결과 ○ 침수사고('23.9월) 後 잔여 시제장비(1대) 기술적 보완 • 사고원인 분석결과 (M&S) : 과중한 수압에 의한 선수익* 지지부 파손 * 선수익 : 수상 항해 시 파도를 가르며 주면 저항을 줄이는 차체 전면에 부착된 보조장치 • 기술적 보완 : 파손 부위 전반의 안전성 강화 * 용접 최소화, 접합부 소재 강화, 연결축 추가 등 • 수상 시험운행 ('24. 11월)으로 구조적 안전성 확인 ○ 비상상황 (침수 등) 대비 안전장비 보강 • 안전장비 (산소호흡기 및 차내 비상조명 등) 추가 • 승무원 안전 매뉴얼 보완 및 숙달 * 침수사고 대비 승무원 생존훈련 ('25. 2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안전대책 고려한 체계개발 설계 반영 : 잠정, '26년

사. 육군 제2작전사령부(8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공공기관의 대(對)드론체계 구축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구축 관련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건의('24.12.12.) • 국가중요시설 자체방호계획 내 드론(무인기 등) 탐지·무력화가 가능한 대드론체계 포함 •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민·관·군·경 통합 대드론체계 구축 반영 등 ○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개정문 하달(합참 통합방위과 / '25. 4. 3.) 나. 향후 추진계획 ○ 육군본부, 합참과 연계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구축 관련 내용 반영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CCTV 통합관제 센터와 통합방위 지원본부 간 영상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6개소의 구축 지연을 조치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전라남도 담양군은 CCTV 구축 완료('25.12월) ○ 나머지 5개소(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동구, 북구)는 CCTV 구축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 중 • 통합방위협의회 간 CCTV 구축 필요성 강조 - 총 6회('24년 : 2. 26., 5. 2., 10. 2. / '25년 : 2. 28., 6.13., 8.19.) • 31사단, 광주광역시로 CCTV 구축 필요성 관련 공문 발송 - 총 3회('24년 : 2.21., 4.10., 6.19.) • 31사단,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CCTV 구축 필요성에 대한 대면 실무협조 시행 - 총 4회('24년 : 11. 8., 11.27. / '25년 : 7.31., 8. 6.) ※ 31사단을 통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중 나. 향후 추진 ○ 광주광역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안건으로 재상정('25. 4분기) ※ 작전사 실무자가 직접 참석하여 강조 예정 ○ 통합방위본부(합참)에 관련 추진사항 공유 / 통합방위본부 차원에서 지자체 건의토록 요청('25.12월 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제2작전사령부 차원에서 행정소요 감소, 감시 장비 적시 교체 등 해안경계 부대의 피로를 경감시키고 전투력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행정소요 감소를 위한 대대급 업무경감은 육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임. ※ 대대급 업무경감 시행지시(1차) 하달('25. 7.14.부 적용) ○ 감시장비 전력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고 있음. ※ 해안감시 레이더, 정찰드론, 해안복합감시체계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행정업무경감 시행지시(전면시행) 하달예정('25.10월) ※ 육군규정/지침 개정 추진(~'25.11월) ○ 무기체계 획득 사업 추진 중 • 해안감시기동대대 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해안감시레이더-II, 해안정찰드론, 해안복합감시체계 등 순차적으로 전력화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용사 진급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여 사고율을 줄이고 군에 근무하는 자부심이 들 수 있도록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규정에 의한 병 진급심사 평가 적용과 병 진급심사 위원회 구성 강조지시 하달('25. 4.25.) • 공문 하달로 용사 진급심사 체계적 시행 강조 ※ 사단별 행정예규에 구체적 내용 반영 등 ○ 매월 '인사계선 소통간담회' 간 지속 강조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 하반기 인사행정 지도방문간 현장확인 예정 • 규정에 의한 병 진급심사 시행실태 확인, 사단별 행정예규 구체화 반영 여부 확인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수명 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를 최대한 빠르게 교체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노후장비는 '22년부터 육군 도태계획에 반영하여 폐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도태 완료된 장비는 아래와 같음. • '22년 : 45구경 권총 등 23품목 18,600여 점 • '23년 : P-77무전기 등 15품목 6,500여 점 • '24년 : M16소총 등 32품목 70,000여 점 ○ '25년에도 육군 도태계획에 따라 노후장비는 도태 진행 중이며, '25.11월 한 반납 및 폐 처리는 완료될 예정임. • '25년 도태(진행) : 박격포 등 22품목 71,400점 나. 향후 추진계획 ○ '26년에도 박격포 등 10품목 35,200여 점에 대해 육본 도태 결정 반영을 요구하였음. ※ '26년 육본 도태결정 심의(완료) : '25. 7월 ○ 도태에 반영된 장비는 편제장비 보강사업과 장비 보급계획에 따라 신형장비로 교체될 예정임 ※ 연도별 편제장비 보강사업 추진 : 육본(기참부) ※ 연도별 전력지원체계 장비보급 : 육본(군참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외출·외박의 제한 규정을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 해군, 공군 등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상급부대 (국방부, 육본)로 검토 요청 ('25. 1. 2.) • 국방부 (육본)에서 각군 및 부대별 의견 고려 형평성 검토 요청 ○ 2작전사 조치 가능 부분 우선 완화조치 통보 ('25. 4. 23. 국방부) • '시간' + '지역' 통제 ⇒ '시간'만 통제 (완화) 나. 향후 추진계획 ○ 2작전사 행정예규 수정 및 적용 : '25. 11월 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현재 제2작사의 해안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육군 경비정 16척 모두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했으므로, 육군 경비정 노후화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노후화된 육군경비정의 대체전력인 육군경비정-Ⅱ 전력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고 있음 ※ △육군경비정-Ⅱ 중기신규 소요결정(합참, '24. 7월), △선행연구(국방기술진흥연구소, '24. 8월 ~ '25. 5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수립(방사청, '25. 7월) 나. 향후 추진계획 ○ 방사청에서 육군경비정-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예정임 ※ '26년 사업추진 예산반영, 업체 계약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제2작전사령부는 제2작전사령부로 지휘체계가 이전 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항명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를 요청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군을 전역하였음. (’25. 2월) ○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음.

아. 병 무 청 (20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정신질환 관련 군복무부적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체계 강화 • (훈령개정) 「병역판정검사규정」 및 「입영판정검사규정」 - 질병상태문진표 정신건강의학과 문항 추가(‘25.1.10.) * 군인 도박중독 문제 관련 사전 선별을 통한 예방 강화 목적 - 입영판정검사 대상 중 2차 심리검사 대상 확대(‘25.1.10.) *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3급자 → (추가) 정신과 4급자 • (인력증원) 군복무부적합자 선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25.3-8월) : ‘26년도 정기직제 임상심리사 3명 증원요청, 2명 반영 • (심리검사 도구보완) 자타해 위험군 선별용 신규검사 구매 - 4종 중 2종 구매완료(‘25.8월), 2종 추진예정(‘25.9월) • (정밀심리검사 확대실시) 심리취약자 및 정신질환위험군, 병역면탈자 사전 선별을 위한 확인검사 강화(‘25.1월~) ○ 병역의무자 중 심리취약자 및 정신질환군, 치료연계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지속 강화(‘25.1월~) • (병무청) 임상심리사의 가족상담, 경과관리서비스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센터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연계지원 - 범정부 기관간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지침 소속기관 배포(‘25.6.12) 나. 향후 추진계획 ○ 한국국방연구원(KIDA)협조, 심리검사도구 개선 추진 • 소속기관별 심리검사 문제점 등 임상심리사 의견수렴, 한국국방연구원과 업무협약(‘25.10~11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장기대기 사유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처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제한되는 보충역 유입 인원 감축 • 각 군 협의,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 처분 인원 감축('22년~) (단위 : 명) <table><tr><td>구 분</td><td>'25.7월</td><td>'24년</td><td>'23년</td><td>'22년</td></tr><tr><td>인 원</td><td>697</td><td>1,590</td><td>2,294</td><td>2,515</td></tr></table>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수요 확대·발굴 • 철도공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확대('24년) - 철도공사 배치 : ('24년) 917명 → ('25년) 1,027명 ○ 사회복무요원 적기 소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장기간 소집대기자 소집순위 선순위 조정, 일반순위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감축('25년) - 소집대기기간 3년차 이상인 경우 소집 3순위 → 소집 2순위로 조정 ※ 일반순위(1~4순위) 장기대기 인원 380명 감축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시 출·퇴근 가능한 인접 지역까지 지원 자격 확대('25년) ※ 인구 과밀 지역 적체 완화 및 자원 부족 지역 충원 기반 마련 나. 향후 추진계획 ○ 복무기관 소요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사회복무요원 지방이양 인건비 국고지원 등 추진 - 국비 보전 기간 연장('26년→'30년), 보전금 증액 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보건·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소요' 항목 유지 협의 ※ 해당 합동평가지표 항목 일몰 예정('26년) ○ 보충역의 상근예비역 복무 기회 확대 추진('27년 ~) • 현역으로 역종 변경 후 상근 신청 → 역종 변경 없이 보충역 상태로 상근 신청 ○ 국방부 협조, 정신과 질환 4급자 감소를 위한 정신과 부령 개정 추진('26년 ~)	구 분	'25.7월	'24년	'23년	'22년	인 원	697	1,590	2,294	2,515
구 분	'25.7월	'24년	'23년	'22년							
인 원	697	1,590	2,294	2,51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시설, 혜택 사항 등을 재확인 후 제도를 정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병역명문가 예우시설 실태조사 실시 • 대상/시기 : 1,899개('25. 7월 기준)/'25. 9월 • 내용 : 예우시설 정보 현행화, 협약이행 여부 확인 등 ○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조례(242개 제정)에 산하시설 예우 반영 및 대상 범위 확대 • 산하시설 반영 확대 - '24. 8월 204개 → '25. 7월 221개로 확대 • 적용대상 확대(관내거주자 → 전국거주자) - '24. 8월 26개 → '25. 7월 33개로 확대 나. 향후 추진계획 ○ 병역명문가 예우 시설 등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자의 병역 면탈 의혹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등 병역면탈 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추진 * 유용원의원 발의('24.11.15.), 국방위 소위 계류중('25.2.19.) • ‘입영의무 면제 및 병역의무 종료 연령 등 상향’ <table><tr><td>조항</td><td>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병역법 제71조)</td><td>병역의무 종료 연령 (병역법 제72조)</td><td>허가의무위반자 취업, 관·허업 등 제한 연령 (병역법 제76조)</td></tr><tr><td>연령</td><td>38세 → 43세</td><td>40세 → 45세</td><td>40세 → 45세</td></tr></table> 나. 향후 추진계획 ○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적극 협조 ----- <참 고> ----- ※ ‘국적변경자 등 병역회피자 제재법안’ * 김병주 의원 발의('20.12.17.)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table><tr><td>구 분</td><td>개정(안) 주요내용</td></tr><tr><td>재외 동포법</td><td>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F-4 비자) 제한 (현행 : 40세)</td></tr><tr><td>국적법</td><td>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31세 이후 국적회복제한 (현행 : 병역기피 목적 평생 제한)</td></tr><tr><td>출입국 관리법</td><td>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37세까지 취업활동 제한 및 병역기피 목적 있을 시 입국금지(신설)</td></tr><tr><td>국가/지방 공무원법</td><td>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45세까지 공직임용 배제 (신설)</td></tr></table>	조항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병역법 제71조)	병역의무 종료 연령 (병역법 제72조)	허가의무위반자 취업, 관·허업 등 제한 연령 (병역법 제76조)	연령	38세 → 43세	40세 → 45세	40세 → 45세	구 분	개정(안) 주요내용	재외 동포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F-4 비자) 제한 (현행 : 40세)	국적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31세 이후 국적회복제한 (현행 : 병역기피 목적 평생 제한)	출입국 관리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37세까지 취업활동 제한 및 병역기피 목적 있을 시 입국금지(신설)	국가/지방 공무원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45세까지 공직임용 배제 (신설)
조항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병역법 제71조)	병역의무 종료 연령 (병역법 제72조)	허가의무위반자 취업, 관·허업 등 제한 연령 (병역법 제76조)																
연령	38세 → 43세	40세 → 45세	40세 → 45세																
구 분	개정(안) 주요내용																		
재외 동포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F-4 비자) 제한 (현행 : 40세)																		
국적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31세 이후 국적회복제한 (현행 : 병역기피 목적 평생 제한)																		
출입국 관리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37세까지 취업활동 제한 및 병역기피 목적 있을 시 입국금지(신설)																		
국가/지방 공무원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 45세까지 공직임용 배제 (신설)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이탈, 겸직 등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복무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24.12월), 추진 ○ 사회복지요원 복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개선 • 복무기본교육 강화 - 반별 인원 40명 → 30명으로 조정 - 토의식 모듈활동 및 실습공간 확보로 교육효과 상승 • 복무의무위반자 대상 복무지도교육 확대 및 강화 - 복무지도교육 인원 및 과정 확대 ※ '24년 960명 / 7회 이내 → '25년 1,600명 / 월 1회 - 개인특성·위반 사유 분석, 부실유형별 심리상담 실시 ○ 복무관리 및 실태조사 개선 • 복무부실우려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복무관리 - 심리취약자 특별 상담, 불성실자 밀착관리 등 - 멘토지도관 위촉, 부적응자 밀착 관리에 활용 • 복무관리 모바일 환경 구축 추진 - 전자적 출퇴근 근태관리 등 시스템 도입('27.1월부) ※ 예산 709백만원 반영, 시스템 개발 중 ○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 • 기관담당자 대상 '복무관리 규정' 과목 표준강의안 마련 • 복무지도관 상담분야 자격증 과정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저출생 등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 수급 문제 해결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보충역 대체복무 및 상근예비역 감축을 통해 현역입영자원 확보 • 산업지원 인력 계획인원 감축 * ('21년) 0.8만 → ('24년) 0.7만 • 상근예비역 정원 감축 * ('08년) 1.6만 → ('23년) 0.8만 → ('25년) 0.5만 ○ ('24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 BMI, 편평족 등 일부 질환의 판정 기준 조정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의 미래 국방환경 대비,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발전 사항 등 지속 모니터링
7.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성범죄 등 일반범죄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사회복무요원 대상 범죄예방 교육 강화('25.1월) • '성희롱-성폭력 예방', '4대 중독예방' 교육 실시 • 일반범죄 발생사례 중심으로 법규 준수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집중관리('25.1월) • 범죄내역 분석하여 근태상황 등 복무지도에 활용 나. 향후 계획 ○ 일반범죄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 강화 추진 ('26.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국방부 등과 협의를하여 국민 공감대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한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개선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부적합 업체 인원 배정 제한(제7조③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체에 대해 배정 제한(시행령, '25. 7. 7. 시행)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제한(제85조③항) - 박사학위 취득 기간 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요건 강화를 통한 관리 강화(시행령, '25. 7. 7. 시행) ○ 산업체 선정 범위 개선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효율화 • 추진 경과 ① 본청-소속기관 간 영상회의 실시 및 의견수렴('25.3월) ② 지정업체(산업체) 사업장·공장 운영실태 전수조사('25.4월) ③ 병역지정업체의 범위를 주소지 내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장 범위 개념으로 변경('25.6월) • 개선 효과 : 산업현장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및 체계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 예술·체육요원 성실복무를 위한 복무관리 강화 • 공익복무 실적검증 철저 이행 등 실적 미충족자 관리 강화('24.8월~, 문체부 협조) * 공익복무 실적 인정 시 사진 등 증빙자료 대조 등 • 병무청-문체부 합동 직무교육 실시('25.1월~/연2회) 나. 향후 추진계획 ○ 개선 사항 추진 및 후속 조치 통한 내실화 ○ 제도 개선 사항 관련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관련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중(‘25. 3월~) - 사이버상의 이미지파일內 문자추출·인식성능 제고 등 • 국민모니터링단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확대 운영중(‘25. 4월~) - 사이버 모니터링활동 경력자, 대학생 등으로 구성 * 운영인원 확대 : (‘23년) 25명 → (‘24년) 30명 → (‘25년) 40명 * 임무 :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사이트 게시물, 댓글 등) 모니터링·병무청 신고 및 SNS 등 활용,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공정병역 홍보 활동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특사경 직무교육 등 실시 • (교육) 상반기 전체 특사경 직무교육(‘25. 4. 9. ~ 11.) 신규 특사경 수사실무 입문과정(‘25. 8. 27.) • (벤치마킹)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기법 공유(‘25.5.1.) • (회의) 전체 특사경 수사실적·기법 등 공유(‘25. 5. 14./5. 28./6. 26./7. 30.) ○ 과학수사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운영 확대 추진 • ‘26년 정부예산안 반영 : 1,296백만원 - 디지털포렌식 노후 장비 교체 2, 추가 도입 2 나. 향후 추진계획 ○ 수사역량 강화 방안 지속 추진 • 하반기 전체 특사경 직무교육(‘25. 9. 15. ~ 17.) • 수사실무 매뉴얼 발간, 수사지침서 활용(‘25. 9월~) ○ ‘26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군내 마약류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6종) 검사 실시 • (근거)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20조(현역병의 모집) 개정 - (종류) 대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몰핀, 케타민 ○ 마약류 검사 소요 시약 및 인력 확보 • (인력) 임상병리사 11명 채용('24. 8월 지방청 10명, '25. 2월 경인2반 1명) • (시약) 조달청 공개입찰, 마약류 검사키트 순지방청 납품('25. 2월) ○ '25년 예산/집행 : 15억(1인당 10,000원) / 12억(1인당 7,946원)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마약류 정밀검사 실시('25. 7. 1.) ○ 마약류 검사 및 최종 양성 판정 현황 ('25.7.31. 현재, 명)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25년</th><th>'24년</th><th>'23년</th><th>'22년</th><th>'21년</th></tr><tr><td colspan="2">마약검사대상(간이검사)</td><td>62,051</td><td>26,904</td><td>1,135</td><td>1,049</td><td>1,012</td></tr><tr><td colspan="2">외부위탁(간이검사 양성)</td><td>384</td><td>309</td><td>22</td><td>7</td><td>13</td></tr><tr><td rowspan="3">최종 양성판정</td><td>계</td><td>2</td><td>9</td><td>8</td><td>4</td><td>2</td></tr><tr><td>병역판정 검사</td><td>0</td><td>4</td><td>3</td><td>3</td><td>2</td></tr><tr><td>입영판정 검사</td><td>2</td><td>5</td><td>5</td><td>1</td><td>-</td></tr></table> 나. 향후 추진계획 ○ 마약정밀검사 강화 방안 지속 추진	구 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마약검사대상(간이검사)		62,051	26,904	1,135	1,049	1,012	외부위탁(간이검사 양성)		384	309	22	7	13	최종 양성판정	계	2	9	8	4	2	병역판정 검사	0	4	3	3	2	입영판정 검사	2	5	5	1	-
구 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마약검사대상(간이검사)		62,051	26,904	1,135	1,049	1,012																																			
외부위탁(간이검사 양성)		384	309	22	7	13																																			
최종 양성판정	계	2	9	8	4	2																																			
	병역판정 검사	0	4	3	3	2																																			
	입영판정 검사	2	5	5	1	-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탈북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사회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북한이탈주민 등 의무 부과 관련 검토안 국방부 공유('23. 10. ~ 현재) • 성장환경·국내 입국 연령 등에 따른 군 적응 가능성 등 고려, 일괄적 병역의무 부과는 제한적 • 다만, 군 입영에 대한 두려움 등을 완화하도록 병역이행 안내 및 군복무 혜택 등 홍보하여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 ○ 자발적 병역이행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24. 1월 ~ 현재) • 병역판정검사안내문 활용, 군복무 혜택(봉급,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등) 안내 ○ 북한이탈주민 입국·면제 현황 모니터링(계속) • 최근 6년간 북한이탈주민(남성) 입국 현황 (‘24. 12. 31., 단위 : 명) <table><tr><td>연도</td><td>’24년</td><td>’23년</td><td>’22년</td><td>’21년</td><td>’20년</td><td>’19년</td></tr><tr><td>인원</td><td>26</td><td>32</td><td>35</td><td>40</td><td>72</td><td>202</td></tr></table> * 출처: 통일부 / 코로나 19 이후 입국자 급감 후 지속 감소 • 최근 6년간 북한이탈주민 사유 병역면제 현황 (‘24. 12. 31., 단위 : 명) <table><tr><td>연도</td><td>’24년</td><td>’23년</td><td>’22년</td><td>’21년</td><td>’20년</td><td>’19년</td></tr><tr><td>인원</td><td>57</td><td>81</td><td>88</td><td>85</td><td>160</td><td>200</td></tr></table> 나. 향후 추진계획 ○ 자발적 병역이행 유도 방안 강구 및 관련 부서 협조 ○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관련 등 국방부와 협의	연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인원	26	32	35	40	72	202	연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인원	57	81	88	85	160	200
연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인원	26	32	35	40	72	202																							
연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인원	57	81	88	85	160	20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외국인 입대관련 법·제도를 운용·도입하는 만큼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외병역자원의 확보와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24. 11월) • 대만, 싱가포르 등 국외병역자원 관리 등 ○ 미 국방부 등 유관기관 방문 및 외국인 대상 모병제도 운영 등 동향파악('25. 4월, 공무국외출장)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의 군 병력 운영 관련 병력구조 개선사항 등 지속 모니터링 및 제도 추진 시 적극 협조
13. 다문화가정 병사에 대한 입대 전 맞춤형 상담·사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군 복무 적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병역이행 예정자 중 희망자(다문화가정 자녀 포함)에 대해 전국 11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통해 입영 전 1:1 병역진로상담, 군 생활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2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가족 초청 설명회 3회 실시 나. 향후 추진계획 ○ 전국 11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병역진로상담 등을 활성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4. 지방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결원 존재시, 수시로 본인 의사를 파악하여 근무시간 확대를 시행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2인1조 방식의 인사 배치가 아닌 1인1부서 인사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전국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간담회 요청·실시(‘24. 10월)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25. 2월) ○ 「병무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운영지침」 마련·시행(‘25. 5. 1.부) • 주 20시간에서 희망자 35시간 확대 근무 허용 • 보직관리 시 1인 1부서 단독업무 부여 가능 나. 향후 추진계획 ○ 근무시간 확대 희망 시 결원 범위 내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① 군 입대가 특정시기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 군 입대 특정시기 쏠림현상 완화 대책 마련 가. 시정·처리결과 ○ 각 군 협의 • 시기별 균형 충원을 위한 입영계획·일정 조정 (병무청-각 군 합동평가회의 등) ※ (지원 저조) 학기종료 이후로 입영일정 조정, 입영 선호 시기 계획 확대, (지원 과열) 입영 비선호시기 계획 확대 [지원 저조] - (육군) 4분기 입영일자 조정(12월 2주 → 4주) - (해군) 상반기 계획 확대(500명 ↑) - (해병) 하반기 입영일정 2·3주 → 4주 [지원 과열] - (공군) 4분기 계획인원 확대('24년 대비, 2,830명 ↑) ○ 제도 개선 • 육군 일부 특기 연단위 모집 실시('25. 7월~) - 모집 주기 변경으로 균형충원·사전예측 효과기대 • 20세 검사 후 입영 도입('25. 1월~) - 신청자 입영시기 2~4분기로 반영 • 육군 전방사단 고정제도 폐지('25. 7월~) ○ 추가모집 등 수시충원 및 징·모집 연계충원 • (징집) 입영예측 철저, 본인선택 공석 수시 접수 • (모집) 부족특기 추가모집 및 징집병 직권 통지 ○ 병역의무자 선호 콘텐츠·매체활용 홍보 강화 • 알림톡 활용 개인별 맞춤 입영정보 제공 • ON·OFF라인 홍보매체·콘텐츠 다양화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병역의무자 선호경향 파악 및 해결방안 지속 모색 • 병역데이터 분석으로 개선 소요 발굴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② 불필요한 군입대 가산점을 줄여 입대 준비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불필요한 가산점 축소로 입영 준비 부담 완화 방안 가. 시정 · 처리결과 ○ 모집병 가산점 개선(안) 마련, 각 군·소속기관 의견 수렴 ('24. 10월) • 모집병 가산점 관련 각 군과 실무 협의 ○ 모집병 가산점 개선(안) 최종 결정('24. 12월) 개선 내용 상한선 축소(15 → 10점), 가산점 항목 간소화(25 → 21항목) - 축소 : 현혈·봉사(8 → 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 폐지 : (공군)한국사, 한국어능력시험 (해군)직업경력 (해병대)무도유단자 ○ 가산점 개선 관련 대국민 홍보('24. 12월~) • 누리집 및 SNS 활용 개선사항 홍보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개정('25. 9월) 나. 향후 추진계획 ○ 모집병 가산점 개선 시행('25. 10월 접수자부터) ※ 한국사·한국어 가산점 폐지 : '25년 6월 접수자부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6.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승선근무예비역 근로권익 보호 등 상시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26년도 예산요구('25.5월~8월) • 해운·수산업체 담당자 및 승선근무예비역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내용 : 복무규정, 근로권익 보호, 산업재해 예방 • 사업비: 10백만원 ○ 승선근무예비역 선박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25.7월~8월) • 대상 : 177명('24. 6. ~ '25. 5. / 1년간 중도포기자) • 방법 : 온라인 설문참여 및 개별 연락 • 내용 : 중도포기 사유, 취소 후 현역병 등 복무 만족도, 선박복무환경 개선 의견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승선근무예비역 중도 편입취소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25.9월) ○ 해양수산부 등 협조, 승선근무예비역 처우 개선 등 장기복무 유도 협조 요청('25.9월)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및 훈령개정('25.11~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국군 상비병력과 부사관의 전력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해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MAVNI'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모병제도 운영 등 동향파악('25.4월, 공무국외출장)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의 군 병력 운영 관련 병력구조 개선사항 등 지속 모니터링 및 제도 추진 시 적극 협조
18.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중 특히 저소득층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적금 만기해지 시 은행 기본금리(5%수준) 외 경제적 취약자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추가 우대금리(3%) : 기업은행('24.1월), 국민은행('24.6월) ○ 적금 비대면 가입(해지) 은행 확대로 민원 편의성 제고 • 비대면 가입은행 : ('24년) 7개 → ('25.5월) 14개 은행 전체 ○ 병역이행단계별 적금 가입 홍보 및 안내로 가입률 제고 • 병역이행단계별 적금 가입 홍보 - (소집 전) 통지서에 가입 안내문 동봉 - (복무 시작 3일 이내) 가입 알림톡 발송 - (복무기본교육 시) 가입 안내 • 가입률 : ('23년) 86.7% → ('24년) 92.9% → ('25.6월) 93.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병역판정검사 오류 근절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영상판독 관련 합의 시스템 구축('25.2월) • 영상판독에 전담의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합의절차 마련 - (1차) 영상 재판독 요청 - (2차)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의뢰 ○ 신체검사 규칙 질의회시 확인 시스템 구축('25.4월)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각 과별 신체등급 판정 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의회시 팝업 및 링크 제공 ○ 병역판정전담의사 업무처리 매뉴얼 업데이트('25.5월) • 척추골 골절, 고환위축 등 착오 판정 사례 추가 • 영상판독 합의 및 질의회시 등 신규 시스템 활용 방법 상세 안내 ○ AI 영상판독 흉부영상검사 시범 실시 중('25.7월) • 경인청 제2검사장에 최신 X-ray장비 도입으로 흉부촬영에 대한 AI기반 영상판독 시범실시 중 - 감지 항목 : 폐렴, 기흉, 폐섬유화, 폐결절, 흉수 나. 향후 추진계획 ○ 일일 병역판정검사 결과 점검 시스템 구축 ('26년) • 신장·체중 및 병리검사 결과와 신체등급을 대조·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25년말까지 개발, '26년부터 시행 ○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신체등급 판정 고도화('27년)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부령조항 입력 후 각도 등 수치 입력 시 오류인 경우 팝업을 제공하는 시스템 '26년말까지 개발, '27년부터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 대구경북청의 병역판정검사 과실과 사건 은폐 관련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과실과 사건 은폐 관련자 징계 처리 • 병역판정관 : 정직 2월('24.12.30.) • 병역판정보좌관 : 정직 1월('25.1.8.) • 병역판정전담의사 : 견책('25.1.8.) 나. 향후 추진계획 ○ 관련자 처벌 완료 ○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전담의사 포함) 교육 및 제도·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자. 방위사업청(51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방산업체가 수행하는 국방기술개발 협약사업의 규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협약으로 추진 가능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49억원(5.8%) 증가한 13,566억원 반영 완료하였음. ※ 개별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신속시범사업 ○ '26년도 국방기술개발 협약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 예정 ※ '26년 협약으로 추진 가능한 국방기술개발 R&D 정부안 1,034억원(7.6%) 증가 ('26년 14,600억원)
2.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사업 감리계약 체결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청사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24.8월) 후, '24.12월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5.3월 우선시공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음. ○ 향후 신축청사 실시설계 완료('25.9월) 후, 본공사 계약('25.10월)을 거쳐 계획대로 '28.6월 신축청사를 완공하여 전체 이전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방위사업청 조직이 유인체계와 무인체계 사업조직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무인복합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사업조직 간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방사청 조직개편 방향 논의('25. 8. 28.) -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기능 보강과 첨단연구 개발 가속화 등 가능토록 청본부 개편 - 사업본부는 AI, 유무인, 우주 등 사업추진 및 관리 효율성 등 극대화될 수 있게 재설계 개편 ○ 상기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단계적(청본부 '25년內 → 사업본부 '26년 상반기 개편)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마련 중 ○ 조직개편 방향 및 추진 일정 관련 행안부 실무 협의('25. 9. 10.) 나. 향후 추진계획 ○ 청본부 조직개편(안) 작성/제출 : '25. 9월 ○ 사업본부 조직개편(안) 작성/제출 : '26. 1분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국방신속획득 기술연구원 관련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장과 기조실장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방위사업청 자체감사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신속원 종합감사 : '24.10.41.~11.6. • 감사처분 요구('25.1.7.) : 22건 <table><tr><th>계</th><th>징계 및 문책</th><th>시정 요구</th><th>주의 (경고)</th><th>권고</th><th>통보</th></tr><tr><td>22건</td><td>8건</td><td>2건</td><td>4건</td><td>1건</td><td>7건</td></tr></table> •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의('25.3.31.) : 3건 - 재심의 결과 : 기각 ○ 신속원 종합감사결과 제출(→황희 의원실) : '25.4.18.	계	징계 및 문책	시정 요구	주의 (경고)	권고	통보	22건	8건	2건	4건	1건	7건
계	징계 및 문책	시정 요구	주의 (경고)	권고	통보								
22건	8건	2건	4건	1건	7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방위산업정보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기대효과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4년 국정감사 이후 “방위산업정보시스템 소개자료”를 황희 의원실로 송부 완료(24. 10. 4.) *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 기대효과 등 포함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 6월에 방위산업정보시스템을 개시하였고, 향후 고도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
6. KF-21 부품별 및 완제품 국산화율에 관해 현재 달성된 국산화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진행 중이며, 목표 국산화율 달성 예상 • 국산화율은 양산 1호기 기준으로 산정되며, 원가 확정('27년 중반) 이후 정확한 국산화율 확인 가능 ○ 체계개발 계획에 따라 50개 이상 품목을 국산화 진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20개 부품국산화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 중 ○ KF-21 국산화율 및 부품국산화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해 황희 의원실 대면설명 완료(25. 6. 16.) ○ 향후 KF-21 최초양산 중도정산원가 확정 이후 국산화율 검토 예정임. ('27년 중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방산업체는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박사급 등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용지불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일반·방산업체 구분없이 선행연구 자료 제출 업체에 자문비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행연구 관련 자료 제출 업체에 대한 실비 보상방안 구축 및 업체에게 안내하였음. 【국기연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 지침】 · 기업체 책임/부장급 이상 직원 : 30만원/1시간(1일 최대 45만원) · 기업체 임직원 : 20만원/1시간(1일 최대 30만원) • 선행연구 관련 업체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 청취 (한화시스템, '25.3.17.) • 선행연구 자료 제출 보상방안 검토('25. 3월 ~ 6월, 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선행연구 자료 제출 관련 업체 설명회 추진 방안 - 타 기관 사례, 예산 확보 등 협의 • 선행연구 정보요청(RFI) 설명회 개최('25. 8.13.) - 업체 대상 당해연도 선행연구 과제 설명 - RFI 자료제출 업체에 대한 보상방안 안내 ○ 국회 대면설명(임종득·한기호·강대식·부승찬 의원) 완료('25. 6.25 ~ 8.11) ※ 선행연구 업무 효율화 방안(보상방안 포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8. 선행연구 요청항목 대부분이 비밀로 분류된 소요결정 문서로서 요청자와 작성자 간 보안 위배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업체 대상 선행연구 정보요청(RFI, Request for Information) 설명회를 개최('25. 8.13.)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사 적격자만 제한된 장소에 참석하도록 하여 소요관련 요청항목 내용을 안내하는 등 비밀관련 보안 대비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음. ※ 설명 대상 전력명은 유사 무기체계명으로 변경, ROC/소요량 등 비밀은 범위형으로 개략 설명 • 선행연구 자료요청 보안강화 방안 검토('25. 3월 ~ 6월, 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업체대상 선행연구 과제 설명회 추진 방안 - 방첩사 등 관련기관 보안 대책 협의 추진 • 선행연구 정보요청(RFI) 설명회 공고('25. 7.2) -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차 실시('25. 7.10. ~ 8.8.) • 선행연구 정보요청(RFI) 설명회 개최('25. 8.13.) - 당해연도 선행연구 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 비밀항목을 제외한 기술관련 일반내용 ○ 국회 대면설명(임종득·한기호·강대식·부승찬 의원) 완료('25. 6.25 ~ 8.11) ※ 선행연구 업무 효율화 방안(보안강화 방안 포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9. 방산업체 제출자료에 대한 환류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상실할 수 밖에 없음. 선행연구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방산업체와 공유하면 방산업체의 R&D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음. 선행연구 시 기업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환류체계를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법무검토 결과,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거, 국가안보와 공정 입찰수행을 고려시 선행연구 결과의 업체 공유는 제한되나, ○ 선행연구 정보요청(RFI) 설명회 개최('25. 8.13.)를 통해 소요결정 단계부터 기술 현실성이 반영된 산업계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위사업 여건 조성 추진 • 선행연구 관련 업체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 청취 (한화시스템, '25.3.17.) • 선행연구 결과 환류체계 방안 검토('25. 3월 ~ 6월, 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업체대상 선행연구 과제 설명회 추진 - 선행연구 결과 자료제공 범위 등 •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업체 제공 가능 여부 법무검토 결과('25. 5.14.) - 군사기밀보호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해당 • 선행연구 정보요청(RFI) 설명회 개최('25. 8.13.) - 통합소요기획 대상전력 및 RFI 내용 설명 - 기술/설비 투자 등을 위한 개략적 소요정보 공유 ○ 국회 대면설명(임종득·한기호·강대식·부승찬 의원) 완료('25. 6.25 ~ 8.11) ※ 선행연구 업무 효율화 방안(RFI 설명회를 통한 연구내용 환류체계 구축 방안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경우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5. 4월 국무회의 의결 및 8월 과방위 상정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 하반기) 국회 과방위 주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검토 시 국방부와 함께 대응(연내 개정 목표) ○ ('26년 하반기) 국방부장관 주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실시 * 법 개정 6개월 후 시행 예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1. 국가우주개발사업 절차 적용을 위해 다부처 사업일 경우는 방위사업법, 군 단독사업일 경우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국가우주개발사업 절차 적용 근거 명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완료('25.6월 시행)하였고, 군 단독사업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간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노력함. * '25.6월,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실무협의회 시 논의 등 나. 향후 추진계획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협의(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2. AI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국가 차원의 윤리기준을 정립했는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윤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국방부 윤리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4.9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국방부·외교부 공동주관)하여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성격의 문서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후 인공지능 윤리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 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의 윤리적 사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의 윤리적 사용 기준 수립과정에서 관련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책임있는 국방AI 윤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3. 리오셀게 탄소섬유 국산화 사업 관련 방위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조치내용을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진행상황, 조치내용,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부승찬 의원실('24.10.22.) 및 유용원 의원실('25.6.26.) 대면설명 완료 • (진행·조치내용) 국과연 자체감사('23.8월) 후 경찰청 수사 의뢰('23.9월, 수사진행 중) • (재발방지 대책) 국과연 내부교육강화 및 계약상대방의 협력업체 관리의무 강조 등 국과연-업체 간 계약조건 수정 검토 중
14. 무기통계를 국회 등에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회로부터 방산물자 수출(수출국가, 품목 및 금액 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시, 대외무역법 제29조(비밀준수) 및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대면설명 활용 ※ 특히, 수출 사실 공개로 인해 주변국 반발 등 외교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분쟁지역에 대한 수출사실 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 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이해를 구하고, 대면설명을 실시 나.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무기체계 수출허가 통계자료 요청 시, 대외무역법 제29조(비밀 준수)를 준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 ○ 특히, 대면설명을 통해 적극적인 자료 설명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5. 피아식별장치 (IFF-Mode5)의 방산 물자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피아식별장비 방산물자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음('24. 11월) ○ 필요시 정비단계에서 방산물자 지정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 ○ 업체의 방산물자 지정 요청 시 방산물자 지정 검토 개시 예정
16. 심의 보류된 방산물자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피아식별장비 방산물자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음('24. 11월) ○ 필요시 정비단계에서 방산물자 지정 검토 나. 향후 추진계획 ○ 업체의 방산물자 지정 요청 시 방산물자 지정 검토 개시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7. 헬기 비행정보 저장장치 개선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사업으로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우선검토 대상사업 선정 : '24. 7. ○ 사전분석(신속원) : '24. 7. ~ '25. 4분기 •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범위 및 비용 등 검토 ※ 사전분석기관의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여 분석기간을 '25. 4분기까지 연장 나. 향후 추진계획 ○ '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 선정여부 결정(사업추진위원회) : '25. 4분기
18. 무기체계를 기대 수명주기만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품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방산정보시스템의 세부 기능에 대해 강선영 의원실에 대면설명 완료('24. 12. 9.) ○ 방사청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방위산업정보시스템 구축하여 개시 완료('25. 6.) ○ 향후 공급망 조사·분석과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 효과성 제고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9. 현대전에서 대형 공격 헬기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으므로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재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가용재원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하여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대체소요를 합참에서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대체소요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
20. 무기체계 업체선정 시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함.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 향상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제안서 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업체 대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수용도, 공감도 확보 추진 •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 - 과제명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선진화를 위한 연구 - 기간/수행기관 : '25.4~10월 / 안보경영연구원 - 주요내용 : 사업 및 소요 특성에 맞춰 기술중심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등 개선안 제시,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등 • 의견수렴 현황 - (방사청 내부) 제안서 평가 경험이 있는 청 직원 150명 대상 설문 수행('25. 2~3월) - (업체) “정책발전 컨퍼런스” 행사 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25. 7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수행 : '25. 4~10월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 마련 : ~ '25.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4. 1월 FMS 구매를 절충교역 원칙에 포함. ○ 법 시행령 내 FMS 구매시 절충교역 예외조항 삭제를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 소요를 국방부에 제출함(25.8.) ○ 향후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조하겠음
22.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따라 시제기를 포함하여 모든 가치 이전은 분담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분담비율 조정 결과를 관련 문서 및 합의서에 반영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분담금 조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기본합의서 개정을 완료 하였음.(‘25. 6월) • 분담금 조정(1조 6천억 → 6천억) 및 인니로의 가치 이전 규모는 인니 분담금액에 맞춰 축소한다는 내용 포함
23. KF-21 공동개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가 당초 분담금 1조 6천억원 중 6천억원만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감액된 1조원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인도네시아 분담금 조정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업체 간 분담 규모 협의 및 총사업비율 조정하였음(‘25. 5월) • '26년 보라매(R&D) 정부예산안에 인니 분담금 포함한 예산을 반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4. 해안정찰용무인 항공기 사업의 기종결정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제안서 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중으로, 종합평가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국내구매와 국외구매로 쉽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포함하여 검토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수행 : '25. 4~10월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 마련 : ~ '25. 12월
25.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소형 정찰 자폭무인기를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과 협력하여 전방부대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전방부대에 소형정찰드론과 소형자폭드론이 배치 ('25.3월)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사업팀·계약팀)에서 적극 지원함 - 군에서 소형정찰드론과 소형자폭드론의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시 청 사업팀·계약팀에서 지원하였고, 계약(중양조달)은 청 계약팀에서 수행함 나. 향후 추진계획 ○ 군이 신속하게 소형 정찰 및 자폭드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과 협력하여 통합소요 기획·신속소요와 같은 신설 절차를 추진 중 - 소형대인자폭드론 등 소형 정찰/자폭드론 6종에 대한 통합소요기획·신속소요 절차 추진 중('25년 하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6. 국산 엔진은 국방규격 충족으로 2차 양산부터 K2전차에 적용되고 있지만, 국산 변속기는 국방규격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K2전차 4차 양산계획 심의간 국산변속기 적용 우선추진 의결(제154회 방추위, '23.5.25.) ○ K2전차 4차 양산에 국산변속기 적용 의결 (제164회 방추위, '24.10.28.) ○ K2전차 4차 양산용 국산변속기 계약 체결('25.2.3.) 나. 향후 추진계획 ○ 국산변속기 최초생산품 검사 : '26. 5 ~ 10월 ○ 국산변속기 납품 : '26. ~ '2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7. 군수용은 WTO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핵심부품인 FC(flight controller)는 국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드론의 핵심 부품인 FC(flight controller)는 「'25-'29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에 정부정책형 국산화 과제(과제번호:24-1-05-113)로 포함하여 추진 중임. ※ 「'25-'29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는 방위산업발전법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제4호(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구매, 연구개발, 양산), 운영유지 및 수출 등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개발소요를 조사하고 5개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문서임. ※ 정부정책형 과제 : 대외 의존 상황(시장독점, 장남기 등), 수출통제 및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과제임 나. 향후 추진계획 ○ 과제 조사·분석 : ~ '25. 10월 ※ 경제적 타당성 및 예산 효율적 집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추진여부 판단 ○ 과제 확정 : ~ '26. 1 ~ 2월 ○ 과제 공고 : ~ '26. 3 ~ 4월 ○ 과제 착수 : ~ '26. 6월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 K13기관단총 멜빵고리, 소음기, 방열덮개 등 부속품 문제 외 총기와 소음기 결합 제한과 총기내 탄약 폭발사고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업체에 개선안을 제시하여 전량 개선 조치 중이며, ○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 등 관련기관 협조하여 품질관리 진행 중 ○ 허영 의원실 대면설명 완료('25.2.28.) 나. 향후 추진계획 ○ K13기관단총 전량 개선 : '25년 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9. 신형 화생방보호의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중단원인) 화생방보호의 II 사업은 '19년 운용 시험평가 과정에서 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방호성능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업체주관으로 해외 기술협력생산을 고려하였으나, 적합한 협력기업이 없어 중단되었음. ○ (재발방지 대책) 현재, 그간 국내 기술수준이 향상되었기에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국과연 주관 국내 독자개발로 탐색개발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24.5월 방추위를 통해 사업추진전략을 수정하여 추진 중임. 나. 향후 추진계획 ○ 현재, 화생방보호의 II 사업은 KIDA를 통해 사업타당성재조사('25.1~8.)를 수행한 결과,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26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노력 중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0. GOP과학화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사업 시험평가 단계에서 포복/위장 상태로 접근하거나 철책 전방에서 이상 행위를 감지하는 사전감지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소요문서 기반으로 제안요청서 상 취약지역에 대한 감지기능(사전감지)을 포함하였으며, 구매 시험평가계획 작성간 구체화 - 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 '25. 6. 27. - 탐지능력① 근거리카메라(주, 야간) 및 중거리카메라(주, 야간) 탐지능력 실물평가 * 다양한 자세(서있는 자세, 웅크린 자세, 포복 등), 비무장, 전투복 착용 등 시험평가 ○ 구매시험평가 : 7월 ~ 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1.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방탄복에 대응하고 개인화기까지 K-방산 수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6.8mm 소총 개발을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성능이 강화된 방탄복 대응 및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5.56mm 신형 소총 및 탄약 사업 진행 중 ○ 6.8mm 소총은 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 예정
32. 운용부대 실사격에서 탄약이 약실 내부에서 폭발했던 K13기관단총의 결함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업체에 개선안 제시하여 및 전량 개선 조치 중이며, ○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 등 관련기관 협조 하 품질관리 진행 중 ○ 추미애 의원실 대면설명 완료('25.3.18.) 나. 향후 추진계획 ○ K13기관단총 전량 개선 : '25년 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3. 국방R&D 평가 구조를 도전적 과제 중심으로 하여 실패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지 않는 등 R&D를 민간에 널리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4.1월)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24.9월)을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연구개발 과제 평가 시 결과와 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나. 향후 추진계획 ○ ‘25.12월 내 협약사업의 성실수행 인정 여부와 페널티에 대해 심의하는 「협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도 제정 예정 ※ 성실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액 감면 가능
34. 피복 관련 원단 바뀌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13곳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25.9.2.) • 감사대상 기관 : 청,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감사청구 사항 - 육군 운동복 제조·납품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행위 등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청구 ※ ‘21년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은 15개 업체가 제조·납품한 육군 운동복을 검사(하자판정) 나. 향후 추진계획 ○ 추가자료 제출 등 감사원 요청 사항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5. FMS로 도입되는 사업에서 가격대가 상승하는 사업들이 있으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FMS 방식을 통한 경제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서 미 정부 주도의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FMS와 상업구매간 경쟁 입찰을 통해 협상력 강화 추진 중 ○ 관련 정책용역 수행 추진 중(~'26.2월)이며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선 추진 예정 ○ (추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20개 품목의 기술사용료*(8%) 면제 추진 중 *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 업체에서 생산,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용역 수행 (~ '26. 2월) ○ 제도개선 추진 (~ '26. 3월) ○ (추가) 기술사용료 면제 추진 (~ '25. 11월)
36. 해병대상륙돌격장갑차 시험평가 도중 침수되어 연구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사업을 빠르게 재개해 해병대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해경수사 및 국과연 기술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특정하여, 설계 보강, 외부 통제 방안, 무인조종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24. 10월) ○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하여 해상시험 등 잔여과업 수행 후 안정적으로 탐색개발 사업 종료('25. 6월) 나. 향후 추진계획 ○ 중기전환 소요결정(합참) : ~ '25. 11월 예정 ○ 체계개발 착수 : '26년 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7. 잠수함구조합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관도급 분류시 장비의 특성 및 체계통합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잠수함구조합(ASR)-II : 소요군에 함 인도('24.11.1.) 완료, 추가 조치사항 없음 ○ 잠수함구조합(ASR)-II Batch-II : 사업 추진 간, 유의하여 추진토록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전파 ※ 상륙함사업팀-1590호('25. 4.23.) 202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관련 관도급 분류 시 유의사항 전파
38.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를 A방산업체가 개발했는데 관세청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음. 이는 방위사업청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무인기사업팀은 지속적인 자료요구 및 검증을 통하여 기종결정 업체가 중국산 기체프레임을 들여와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기종결정을 취소하였고, 업체에 통보하였음('25.1월) ○ 향후, 업체의 생산능력 및 국산부품 사용 내역 등 확인을 위해 제안서평가 전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며, ○ 핵심부품은 국산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필요시 추가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여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대면설명 : '25. 4. 23(수) / 김병주 의원실 나. 향후 추진계획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25. 10 ~ 12월 ○ 구매시험평가 : '26. 2 ~ '26. 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9.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제도 운영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 후 납품까지 해당 품목 보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개선방안 도출(안) 마련 • DQMS 인증 취득 의무화 - 장병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체 대상 DQMS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여 아리셀 사건과 같은 문제 발생 예방 ○ 개선방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기간 : '25. 7. ~ 12.(5개월) ※ 계약체결 완료(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0월 중간평가 예정 • 국내외 인증 의무화 성공 사례 조사 •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인증 의무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 인증 의무화 대상 업체 식별 기준 연구 •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분석 및 개정(안) 도출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용역 결과 검토 및 세부 실행안 도출 • 인증 의무화 기대효과 분석 • 인증 의무화 추진 타당성 검토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관련 기관 및 업체 대상 개선 방안 전파 ○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추진 • 연구용역 완료 '25. 12., 개정 추진 '26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0.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제도를 통해 업체가 받는 혜택이 경쟁입찰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 추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도 시행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개선방안 도출(안) 마련 • DQMS 인증 인센티브 강화 - DQMS 인증업체가 참여하는 국가사업(무기체계 생산, 국산화, 수출지원사업 등)을 식별하여 DQMS 인증업체 가점 적용가능성 검토 ○ 개선방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제안요청서 작성(완료) - 개선방안 실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분석 및 개정(안) 도출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용역 수행(진행중) •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및 실행계획 도출 - 기간 : '25. 7. ~ 12.(5개월) ※ 계약체결 완료(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0월 중간평가 예정 ○ 정책연구 용역 결과 검토 및 적용
41. 방산수출 시 중소기업 역할 축소, 시험평가 등 비용부담, GVC 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K-방산 성장 지속을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수립*('25.1.6) * 산업구조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연간 지원 계획 ○ 안규백, 부승찬 의원실 대면 보고 완료('25.1.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 미국의 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로 인해 K-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韓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美 CMMC와 인증 상호인정 협의 추진('25.7월) 하려 하였으나, 美 CMMC 제도 그대로 수용 입장 고수로 무산 ○ 美 CMMC 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기품원 CMMC Lv. 1~2 컨설팅('25.2월 ~ 10월) ○ 관련 제도 및 지침 개정 예정(~'25.4분기) ○ CMMC 심사기관을 국내 도입 예정(~'26.4분기)
43. 최근 5년간 절충교역 미이행으로 현금 몰수 후 해소된 금액(소멸된 가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외업체의 합의기간 내 절충교역 미이행시, 이행기간 연장 및 합의내용 변경을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행토록 조치 ○ 향후 국외업체가 청과 합의된 내용을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4.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마련하여 방산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이 다양한 절충교역 상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방산중소기업 부품제작 수출 중심의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추진 * '24년 이후 중소기업 부품 수출 중심의 합의각서 체결 추진 실적 <table><tr><th>사업명</th><th>수출제품</th><th>중소기업명</th><th>합의각서 체결</th></tr><tr><td>중거리공대공미사일</td><td>항재밍 수신기 등</td><td>마이크로인피니티 등 4개</td><td>24.10.</td></tr><tr><td>소해헬기 레이저기뢰 탐색장비</td><td>통합시험스테이션 개발 등</td><td>제노코</td><td>25.01.</td></tr><tr><td>공지통신 무전기 성능개량</td><td>감항인증 입증자료 국산화</td><td>한국감항기술</td><td>24.12.</td></tr><tr><td>광개토-III 가스터빈</td><td>발전소 수냉식 콘덴서</td><td>에너지엔</td><td>25.02.</td></tr><tr><td>함탐재정찰용 UAV (지상통제소)</td><td>Laptop computer 등 8종</td><td>UI 헬리콥터</td><td>25.03.</td></tr></table> ○ 향후 절충교역을 활용한 방산중소기업 부품제작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 노력하겠습니다 가. 시정 · 처리결과 ○ 청입장 : FMS 사업에서의 절충교역 추진 필요 - '24. 1월 법 개정을 통하여 FMS 구매를 절충교역 원칙에 포함. - 법 시행령 내 FMS 구매시 절충교역 예외 조항 삭제 진행중 ○ 개선방안 - 국외구매사업(FMS, 상업구매)을 위한 선행연구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근거한 절충교역 추진 원칙 강화 나. 향후 추진계획 ○ 연말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원실 대면보고 추진	사업명	수출제품	중소기업명	합의각서 체결	중거리공대공미사일	항재밍 수신기 등	마이크로인피니티 등 4개	24.10.	소해헬기 레이저기뢰 탐색장비	통합시험스테이션 개발 등	제노코	25.01.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개량	감항인증 입증자료 국산화	한국감항기술	24.12.	광개토-III 가스터빈	발전소 수냉식 콘덴서	에너지엔	25.02.	함탐재정찰용 UAV (지상통제소)	Laptop computer 등 8종	UI 헬리콥터	25.03.
사업명	수출제품	중소기업명	합의각서 체결																						
중거리공대공미사일	항재밍 수신기 등	마이크로인피니티 등 4개	24.10.																						
소해헬기 레이저기뢰 탐색장비	통합시험스테이션 개발 등	제노코	25.01.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개량	감항인증 입증자료 국산화	한국감항기술	24.12.																						
광개토-III 가스터빈	발전소 수냉식 콘덴서	에너지엔	25.02.																						
함탐재정찰용 UAV (지상통제소)	Laptop computer 등 8종	UI 헬리콥터	25.03.																						
45. 대외군사판매 (FMS) 사업의 절충교역 적극 추진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6. 방산 수출허가 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기술 난이도도 높아졌으므로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보강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전략물자 판정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25.7.1. 부로 전략물자 전문판정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이관하겠음 • 전문판정 이관관련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완료('24.10.8)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기술심사과 수출허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 전문교육 확대, 전문직위 지정 및 인력 충원 추진 • 현 공석인 국제수출통제담당 전문직위 자리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임용 추진 예정 • 행정안전부 및 인사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심사 인력 증원 추진 예정 ※ 행안부에 정기직제(수출허가 심사 인력 보강) 요구 ('25.4.17)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25.하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7. 방산 관련 해킹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방산기술보호에 취약하므로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산업부 등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방산기술 보호역량 평가 모델 구축 완료('24.10.31.) • 방산기술보호센터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 시 기술보호수준 지표(등급별 10점 구간, 5단계 (우수~위험)) 활용 ○ 관련 내용 의원실 보고 완료.('24.11.13.) ○ 향후 기술보호수준 지표를 활용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 관련 업체 대한 기술보호 지원 정책 수립 및 지원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8. 방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5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도 대비 0.9억원 증액한 8.02억원으로 편성함. ○ '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개社에 지원 가능한 규모인 13.2억원으로 부처안 제출하였으나, 예산 제한으로 정부안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 제출
49. 안티탐퍼링 (anti-tampering)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수출된 국내 무기체계를 외국이 역설계하여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정책연구용역 진행 ('25.5월~10월) •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보호 수준, 방법 등 안티탐퍼링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안티탐퍼링 전담조직 구성 등 방안 도출 목표 ○ 안티탐퍼링 기초연구 과제 추진 중('22년~'26년) • 무기체계 안티탐퍼링 적용 기술(국과연) • 무기체계 심층방어 안티탐퍼링 기술(국기연) 나. 향후 추진계획 ○ 안티탐퍼링 응용연구 과제 추진 ('26년~) • 해상 무인플랫폼 안티탐퍼링 통합 기술(국과연) 연구 개발 추진으로 다계층 안티탐퍼링 대응 기술, 암호응용 기술, 무기체계 통합 개발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0. 수출형 FA-50 국산레이다 체계 적합성 검증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기연↔참여기업 간 협약 체결('25.2.20.) 후 과제 정상 수행 중에 있음 • 과제기간 : '25.2.21.~'28.6.20. ○ 착수회의 개최('25. 3. 12.) ○ SRR회의 개최('25. 5. 9.) ○ PDR회의 개최('25. 7. 3.) 나. 향후 추진계획 ○ CDR회의 개최('26.2월) 예정이며,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이 적극적인 과제관리 추진 예정임
51.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을 심사할 경우, 우리 군의 포탄 비축물량, 외교관계 등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신청 접수 시 국가 안보 및 국방외교 등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출허가 심사 처리함 ○ 향후에도 주요 무기체계 수출 신청 접수시, 관련기관의 검토를 통해 국가안보 및 국방 외교에 끼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출허가 처리 추진 예정임 ※ 특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지역 수출 심사 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관계 및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차. 국방과학연구소(8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안성 등으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의 연구개발에 치중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시 경제성이 없거나, 비닉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과연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과연 주관으로 결정된 사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참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③ 제2항의 국내연구개발사업은 (중략)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경제성이 없거나 비닉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나.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방과학연구소는 보안성 등으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의 연구개발에 지속 집중하겠음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AI데이터 보안 정책과 체계를 구축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사이버공격·해킹 대응 및 보안관제 업무 수행 중 • 정보화기술실 정보보호팀 11명(11명 편제)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중 •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다수의 사이버보안 체계 운용 및 보안관제 수행 중 ○ 내부자료 유출방지 업무 수행 • DRM 암호해제, 보안저장매체 파일복사 현황 등 내부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 수행 중 나. 향후 추진계획 ○ 사이버보안 체계 노후화 교체 및 개선 추진 중 • 안정적인 사이버보안 체계 운용을 위한 PC보안취약점점검시스템 등 노후화 교체 및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신규도입 추진 중 (‘25.3월 ~ 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국방신속획득기술 연구원장이 학회장을 겸직하는 학회에 많은 직원이 참석하고 1,6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방사청 종합감사 실시 및 처분요구서 통보("25.1.7.) ○ 국방부 인사명령 시달("25.4.21.) • 국방부 인사명령에 따라 보직해임("25.4.23.부) ○ 징계위원회 실시("25.6.5.) •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직권면직 처분 통지("25.6.30.부) ○ 직권면직 완료("25.6.30.부) 나. 향후 추진계획 ○ 방사청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징계 완료
4. 2022년부터 직원 상여금 지급 사례가 없는데, 우수업무 성과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24년도 우수업무포상금(한시적) 7.2억원 편성 및 집행 ○ '25년도 우수업무포상금(상시) 7.2억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25년 예산 미반영 ○ '26년도 우수업무포상금(상시) 7.2억원 편성 재요구 나. 향후 추진계획 ○ 부처안(방위사업청) 및 정부안(기획재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에게도 보국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1안 : 보국훈장 수여 건의 • 상훈법 상 퇴직포상 근거 입법 추진 건의 ○ 2안 : 연구소 훈장 신설 및 수여 건의 ※ 국방과학보국훈장(가칭) 입법 추진 건의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의안번호: 2211534 • 발의연월일: 2025.7.17. • 개정발의내용: 보국훈장 수여대상자를 ‘국가안전보장’에서 ‘군인·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국가안전보장’으로 확대 나. 향후 추진계획 ○ 관련기관 사전협조 추진 예정 • 국방부, 방사청, 행안부 등
6.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장애인 채용 제도 개선방안 추진 예정 • 장애인 채용 시 가점 부여(완료) • 장애인 채용 가능 직군 발굴(예정) ※ 연구소 특성 상 장기출장, 위험 업무 고려 필요 나.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채용 홍보 확대 • 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수출형 FA-50 국산레이다 체계 적합성 검증 과제와 유무인전투기 복합체계용 무인전투기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개발 과제간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플랫폼이 상이하여 과제 간 중복성 없음 ○ 유무인전투기복합체계용 무인전투기 AESA 과제 정상 수행 중('24.1월~'26.11월)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서 정밀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무인기 외형분석 결과 보고 완료 • 부승찬 의원실('25.4.28), 백선희 의원실('25.5.19) 등 보고 ※ 전체적인 형상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北 매체 보도자료만으로는 상세 분석이 제한됨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카-①. 국방기술품질원(5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방산기술 보호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방산기술보호센터 기능 및 역할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공포(개정 '24.12. 3., 시행 '25. 6. 4.)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임무를 명시한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신설 • 동법 시행령 개정('25.5.27.) ○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서 발급('25.6.30.)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용역에 낙찰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서면답변 제출완료('24.10.29.) • 관련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 대면보고 ○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내용 통지(접수) •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제3과-38('25.02.21.) - 기품원 권고사항(후속조치 요구사항) 없음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국방품질 경영체제(DQMS) 를 제대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요구조건에 안전 요구사항 식별 - 요구되는 프로세스 운용 환경(7.1.4.) 등 3개 항목에 안전 관련 요구사항 기반영 완료 ○ 아리셀 사고 예방과 DQMS 인증 요구사항 관련성 비교 - 사고 원인으로 분석 항목별 DQMS 요구사항 관련성 확인 * 사고 원인분석 : 검사용 시료 바꿔치기, 비 숙련공 투입, 무리한 제조공정 나. 향후 추진계획 ○ 정책연구 용역 수행(진행중) •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및 실행계획 도출 - 기간 : ‘25. 7. ~ 12.(5개월) ※ 계약체결 완료(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0월 중간평가 예정 ○ 정책연구 용역 결과 검토 및 적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국방기술 품질원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 시정·처리결과 ○ 지속적인 장애인 적합 분야 확인 및 고용 추진 • '24년 장애인 신규채용 결과 : 3명 • '24년 고용 현황 : 상시근로자 713명 중 13명 (1.8%) ○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 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 음악, 콘서트, 무용 등 인식개선 주제 공연과 교육 병행(25.2분기)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직무 추가 확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컨설팅을 통한 직무 추가('25.7) • 정규직 연구인력 외에 휴직 대체 인력 등 계약직 채용 시 장애인 직무 추가 반영 ('25 상반기)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국방기술 품질원은 무기체계의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야전부대에 대한 정기적 사후운영평가 방안을 검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정기적/정례적 사후운영평가 제도 시행 • 야전품질평가회 운영 - 초도배치 후 운용부대에서 불만 제기 군수품에 대한 품질정보 수집 및 평가 절차 추가 - 대상/주기 : 초도배치 후 운용부대에서 불만 제기 군수품/매년 • 야전품질패트롤 시행 - 납품 후 시험기관의 분석 등을 통해 품질요구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 및 절차 추가 - 대상/주기 : 소요군 사용자불만 다발 품목 / 연중 수시 • 품질개선협의체 운영 - 군수품 야전 품질정보를 군과 공유/분석하여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하는 품질개선 활동 반영 - 대상/주기 : 군수품 야전 품질정보 분석결과 선정 / 매년 ○ 기품원 대군지원업무규정 개정 반영('25.8.) • 정기적 사후운영평가 방안을 위한 세부조항 마련 나.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카-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2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국방기술진흥 연구소는 선행연구, 핵심기술 기획 및 관리, 부품국산화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연구관리 전담부서 운영 • 사업/예산(연구개발비) 관리 전담 수행/연중 수시 • 소관사업에 대한 R&D 심사분석 회의 실시/매 분기 • 연구개발비 상시 모니터링 및 집행분석 수행/연중 수시 ○ 과제관리시스템 구축('24년)/운영 •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협약 등) 수행/연중 수시 • 연구개발비 모니터링, 이슈사항 분석 등 수행/연중 수시 나. 향후 추진계획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실시(~'25. 12.) • 투자 대비 편익, 정책효과, 우수 성공 사례 발굴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국방기술진흥 연구소는 그 기능의 특성상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 등이 요구되므로 계약직 비중을 줄이고 정규인력을 확보하는 등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것	가. 시정 · 처리결과 ○ 정규인력 확보 추진 • ‘26년 정규직 인력 23명 증원 - 증원소요 128명 발굴 - 방위사업청 검토를 통해 65명 증원 요구 - 기재부 심의결과 23명 증원 ○ 업무 전문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 •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정규직과 계약직이 팀을 이루어 R&D 과제관리 수행 중 • 중점과제에 대한 사전/사후 기술검토 수행 및 Case Study 정례화 - 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한 단기간 업무 전문성 확보 나. 향후 추진계획 ○ 정규인력 확보 지속 추진 • 방사청, 국회 등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기간제 직위의 정규직 직위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